

UNINOMIC REVIEW

VOL.2 No. 4

중남미 & 한국의 생존전략

중남미의 디지털 경제, 위기와 기회
이시은

21세기 지속가능한 한-중남미 관계의 비전
곽재성

멕시코의 경제개혁과 한국의 협력방안
문남권

한-카리브 기후외교 협력방안 및 미래 이행 방안 연구
하상섭

중미 다양한 증위이야기 및 우리나라와 관계
이태혁

베네수엘라 민주주의의 위기 그리고 한국과의 관계
김기현

콜롬비아 농촌개발과 한국의 농업협력강화에 대한 소
고
차경미

안데스3국과 한국의 협력방안
김철희

한국과 브라질은 전략적 동반자가 되어야 한다
이영선

칠레 신재생에너지 산업동향과 협력방안
조윤후

세
종
연
구
원

UNINOMIC REVIEW

Vol.2 No.4

세
종
연
구
원

UNINOMIC REVIEW

Vol.2 No.4

목 차

중남미의 디지털 경제, 위기와 기회 | 이시은

중남미 정치 | 광재성

멕시코의 경제개혁과 한국의 협력방안 | 문남권

한-카리브 기후외교 협력 아젠다 발굴과 미래 이행 방안 연구 | 하상섭

중미의 다양한 층위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나라와의 관계 | 이태혁

베네수엘라 민주주의 위기 그리고 한국과의 관계 | 김기현

콜롬비아의 농촌개발과 한국의 농업협력강화에 대한 소고 | 차경미

안데스 3국과 한국의 협력방안 | 김철희

한국과 브라질은 전략적 동반자가 되어야 한다 | 이영선

칠레 신재생에너지 산업 동향과 협력 방안 | 조윤후

중남미의 디지털 경제, 위기와 기회

이시은*

1. 들어가며

ICT 기술과 경제의 융합을 의미하는 ‘디지털 경제’는 90년대 전자상거래를 시작으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더 다양하고 복잡한 양상을 띠기 시작하였다.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블록체인, 빅데이터 등, 기술의 발전이 더해감에 따라 우리가 얻는 편의와 함께 새로운 위험의 요소들도 생겨나고 있다. 중남미 지역에서 역시 ‘디지털 경제’는 새로운 개념이 아니다. 중남미 각국 정부는 디지털 경제의 발전에 따른 기회와 위기 요인을 인식하고 공공부문의 주도하에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기업의 비중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중남미 지역에서 국가 차원 대응의 중요성은 지속해서 강조되고 있다.

디지털 경제의 확대로 중남미 국가들은 새로운 형태의 사회 조직과 경제모델, 생산 모델 적용의 필요성에 직면하게 되었다. 새로운 산업과 경제 행위자가 등장하며, 또 전에 없던 사회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는 곧 국가 간의 협력 방식도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따라서 중남미 국가들의 디지털 경제가 발전하는 데 있어 위기와 기회의 요소가 어떠한지 객관적 지표들을 통해 각각적으로 살펴보고, 한국과의 협력 방안에 대해 새로이 고민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중남미 지역의 디지털 경제 발전과정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의미 있는 변화들과 논의되고 있는 사안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前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전문연구원.
미국 Texas A&M University 박사과정

2. 중남미 디지털 경제의 산업별 기회 요소

디지털화에 따른 국가 차원의 직접적 경제적 효과로 소득과 고용창출을 들 수 있다. 또한, 국가의 혁신과 양의 상관관계를 갖기 때문에 국가의 혁신수준도 증가한다. 중남미 지역의 광대역 서비스 보급률이 10% 높아지면 역내 GDP가 평균 3.2% 증가하고, 생산성은 2.6%p 증가할 것이라는 미주개발은행(IDB)의 연구 결과가 있다(Garía Zaballo y López-Rivas, 2012). 아래에서는 이러한 거시적인 경제적 영향 이외에 디지털 경제의 심화가 중남미 경제의 산업별로 가져올 기회 요소들에 대해 살펴본다.

1) 금융포용 확대

중남미 지역에서 디지털 경제의 침투로 가장 큰 변화를 볼 것이라 기대되는 분야는 금융포용부문이다. 이러한 금융포용은 물론 중남미 지역의 금융산업 규모 확대도 가져오지만, 금융 제도의 혜택에서 소외되어왔던 소상공인과 신용도가 부족한 개인들에게 더 넓은 폭의 재무관리를 허용함으로써 삶의 질 개선을 가져올 것이다. 중남미 지역은 금융 제도 안에 수용되어 그 혜택을 누리는 인구 비중이 낮은 편이다. 중남미의 15세 이상 인구 2억 2천만 명 중에 약 47%는 은행 계좌가 없다(OECD는 8%). 이 중에서도 아이티, 온두라스, 니카라과, 페루는 은행 계좌를 보유한 성인의 비율이 30%도 채 되지 않다.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의 보급률 역시 OECD 국가 평균과 비교하면 30~37%p 떨어진다. 이는 비슷한 소득 군의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수년간 그 격차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방증한다. 중남미 지역의 낮은 금융포용률의 배경에는 제도적 결함과 금융시장의 경쟁 부족이라는 문제가 있다. 은행 계좌를 개설할 만한 유인이 없고 금융기업 간의 경쟁 부족에 따른 역선택 문제가 간접적인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예를 들어 아르헨티나의 경우, 현지에서 통장을 개설해서 유지하는 데에만 매달 약 18달러가 소요된다(BBVA). 이렇게 계좌를 유지하고 이체/인출 비용이 소득수준에 비해 크다는 점은 일부 소득계층에게 있어 계좌를 유지할 유인을 없앤다.

한편 중남미 지역은 높은 핸드폰 보급률(117%)이 매우 특징적이다. 이를 활용하여, 은행 계좌와 비교하면 규정이나 기술장벽이 더 낮은 모바일 머니 서비스 사용 기회가 클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중남미 모바일 머니 서비스 보급률은

성인 인구의 1.86%에 불과하며 (World Bank, 2015a) 시장이 성숙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바일 머니를 활용하여 모바일 저축은행, 소액대출(microcredit), 소액보험(microseguros)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향후 활용 잠재력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남미 지역에서 이미 높은 모바일 머니 보급률을 자랑하는 국가는 칠레, 아이티, 온두라스, 멕시코가 있는데, 이러한 높은 보급률에는 국가의 정책과 규제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2013년부터 페루, 파라과이, 우루과이, 콜롬비아 등의 중남미 국가들은 비은행 금융회사에서 모바일 머니를 발행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였다. 페루와 콜롬비아는 소비자 펀드의 2%를 건전성 요건으로서 지정하거나, 회사 설립을 위해 필요한 최소 자금요건을 도입하는 등 모바일 금융 관련 규제를 도입하였다. 실제로, 중남미 지역 내에서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정부의 관련 규제가 있는 국가들(콜롬비아, 멕시코, 페루)의 경우 서비스 사용률이 12~15%로 더 높아지는 결과를 가져왔다(Economist Intelligence Unit, 2014).

2) 생산성 증가: 농업 및 제조업

일차 산업의 비중이 큰 중남미 국가들의 경제 구조적 특성상, 디지털화에 따른 생산성 향상은 다양한 산업에 긍정적 파급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먼저 노동 및 자본 요소 생산성이 선진국 수준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농업부문에 대한 변화의 기대가 크다. 농업은 중남미의 고용인구 19%, GDP의 9%를 담당하는 주요한 산업 분야로 중미나 볼리비아, 가이아나, 아이티, 파라과이 경제에서 특히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요한 분야이다. 그러나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과는 달리, 1인당 부가가치 창출 규모는 OECD의 1/6수준에 불과하다. 볼리비아, 파라과이, 페루, 과테말라, 온두라스의 경우 낮은 노동 생산성이 문제이다. 또한, 중남미 지역은 농업용수 부족을 지속해서 경험하고 있다. 중남미 농촌 지역의 인구 14%가 양질의 물에 대한 접근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아이티, 니카라과, 페루의 경우 이 비중은 30%까지 증가한다.

제조업 역시 중남미 지역의 경제구조에서 낮은 노동 생산성을 보이는 산업 분야이다. 제조업 부문이 중남미 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13% 정도이다. 중미나 페루, 수리남의 경우 이를 웃돈다. 볼리비아, 파라과이는 특히 더 제조업 생산성이

낮으며, 미국 시장을 겨냥한 제조업체들이 현지 생산기지로 삼고 있는 멕시코의 경우 그나마 1인당 생산하는 부가가치는 높은 편이다.

IoT와 같은 IT 기술을 통해 농업과 제조업 분야의 노동 생산성과 자본 활용도를 높여줄 것이다. 비료와 같은 농사를 위해 필요한 요소들을 사용하는데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며, 이외에도 기후에 관한 정보, 시장가격, 위험요소, 기계 등 농업과 관련한 정보를 받을 수 있다. 더불어,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 가능성은 효율적 자금 운용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제조업의 경우 산업의 범위가 넓어 디지털화나 혁신이 어느 정도 생산성을 증진할지는 상품마다 그 스펙트럼이 다양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새로운 기술로 인해 공정을 자동화하거나 IoT의 활용을 통해 중남미 지역의 제조업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3)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 관광

중남미 지역 국가들은 풍부하고 다양한 역사와 문화, 그리고 광대한 자연의 유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관광산업이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5% 정도이다. 카리브 국가인 바하마, 바베이도스, 벨리즈의 경우 10%를 웃돈다. 그 가능성만을 놓고 본다면 향후 더 큰 경제적 가치가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중남미 관광산업의 노동자 1인당 부가가치는 현재 OECD의 1/4수준에 불과하다. 관광부문 디지털화에 따른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은 여행 정보제공, 치안서비스 역량 강화, 여행지 홍보를 들 수 있다. 관광객들의 여행 편리를 제공할 수 있는 앱이 대표적인데, 여행지 관련 정보제공, 여행 허가 절차 전자화, 교통편의 정보제공 등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중남미 지역의 범죄율이 높고, 이로 인해 관광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IT 기술을 통해 범죄율 감소에 이바지하고 관광객에게 안전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서비스가 특히 필요한 국가로 아이티, 자메이카, 트리니다드 토바고와 같은 카리브 국가들,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베네수엘라를 들 수 있다.

4) 삶의 질 개선: 의료 및 교육

디지털 기술의 결합을 통해 의료 및 교육 서비스 개선에 따른 삶의 질 증진이 기대된다. 먼저 중남미의 보건 의료 환경은 여전히 OECD보다 열악한 수준이다. 특히 모자 보건환경이 열악하다. HIV나 말라리아, 심장 동맥질환, 암, 당뇨, 호흡기질환 등으로

인한 조기 사망확률이 평균 16.45% 정도로 높은 편이다(OECD 13%). 이러한 지수들을 볼 때 모자보건과 관련한 영양, 질병, 위험성 등 의료정보 제공 서비스 디지털화 부문의 성장 잠재력을 엿볼 수 있다. 보건 서비스 디지털화, 보건 관련 앱 확대사용 등 다양한 서비스 디지털화의 기회가 있는 분야이다. 또한, 중남미 지역은 의료 시설(병원, 침실 등)이 역부족한 상황이다. 그러나 광대역 사용으로 인해 원격으로 질병 예방, 진단, 만성질환 관리, 사후 추적 등이 쉬워짐에 따라 시설 부족의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전문 의료진들 간 네트워킹, 관련 의료정보에 대한 접근 플랫폼 형성은 의사들의 진료를 쉽게 할 것이라 기대된다.

한편, 중남미 지역의 교육시스템의 보급률은 여전히 상대적 격차가 크며, 초, 중등 교육에서 고등교육으로 갈수록 입학률이 하락한다는 특징이 있다. 중앙아메리카, 파라과이, 도미니카 공화국, 수리남에서 이러한 특징이 두드러진다. 과학, 공학을 공부하는 인구 비중은 5.62%에 불과(OECD 9.68%)하다. 중남미 국가들은 교육과 관련하여 ICT 기술을 활용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공대생 교육 확대 등 디지털 경제에 대비하고 있다. 광대역과 디지털화를 통해 전 국민에 대한 교육부문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중남미 디지털 경제의 위기 요소

중남미 지역의 디지털 경제 희망을 논하기 전에 항상 장애 요인이 되는 것은 통신 인프라의 부족이다. 인터넷 연결망은 디지털 경제가 발전하기 위한 선행조건인데 중남미 지역은 인터넷 기반만을 놓고 보았을 때 OECD 회원국들에 비교하면 여전히 많이 뒤진다. IDB에서 발표한 광대역 개발지수를 살펴보면 중남미 국가 중에서도 칠레나 바베이도스, 브라질, 파나마 같이 광대역 인프라가 발전한 국가군도 있으나, 아이티나 수리남처럼 수년째 제자리걸음을 하는 국가들도 있다. 표 1을 보면 인터넷을 사용하는 인구의 비중은 OECD 평균 81%지만, 중남미 국가는 46% 정도로 매우 낮다(IDB 2017). 인터넷 연결속도 역시 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현저히 떨어진다. 또한, 중남미 인구의 10%는 여전히 이동통신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마저도 소득수준이 낮은 아이티나 온두라스, 베네수엘라의 경우, 인구의 75%가 3G 혹은 그 이상의 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GSMA, 2015b). SIM카드 보급률은

OECD와 유사한 수준을 보이나, 광대역 모바일을 사용하는 인구 비율을 살펴보면 중남미 지역은 22%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휴대폰 인터넷 연결속도의 질도 매우 낮은 상황이다.

<표 1-1> OECD와 중남미 국가들의 ICT 활용 현황 비교'

ICT 활용 관련 항목	OECD	중남미
인터넷 사용자 (전체 인구 대비 %)	81%	46%
인터넷 보급률(가구 비율)	81%	33%
인터넷 연결속도	13.15Mbps	4.64Mbps
SIM카드 보급률(전체 인구 대비 %)	121%	112%
광대역 모바일 사용 비율(전체 인구 대비 %)	68%	22%
휴대폰 인터넷 연결속도	10.84Mbps	3.87Mbps

자료: IDB(2017)

최근 OECD에서는 중남미의 통신 인프라 투자의 부족 요인을 분석하는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OECD, 2016). 먼저 중남미의 지형적 특징에서 기인한 인프라 투자 유인 부족을 꼽고 있다. 중남미 지역의 낮은 인구밀도, 그리고 일부 국가의 경우 넓은 정글 면적,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지역 존재 등이 이러한 물리적 인프라 설비 투자 비용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역내 통신 시장의 경쟁구조 약화, 실제 기술과 괴리감이 있는 규제, 소득수준 대비 높은 비용도 인프라 투자 부족의 요인으로 설명되고 있다. 주요 측면에서 ICT 기술을 활용하는 기업들이 부족하다는 점, 정부의 낮은 투명성과 효율성, 신뢰도 역시 통신 인프라 투자 부족에 이바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관련 산업의 인적자원 부족 역시 중남미 지역 디지털 경제 발전의 위기 요소로 작용한다. 중남미 지역은 높은 수준의 기술을 갖춘 엔지니어뿐만 아니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전반적인 국민의 디지털 역량도 부족하다. 중남미개발은행(CAF)과 UN 중남미 경제위원회(ECLAC)에서는 최근, 중남미 지역이 경제 규모에 대비해 엔지니어 수가 부족하며, 관련 분야 학생 수를 14만~21만 명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실제 조사결과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멕시코, 페루, 베네수엘라 기업의 27%가 통신부문 전문가를 고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다. 물론 디지털 산업 발전을 위해 엔지니어급 지식을 가진 인적자원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사실상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지식을 가진 정도의 인력이 필요한데, 디지털 플랫폼 관련한 학위가 역내 대다수 국가에 존

* Economía Digital en América Latina y el Caribe: Situación Actual y Recomendaciones.

재하지 않는다.

디지털 경제 발전을 위한 인적자원의 부족 문제는 지역의 관련 교육에 대한 중장기적 투자 부족을 근본적 이유로 들 수 있다. 먼저 중남미 지역은 고등교육 수준에서 공대생의 비중이 작다. 북미, 서유럽 지역의 엔지니어 졸업생 비율이 전체인구의 10%에 육박할 때 중남미 지역은 3%를 밑돈다. 그뿐만 아니라 보편적인 IT 기술을 효율적 활용할 수 있는 '국민 역량(skills)' 역시 특징적인 문제를 보인다. WEF에서 조사한 항목을 살펴보면, 성인 식자율 항목에서는 대다수의 국가가 중상위 순위를 기록하였으나, 국가의 교육시스템이 경쟁적인 경제의 필요성을 얼마나 잘 충족시키는가를 나타내는 '교육시스템의 질'과 '수학 및 과학교육의 질'은 전반적으로 매우 열악한 수준을 보인다. 국가 차원의 교육 방향 재설정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표 1-2> 중남미 주요국의 IT 관련 '국민 역량(skills)' 항목*

	아르헨티나	칠레	콜롬비아	페루	브라질	코스타리카	멕시코	에콰도르
교육 시스템의 질(1-7)	3.1(108)	3.4(86)	3.1(102)	2.5(129)	2.4(131)	4.5(28)	2.8(117)	3.6(71)
수학 및 과학 교육의 질(1-7)	3.1(113)	3.3(107)	3.1(117)	2.2(136)	2.5(133)	4.3(55)	2.8(126)	3.8(85)
중등교육 입학률(%)	106.3(28)	100.5(40)	99.2(52)	95.6(63)	99.4(49)	120.3(10)	87(81)	104.2(31)
성인 식자율(%)	98.1(30)	97.3(36)	94.7(52)	94.5(56)	92.6(66)	97.8(33)	94.4(58)	94.5(57)
종합	5.0(71)	5.1(67)	4.9(79)	4.5(94)	4.5(91)	5.7(30)	4.5(92)	5.2(63)

자료: WEF. The Global Information Technology Report 2016

셋째, 디지털 경제 관련 정부의 종합적 비전이 부족하다. 디지털 경제의 심화·발전을 위한 국가의 정책은 특정 산업 정책에서 나아가 전체 산업을 아우르고, 그리고 새로이 발생하는 디지털화에 따른 문제들에 대한 대응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중남미 국가들의 디지털 정책은 여전히 단편적인 모습을 보인다. 중남미 국가들도 디지털 시대에 뒤떨어지는 위기의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대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국가정책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여전히 대다수 국가가 초기 단계의 대응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 표 3은 중남미 국가들의 디지털 전략을 요약한 표인데, 상당수 중남미 국가들의 정책 방향은 산업화가 상당히 진행된 칠레를 제외하고 인프라 부족에 따른 건설의 필요성, 국민의 인터넷 접근성을 강화, 특정 산업의 생산성을 높

* 괄호 안의 값은 139개국 중 국가 순위

이는 정도에 여전히 주안점을 두고 있다. 디지털화가 상당히 진행된 멕시코도 예외가 아니다. 연구 조사에 따르면 국가의 ICT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이 중요하다. 정부의 선도적인 활용으로 민간 부문에 가져오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남미 정부들은 ICT 관련 정책 수립 경험이 부족하고, 이는 결국 민간 부문의 디지털 경제 참여를 저해하고 있다 (ECLAC, 2015).

〈표 1-3〉 중남미 주요 국가 디지털 전략

국가	국가 디지털 전략
칠레	칠레 디지털 어젠다(Agenda Digital Imagina Chile)(2013-20)** 지식 경제의 창조, 기술 확대, 2020년까지 GDP의 10%는 ICT 부문에서 창출
콜롬비아	디지털 계획(Plan Vive Digital) (2014-18) 디지털 생태계와 관련 요소 발전(실질적 사용, 사용자, 인프라, 서비스 등) CRDigit@ (www.crdigital.go.cr/) (2015-21)
코스타리카	공공, 민간 행위자들에 관한 정책 프레임워크, 지역공동체와 가정, 그리고 교육과 보건 센터들을 연결해주는 포괄적 행동규정 제시
도미니카 공화국	도미니카공화국 디지털 어젠다 (Digital Agenda of Dominican Republic) (2016-20) 사회 개발과 경제 발전을 위한 정보, 통신, 기술 부문 전략적 계획
에콰도르	에콰도르 디지털 전략 2.0 (Estrategia Ecuador Digital 2.0) (2012-17) 인터넷에 대한 접근성 강화하여 디지털 격차 완화, 2017년까지 광케이블 45,000km 보유
온두라스	온두라스 디지털 어젠다(Agenda Digital Honduras) (2014-18) 인터넷 접근성과 인프라 향상, 디지털 정부, ICT 훈련 강화, ICT를 위한 법, 제도 강화
멕시코	국가 디지털 전략(Estrategia Digital Nacional) (2013-18) 멕시코의 개발 목표 달성을 도와줄 기술 및 혁신의 '디지털 멕시코' 건설
파나마	국가 광대역 전략(Broadband National Strategy) (2008-18) 시민, 정부, 교육, 보건, 기업 5개 부문을 포함. 부문마다 세부 행동계획으로 구성
페루	페루 디지털 어젠다 2.0 (Agenda Digital Peruana 2.0) (2011-15)*** 국민의 ICT 기술에 대한 접근성 증진, 관련 R&D 추진, 생산성과 ICT 경쟁력 향상, 국가적 ICT 산업 개발, 행정부문에서 ICT 사용 촉진
우루과이	디지털 어젠다 우루과이(Agenda Digital Uruguay) (2011-15) 보편적 정보사용과 지식 공유를 위해 개발에 초점을 맞춘 정보사회 건설, 사회적 포용, 시민 참여, 교육 지원

자료: OECD, IDB (2016).

넷째, 중남미 지역 국가들이 사이버 공격에 취약하다는 점 또한 향후 중남미 국가들이 해결해 나갈 문제이다. 지역 내 대다수 국가가 사이버 사건에 대처할 여력과 경험이 여전히 부족하다. IDB와 미주기구(OAS)가 공동으로 진행한 중남미 지역의 사이버 보안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역내 국가의 80% 정도가 이러한 사이버 보안과 관

* Broadband Policies for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a Digital Economy Toolkit.

** 해당 칠레의 국가전략은 피네라 1기 정부 당시 발표된 계획안이며, 이후 바철헤 대통령이 2기를 맞으며 Vive Digital 2020을 발표하여 현재 이행 중

*** 페루 정부의 새로운 디지털 전략은 2018년 상반기에 발표될 예정

련한 전략이나 계획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으며, 60% 정도가 사이버 보안에 대한 정부의 컨트롤 타워가 부재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중남미 국가들은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데 반해 정책을 통해 전략을 세우고 있는 국가가 없다. 또한, 역사가 상대적으로 긴 전자상거래 분야에서는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대비가 이루어져 왔지만, 정부 서비스 등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여전히 부족하다(WEF). OAS에 따르면 사이버 보안 교육 인프라 확대가 자금의 부족한 인식 문제의 일부 해결책이 될 수 있다. 현재 역내 사이버 보안 관련 대학원 프로그램이나 전문 훈련 프로그램들이 있으나, 그 질적인 수준도 천차만별이다.

다섯째, 로컬 콘텐츠와 앱이 부족하다. 인터넷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통신 인프라나 기기와 같은 공급 측면도 중요하지만, 인터넷 활용도를 높여 수요를 늘리는 것 역시 중요하다. GSMA의 연구에 따르면 중남미 지역은 사용자들이 직접 이용 가능한 '지역 콘텐츠'의 부족이 지역 내 연결성(connectivity)이 낮은 주요인이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GSMA는 중남미 지역의 로컬 콘텐츠 분야가 지금까지 엔터테인먼트에 집중됐음을 지적하고 있다. 인터넷이 엔터테인먼트의 한 채널로써만 인식되었음을 의미한다(WEF 2016). 지역과 연관성이 높은 콘텐츠 개발과 사용을 높이는 것이 디지털 경제의 심화를 가져올 요소로 작동할 것이다.

4. 마치며(Digital Divide)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많은 연구 결과가 중남미 지역의 디지털 경제 발전 장애 요인으로 물리적인 인프라 부족을 지적하고 있다. 물론 중남미 국가들이 디지털 경제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부족한 광대역과 같은 디지털 인프라 기반을 늘리는 것이 선결 과제일 수 있다. 하지만 중남미 경제는 여전히 통신 인프라뿐만 아니라, 규정 및 제도, 인적자원, 콘텐츠 등 전반적으로 여러 항목에서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발전 정도가 뒤쳐져 있다. 중남미의 전반적인 경제 발전 정도와 기술 수준을 보았을 때 정책과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사실상 인프라 구축보다 더 시급한 문제라 할 수 있다. 특히, ICT 관련 법안, 새로운 디지털 환경을 반영하는 관련 규정 도입, 분쟁 해결,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방지 등 디지털 경제가 자생하기 위한 정책 및

규범적 환경은 인프라보다 더 상대적인 발전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WEF).

한국은 IDB와 공동으로 2013년부터 2년에 한 차례씩 한-중남미 ICT 장관 포럼을 개최해오고 있다. ICT 부문에 대한 정부의 정책 경험공유, 협력 강화 등을 논의한다. 지난 2017년에 개최된 제3차 장관 포럼에서는 1, 2차에서 논의된 광대역 협력에서 나아가 디지털 경제 발전을 위한 실질적 협력 강화에 합의하는 '부산선언문'을 채택하였다. 중남미 국가들은 한국 기술과 관련 정책에 대한 선호, 신뢰도가 높은 편이다. 한국과의 기술 교류나 관련한 협력이나 관련 정책 조언을 받는 데에 적극적이다. 이러한 호의적인 배경 속에서 한국이 국가별 특징을 고려하여 로드맵을 잘 짚다면, 향후 더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에 있어 더 유리한 위치에 있는 셈이다. 국가마다 필요한 수요를 파악하여 인프라 형성부문에 대한 협력에서 나아가, PPP를 통한 금융 부문 협력, 스타트업 지원 등을 통한 기술 및 콘텐츠 부문 협력, 인력 교류 등 다각적인 모멘텀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물리적으로 먼 거리와 언어와 문화 차이 등, 그동안 중남미 국가들과의 협력을 '표면적'으로 저해해 왔던 요소들이 있다. 그런 와중에 중남미 지역은 한국에 있어 상호 보완적 산업구조, 경제적 잠재력 등으로 인해 언제나 기획의 지역으로 꼽혀왔다. 디지털 경제 발전에 따른 변화는 그동안 중남미 진출에 장애가 되어왔던 요소들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고, 더 많은 기회를 발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리고 이는 새로운 형태의 접근 방식과 협력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는 우리가 중남미 디지털 경제 발전에 따른 변화에 더 주목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Abstract

Digital Economy in Latin America

Yi, Si un

Previous studies point out that the lack of physical infrastructure are the major impediment to digital economy development in Latin America. Of course, it may be a priority for Latin American countries to expand their infrastructure, such as broadband, to reap the benefits of the digital economy. The Latin American economy, however, is still relatively behind the rest of the world in many areas, including regulations and institutions, human resources, and content, as well as telecommunications infrastructure. Creating a policy and institutional environment is actually a more urgent issue than building an infrastructure, given the overall economic development and technology level in Latin America.

In terms of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Latin America, there are factors that have so far hampered, such as distances, language and cultural differences. Meanwhile, Latin America has always been considered a region of opportunities for Korea because of its complementary industrial structure and economic potential. Changes made by digital economy can reduce the barriers to advancing into Latin America and help explore more opportunities. It also means a new type of approach and cooperative measures must be invented. This is why we should pay more attention to the changes in the digital economy of Latin America.

21세기 지속가능한 한-중남미 관계의 비전

곽재성*

1. 중남미 정세변화와 한-중남미 관계의 현주소

이 글의 목적은 한-중남미 관계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지속가능한 한-중남미 관계를 위한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다. 우선, 최근 다양한 정치 사회 변동을 겪고 있는 중남미 정세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경제침체와 부패 스캔들, 사회서비스의 위기 등은 역대 최대 국가인 브라질을 비롯, 많은 국가에서 좌에서 우로 정치권력의 교체를 가져오고 있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이데올로기 기반 정권 교체가 부패와 불평등이라는 뿌리깊은 시스템의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진 못할 것이다. 정치인들은 다양한 공약을 통해 개혁을 약속하지만, 어느 국가이던 정치경제의 근본적 구조적 변혁을 이루기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중장기적으로 중남미 정치권은 개혁에 대한 압력과 요구를 수용해야 할 것이다. 반부패 이니셔티브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셋째, 동시에 심상치 않은 소비자 물가, 높은 범죄율 및 치안 불안에 따른 경제사회 불안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베네수엘라에선 말라리아가, 브라질에선 황열병이 다시 돌고 있다. 넷째, 많은 국가들은 사회정책에 대한 개혁을 통해 복지 혜택 축소 등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나, 정치 이데올로기, 서민생활 위축 등으로 인한 저항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여섯째, 중남미 경제는 여전히 외부적 위기로부터 취약하다. 미국 경제의 호황이 끝나면 멕시코-중미-카리브 지역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며, 1차 산물 가격이 치솟지 않는 한 남미국가들의 경제가 빠르고 높은 성장세를 보이기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 現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영국 University of Liverpool 국제정치학 박사

현 정세를 고려하면 앞으로의 중남미의 정치경제는 단기적으로는 외생변수에 취약하고, 장기적 개혁과제를 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점에 있어, 한-중남미 관계도 큰 변화가 있기보다는 현재의 틀내에서 관계를 유지하며, 점진적인 변화를 겪을 것으로 보인다. 중남미 국가들은 냉전 시대부터 국제무대에서 우리나라의 입장을 변함없이 지지해 온 전통적인 우방국이며, 동시에 미래의 협력 대상국이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후 다수 중남미 국가들이 한국을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로 승인하였고, 콜롬비아는 1950년 한국전쟁에 참전하였으며, 멕시코 등 수 개국은 의약품 등 구호품을 지원하였다. 1959년 10월 중남미 국가 중 브라질과 최초로 외교관계 수립이 이루어졌으며, 이후 우리나라는 중남미지역 국가들과의 외교관계를 꾸준히 확대하여 1980년대에 이르러 쿠바를 제외한 32개 국가와 수교하기에 이르렀다.

1990년대 들어 정상의 상호 방문이 본격화되었고, 경제통상 관계도 계속 확대되는 등 우리나라와 중남미 국가들 간의 관계는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2000년대에는 대중남미 정상외교가 더욱 강화되고, 중남미 지역과의 경제·통상, 인사 및 문화교류 등 제반분야에서의 협력이 크게 증가하였다. 한국에 있어 중남미가 갖는 중요성은 인구 6.4억명의 수출시장으로서의 의미가 가장 크며, 역대 국가와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써 FTA를 적극 추진하였다. 2003년 2월 우리나라가 최초로 체결한 '한-칠레 FTA'는 2004년 발효 6년 만에 양국 교역 규모를 18억불에서 73억불로 4배 이상 증가시킨 성공적인 협정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힘입어 우리나라는 페루 및 콜롬비아와도 FT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여 2011년 8월 '한-페루 FTA', 2016년 7월 '한-콜롬비아 FTA'를 발효 시켰다. 또한, 2017년 3월에는 중미 5개국(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파나마, 코스타리카)과의 '한- 중미 FTA'가 체결되어 현재 파나마를 제외한 중미 4개국이 국내 비준절차를 완료하였으며, 우리 국회에서도 비준동의 절차를 진행 중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2005년에 중남미 최대의 인프라 지원 다자금융기구인 미주개발은행(IDB)에 가입하였고, 2018년에는 중미개발은행(CABEI)에 가입하였다(외교부).

이 글에서는 무역, 투자, 공공외교 등 제 분야에 있어, 지속가능한 한-중남미 관계 구축을 위한 제언을 시도하고자 한다.

2. 지속가능한 한-중남미 관계를 위한 제언

1) 거대 시장과의 FTA 추진

멕시코, MERCOSUR 등 거대 시장과의 FTA 추진 및 비관세장벽 등 진입장벽을 낮추는 노력이 필요하다. 메르코수르(남미공동시장)의 대표국인 브라질, 아르헨티나는 보호무역주의와 수입대체전략을 구사하여 진출하기에 어려운 곳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규모와 영향력 측면에서는 포기할 수 없는 시장이다. 기존의 브라질, 아르헨티나 정부는 내수중심의 정책을 구사하여 수입규제와 투자제한 등의 다양한 장벽이 존재하였으며, FTA 협력은 저조한 편이었다. 그럼에도, 최근 브라질, 아르헨티나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패러다임 전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경기 회복 가능성이 감지되고 있다. 다른 한편 멕시코의 경우, 우리의 10대 수출시장 중 하나이지만 한-멕시코 FTA가 체결되어 있지 않아, 미-일 등 경쟁국에 비해 불리한 위치에 있다. 그동안 멕시코는 산업계(자동차, 철강, 화학 등)의 반대로 한-멕시코 양자 FTA에 유보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FTA 뿐만 아니라 중남미의 통관 행정지연 및 높은 비용,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빈번한 세무감사 등 비관세장벽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데, 미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전쟁 및 NAFTA 재협상 등으로 미국과 멕시코와 브라질 등 중남미 주요국과의 무역이 단기적으로 위축될 것으로 보여, 이는 우리에게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시장친화적인 태평양동맹 (Pacific Alliance, PA)과의 협력 확대가 필요하다. 태평양 동맹은 페루, 멕시코, 칠레, 콜롬비아 등 중남미에서 가장 개방도가 높은 태평양권 4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원국간 상품, 서비스, 자본, 인력의 자유이동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 PA의 4개 회원국은 2017년도 세계은행 기업환경조사 (Doing Business)에서 모두 중남미 최상위권을 기록하여 최상위 기업환경을 갖춘 국가로 평가된다. (멕시코 47위, 콜롬비아 53위, 페루 54위, 칠레 57위). 한-PA 교역은 총 252억불로 추산되며 한-중남미 교역의 55.7%를 담당하며, 한국의 흑자는 2017년 기준 32억불이다. 특히 한국은 PA 준회원국 가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3개국 (칠, 페, 콜)과 높은 수준의 FTA를 이미 체결하고 있어, PA 준회원국 가입은 그동안 꾸준히 추진해왔던 사실상 멕시코와 FTA 체결을 의미한다.

2) 지속가능한 무역정책

지금까지 우리 상품이 중남미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 중심의 수출확대 전략을 구사했다면, 앞으로는 중-고가 (Up-Market) 시장 진출을 위한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 추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중남미 다국적(Multilatin) 기업 대상 마케팅 협력을 강화하여 지역 전반에 걸쳐 영업망을 확보한 기업들을 발굴, 마케팅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 예를들면, IDB의 ConnectAmerica 등 중남미 국가 진출 지원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마케팅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특히, 구매력을 가진 중산층 증가 추세에 따라 고품질 다품종 소량 구매 패턴을 보이는 중산층 소비성향 분석을 통해 진출 유망품목 발굴이 필요하다. 중남미 중산층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면, 2009~2015년 칠레 계층 동향을 살펴보면 2009년 25%에 달하던 '빈곤층'이 2015년 12.9%로 크게 감소하였고, '취약층'도 7년간 소폭 감소한 반면, 중산층 비율 68%로 증가하였다.

나아가, 기존의 수출확대 정책과 병행하여 지속가능한 수입정책을 추진한다. 국내산 품에 타격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중남미 산품에 대한 시장 개방 및 한국시장 접근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며, 이는 개도국 상품의 EU 시장 접근을 지원하는 네덜란드의 CBI (Center for the Promotion of Imports) 지원 방식과 유사한 방식이다. 이와 같은 전환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지난 반세기 동안 추진된 한국의 수출진흥 정책은 상당히 효과적이었지만, 다른 한편 국제적 중상주의 이미지를 쌓게 되었다. 이미 기업의 역량과 정부가 구축한 FTA 등을 활용하여 수출시장은 민간 기업이 원만하게 개척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보다 거시적인 안목에서 국제경제정책 및 대 중남미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며, 이중 고려해야 할 것이 어떻게 하면 외교정책의 한 수단으로 수입을 활용하는 것이다. 예를들면, 중남미권의 대 한국 외교 최대 현안인 농산물 시장접근 이슈 해결에 대한 전향적인 자세를 통해 우호적인 외교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특히, 중남미로 부터의 농산물 수입이 확대될 경우, 우리 농산물과 직접 경쟁하기보다는 무역전환 (칠레 포도 vs 페루 포도) 또는 시장분할 (한우 vs 수입쇠고기) 효과가 예상되므로, 일부의 우려에 논리적으로 대처도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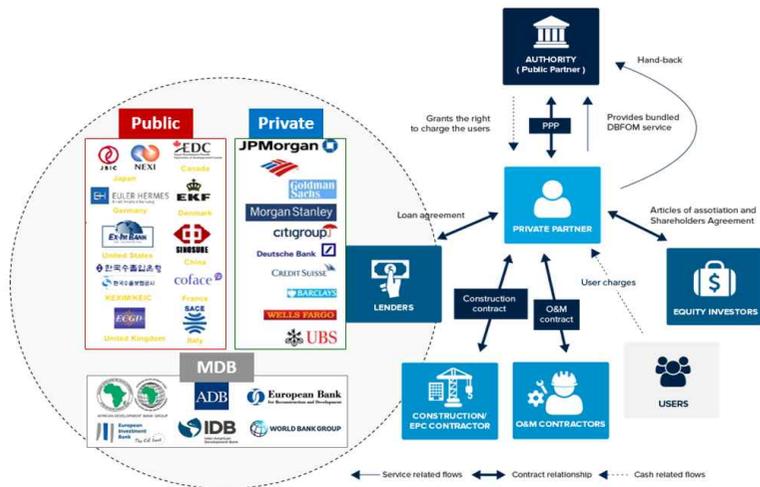
3) 중남미 인프라 투자 사업 참여 확대

중남미 인프라 투자 사업 참여를 확대한다. 만성적인 인프라 투자 부족으로 인한

생산성 정체 해결을 위해 중남미에서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가 잇따라 발주되면서 관련 기회 확대가 예상된다. 미주개발은행(IDB)은 중남미 전체 인프라 투자액을 연간 2-4% 정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하였는데, 브라질의 경우 고속도로, 공항, 항만, 터미널, 송전선을 포함한 57개 국유 자산 민영화를 통해 약 445억 헤알의 투자 효과가 예상된다. 아르헨티나는 2017년 민영화법을 발의하고, 인프라, 에너지, 수처리 등 52개 PPP 프로젝트(39)*를 2018년 예산에 포함시킨 바 있다.

많은 중남미 인프라는 민자 유치를 통해 구현되는데, 늘어나는 중남미 인프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PPP 사업에 적극 참여하거나, 금융수단의 지원이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 기업이 모든 책임과 의무를 부담하는 주사업자로 참여하기엔 현실적인 어려움이 상존하므로 컨소시엄-파트너링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민간재원과 세계은행이나 미주개발은행(IDB) 등의 MDB 지원과 결합한 PPP가 중남미의 일반화된 프로젝트 파이낸스(PF)의 패턴으로 자리잡고 있음<그림 2-1>.

<그림 2-1> MDB와 PPP 구성도



4) 개발협력력을 통한 시장 진출 및 한-중남미 관계 증진

개발협력력을 통한 시장 진출 및 한-중남미 관계 증진을 도모한다. 대부분 중소득국인 중남미 국가들에 대한 ODA 지원을 경제협력과 연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는데, 신재생 에너지, ICT 전자정부 등 비교우위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한다. 특히, IDB와의 협력을 통한 중남미 시장진출 추진이 계속되어야 한다. 한국 기업의 IDB 사업 수주는 가입 후 10년간 (2016년까지) 10.3억 달러로 조사된 바 있다. 한국 기업들이 조달시장 진출 시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이나 한계가 뚜렷하기 때문에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한 현지 파트너와의 제휴가 필요하다. 수주에 성공한 사업의 대부분 (2011년 한전의 도미니카공화국 배전망 사업, 2012년 (주)효성의 에콰도르 전력청 사업)은 모두 현지 발주처 및 고위인사에 대한 영업과 네트워킹이 핵심 기반이 되었다. 이와 같이, MDB 조달시장에 대한 충분한 노하우를 습득한다면 광범위한 중남미 정부조달 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발협력에 있어 PA 국가들을 활용한 삼각협력 추진도 가능한데, 상대적으로 발전도가 높은 칠레, 페루 및 PA 기구 등을 활용한 주변국에 대한 지원을 시행할 수 있다. 칠레 국제개발청(ACGI)의 경우 삼각협력의 주축국 (pivotal country) 으로서 전문적인 기능을 하며, 독일, 스페인 캐나다 등의 공여국 기금을 중심으로 주변 수원국에 대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나아가, 앞서 언급한 지속가능한 수입증진을 ODA와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내 농산물 등 국산품에 타격을 주지 않고 수입전환(Trade Diversion) 효과를 유도할 수 있는 아이템 위주로 시행한다.

5) 인적 교류 확대

양 지역간 장기적인 신뢰구축을 위한 인적(학생) 교류 확대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기획할 수 있다. 우선,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협력포럼(FEALAC)을 통한 아시아-중남미간 장학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FEALAC은 아시아와 중남미간 유일한 다자 대화체이나 한국이 사이버 사무국을 운영하며 고위정책 대화를 이어가는 것 외엔 뚜렷한 협력 아이템이 부재하였다. 교육분야 협력의 경우 양측에서 학생 교환 프로그램을 추진 하되 아셈듀오 (Asem Duo) 장학 프로그램과 같이 양 대륙의 학생이 공동으로 지원하게 하여 파트너십을 중심으로 한 대학/대학원생 교환 제도를 추진한다. 중남미 1개

국이 기금을 출연하여 참여한다면 한-중남미1개국을 중심으로 듀오 장학 프로그램을 우선 가동하여, 기금 공여국별로 장학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 예를들면, 한국-듀오 프로그램(가칭 Korea Duo Program)의 경우 한국학생1인과 중남미(국가불문) 학생1인이, 멕시코-듀오 프로그램 (가칭 Mexico Duo Program)의 경우 멕시코 학생 1인과 아시아 학생 1인에 수혜자로서 동시에 교환프로그램을 신청하여 상호 교환하며, 일정 및 지원액은 유동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나아가 중남미 지역기구 인턴십을 확대한다. OAS, CEPAL 등 외교부에서 추진중인 중남미 지역 국제기구에 대한 인턴십을 확대하여 중남미에 관심있는 후속세대의 실무역량 함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경쟁력 함양을 추진한다.

6) 중남미 전문 씽크탱크 설립

중남미 정책 수행을 지원할 씽크탱크를 설립한다. 중남미권에 대한 외교 및 민간진출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연구 및 컨설팅 플랫폼 구축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남미지역 문제해결 및 정책 지원을 위한 종합적 플랫폼 필요성 대두되고 있다. 학계를 중심으로 중남미 지역과 관련된 연구 기관이 다수 산재해 있으나 정책 컨설팅, 기업진출 등 실무 역량이 부족하여 공공, 교육, 연구, 컨설팅 등 기능을 종합·총괄하는 씽크탱크가 부재하다. 공공부문에서는 외교부 내 「중남미자원·인프라협력센터」에서 중남미로 진출하려는 국내 기업들에게 자원, 인프라 분야의 정보를 제공하며, 서울대, 부산외대, 한국외대 등의 대학에서 중남미지역 전문 연구소를 운영 중이나 정책, 경제경영 전문가가 희소하거나 현업 종사 경험이 없어, 정책 자문 및 사업 진출에 관한 컨설팅 니즈에 부합하기 어렵다. 국정과제와 연계한 연구를 수행하여 실질적인 對중남미 외교 및 한-중남미 경제산업 확대에 도움이 되고, 정책 집행의 근거가 될 수 있도록 한다. 경제 및 산업 영역 뿐만 아니라 각 분야 중남미전문가(인문학, 정치학, 사회학, 인류학 등등)들로 전임 연구진을 구성하여 중남미 지역에 대한 국정과제 연계 연구, 기업 대상 컨설팅, 일반인 대상 다양한 교육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3. 결론

중남미는 인구 6.4억 명, GDP 5.2조 달러의 거대시장이자 젊은 소비시장을 보유한 지역으로 세계 경제의 영향에 따라 경제의 부침이 있으나, 지속적 성장세를 보이는

중요한 경제 시장이다. 아울러, 농산물에서 광물에 이르기까지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우리 기업의 진출이 가능한 인프라 수요가 많아 한국 경제와의 상호 보완성이 뚜렷한 지역이다. 최근 들어 K-팝 열풍이 불면서 한류를 중심으로 한국에 대한 우호적인 시선이 확산되어 양 지역간의 관계망 형성에 든든한 보루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한국의 대 중남미 접근 전략은 뚜렷한 전략과 장기적인 안목이 결여된 중상주의적 정책이 주류를 이루었다. 이 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중남미 협력의 지속성을 위해 정부, 산업 통상, 공공외교 등의 제반 협력분야에 있어 전향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때다.

멕시코의 경제개혁과 한국의 협력방안

문남권*

1. 들어가며

인구 약 1억 3천만 명의 멕시코는 풍부한 자원과 내수시장, 그리고 미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북미의 국가로 한국에 잘 알려져 있다.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라틴문화의 국가이지만, 또한 미국, 캐나다와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을 맺고 있는 국가로서 경제적 측면이 중요하게 인식되는 것이다.

사실 멕시코는 스페인어 사용국 중 가장 규모가 큰 국가로서, 국토면적으로는 세계 13위, 인구기준으로 세계 10위의 국가이다. 경제력 면에서는 명목 GDP 1조2천억 달러로 세계 15위, 구매력 기준 (PPP)로는 GDP가 2조 6천억 달러의 세계 10위 국가이다 (World Bank Data Catalog 2019).

1994년 라틴아메리카 국가들 중 최초로 선진국 클럽인 OECD에 가입하였으며, 세계은행 기준으로는 중상위 소득(upper middle income) 국가로 분류된다. 2018년 기준으로 3,90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한 세계 6위의 관광대국이기도 한 멕시코는 여러 측면에서 풍부한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세계적 중견국가이자, 라틴아메리카의 핵심 국가이다.

라틴아메리카 지역 패권국가로서 위상을 가진 멕시코는 2000년대 들어 다양한 개혁을 시행하고 있으며, 그 목적은 경제적 저성장 및 치안불안과 같은 사회적 문제 해결이었다. 그러나 전임 엔리케 페냐 니에토 정부 (2012-2018)의 광범위한 개혁은 많은 부분 실패로 귀결되었고, 2018년 취임한 현 안드레스 로페스 오브라도르 (Andrés Manuel López Obrador) 좌파 정부도 여러 정치경제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

* 現 한국외국어대학교 스페인어과 교수
멕시코 Universidad Nacional Autónoma de México 경제학 박사

2016년 기준으로 여성 1명당 2.16명 출산율 (World Bank data)의 안정적 인구 증가율, 젊은 노동인구, 대미 인접성으로 인한 유리한 지경학적 조건, 석유를 비롯한 풍부한 천연자원 보유 등 효율적 개혁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기본 여건은 매우 우호적이다.

반면에 지역 국가들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경제성장률, 경직된 노동시장과 같은 경제개혁 현안 산재, 최대 수출국인 미국의 정책변화에 따른 리스크 급증, 오래된 부패와 관료주의 등의 정치개혁 이슈, 그리고 마약 카르텔의 활동에 따른 치안불안의 사회 문제 등이 멕시코의 시급한 개혁 현안으로 꼽힌다.

한국은 국제사회 중견국가로서 비슷한 경제규모를 지닌 멕시코와 미국시장에서는 경쟁자이지만 동시에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멕시코와 경제협력을 강화해야 하는 과제를 갖고 있다. 따라서 본 글은 멕시코의 정치, 경제, 사회 등 여러 분야에서 진행 중인 개혁과 도전을 분석하고, 이후 한국과의 협력 이슈에 대해 살펴본다.

2. 경제구조와 경제성장

멕시코는 수도권 멕시코시티를 포함하여 32개의 주로 구성된 연방국가로서 북부, 중부, 남부가 각각 다른 경제적 특징을 지닌다. 북부 지역은 마킬라도라 (보세가공 조립산업) 단지가 집중된 수출산업 중심지역으로서, 다른 지역대비 경제력이 월등하다. 반면에 남부는 개발낙후 하위지역으로 농업위주의 산업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카리브 지역에는 중화학 산업단지가 집중되어 있다. 또한 태평양 연안지대는 사막화, 자연재해 등의 위험이 잠재한 지역으로 내륙운송 등 물류기반이 취약한 특징을 보인다.

경제력 면에서 수도권 멕시코시티의 경제력이 남부지역의 6배 이상 높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사회적 웰빙지수 측면에서는 북부가 가장 높으며, 남부가 낮고 중부 지역은 이질적인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Moreno-Brid & Ros, 2009).

멕시코가 직면한 가장 큰 경제적 도전은 저성장의 극복이다. 멕시코 경제는 1980년대 다른 라틴아메리카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외채위기와 인플레이션 등의 극심한 거시경제 위기를 겪은 바 있다. 그러나 1985년 GATT 가입이후 신자유주의 정책의 도입과 함께 자유경제체제로 전환하였다. 그러나 이후 멕시코 경제는 저성장 기조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다.

<그림 3-1> 멕시코 경제성장률(%)

멕시코 경제는 1980년대 이전 30년 동안 수입대체산업화를 시행하며 평균 7%의



SOURCE: TRADINGECONOMICS.COM | INSTITUTO NACIONAL DE ESTADÍSTICA Y GEOGRAFÍA (INEGI)

상대적 고성장을 구가한 바 있다. 이후 1980년대 외채와 금융 분야 위기로 인해 두 차례 마이너스 성장의 위기를 겪었고, 위의 그림 1에서 보듯 1995년 -8%의 이른바 '테킬라 위기'를 겪었다. 문제는 멕시코가 1990년대 OECD 가입과 함께 금융 및 자본 시장을 본격적으로 개방하는 개혁을 단행하고, 대규모 공기업 민영화, 국제무역 자유화를 시행하였음에도 개혁의 성과가 성장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2000-2010년 멕시코의 평균 경제성장률은 1.8%였으며, 2011-2014년에는 2.8%였다. 현재 2018-2019년은 경기가 더 침체하여 2019년 2분기는 전년 동기대비 -0.8% 하락하여 2009년 이후 최악의 경제성적을 기록하고 있다(tradingeconomics.com). 이러한 저성장 기조의 지속은 개도국 경제구조의 멕시코가 경제성장은 선진국 패턴을 따르는 기묘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경제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2012년 출범한 페냐 니에토 전임 대통령은 경제사회 전반적 개혁을 시행한 바 있다. 페냐 니에토 정부의 신자유주의 개혁은 이 시기 라틴아메리카 다른 국가들의 포스트 신자유주의 개혁과는 다른 방향이었다.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등의 국가들이 신자유주의 경제모델에 실망하여, 국가 주도 산업화 모델의 포스트 개혁을 실행한데 반해, 멕시코는 신자유주의 모델을 보완하는 실행하는 2세대 개혁(second generation reform)을 실행하는 것이었다

(Edwards, 2012). 2012년 취임한 엔리케 페냐 니에토 대통령은 현재 멕시코가 필요로 하는 것은 부분적 개혁이 아닌 전반적 생산구조개혁임을 천명하며, 포스트 신자유주의 개혁을 선언하였다. 이는 지난 정권들의 경제운영이 거시경제 안정을 위하여 경제성장을 희생하는 방식의 틀을 벗어나지 못함에 따라, 멕시코 경제의 역사적 저성장, 지역 및 계층 불평등 증가라는 부정적 결과를 낳았기 때문이다.

경제개혁의 목표는 “경제성장과 빈곤퇴치”로 정의하며, 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4대 정당과 함께 ‘멕시코를 위한 협약 (Pacto por Mexico)’에 합의했다. 개혁은 재정·조세개편을 중심으로 한 거시경제분야, 금융·에너지·통신 산업 개혁 등의 산업정책 분야, 연금제도 도입 등의 사회정책 분야, 교육개혁·공공부문 부패방지 등의 사회 인프라 분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표 3-1> 멕시코 경제개혁 주요 내용

분야	주요 내용	주요 세부 개혁안
거시경제	재정개혁 조세개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가가치세법 개정 (국경지역 16% 단일세율 부과, 마길라도라 임시수입 관세면제 폐지 등) 소득세법 개정 (기업 단일세율법인세 폐지, 35%까지 소득세 인상) 주주 배당 소득세 인상 광업 7.5% 로열티 징수
산업정책	금융·에너지·통신분야 개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석유·천연가스 분야 민간·외국 자본 참여 허용 통신과 방송산업 독과점 해체 및 경쟁촉진 금융규제기구 창설 및 중소기업 대출 강화
사회정책	양극화 해소 복지제도 확대	65세 이상에 연금 제공 및 실업보험 도입
사회 서비스 분야	교육제도 개혁 공공부문 부패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원자격 정기 평가 도입 교원노조 통한 교사자격 거래 및 세습 차단 부패한 관료부문 개혁

3. 신정부와 경제개혁

2018년 7월 1일 실시된 대선에서 승리한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라 대통령은 89년만의 좌파성향 정당 국가재건당 (MORENA) 소속으로 당선된 대통령이다. 현 여당은 노동당과 사회적 연대당과 함께 “함께 역사를 만들자”라는 연정을 구성하여 안정적으로 국정을 주도하고 있다. 멕시코의 기존 3대 정당 (제도혁명당, 국민행동당, 민주혁명당)이 아닌 좌파성향의 제3당이 구성되어 정권을 잡은 것은 새로운 멕시

코가 정당의 교체가 아닌 체제의 교체 (Regime change)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오브라도라 대통령은 남부 타바스코주 빈민가 출신으로서 실제로 선거운동 과정에서 여러 좌파적 성격의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농촌 빈곤농민에 비료 부상공급, 빈민 구제 사회보장 프로그램 강화, 농산물 최저가격제 실시, 최저임금 인상, 노인연금 확대 등의 공약이 그것이며, 이외에 부정부패 척결, 권력 마피아 청산 등을 약속하였다 (한국수출입은행, 2019).

현재 집권 반년이 지난 신정부의 경제성적은 그리 밝지는 않은 상황이다. 신정부의 경제정책이나 성과를 평가하기에는 너무 이른 시점이지만 최근의 정책 현황을 볼 때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하나는 구조적 개혁안의 연속성이다. 전임 페냐 니에토 정부가 추진했던 거시경제 및 산업정책 분야 개혁의 지속이다. 전임 정부 추진 정책은 현재 여러 개혁안으로 실행된 바 있다. 이른바 니에토노믹스 (Nietonomics)의 핵심 정책인 방송통신분야 독과점 방지 정책으로 2017년 기준 328억 달러에 달하는 멕시코 통신부문에서 카를로스 슬림 그룹의 독과점 체제가 붕괴되고 외국인투자 시장진입이 활성화 되고 있다 (Alvarez, 2015). 조세개혁에서는 전국 단일 부가가치세 16% 부과가 시행되고, 임시 수입관세 면세제도도 폐지되었다.

소득세법(ISR) 개정에서는 세제가 간소화되고 소득세율이 조정되었으며, 10%의 주식거래소득세가 부과되고 있다. 금융부문에서는 개발은행 및 민간은행의 여신이 확대되고, 금융기관 건전성 관리가 강화되었다.

멕시코 개혁의 최대 쟁점이었던 에너지 분야의 변화는 두드러진다. 외국인 투자자를 포함한 민간 기업이 국영석유회사 (PEMEX) 독점이었던 에너지 분야에서 서비스계약, 이익공유계약, 생산공유계약, 라이선스 계약 등의 방식을 통해 석유개발 및 유통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다 (Alvarez, 2015). 최저임금 부문에서는 차등 지급되던 최저임금이 전국 단일화로 동일 최저임금이 설정되어 농촌 및 낙후지역 근로자는 2.66%의 임금인상 효과를 누리고 있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점은 선거운동 과정에서는 미국과의 경제관계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취임 후 정책 실행 면에서는 실용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과의 NAFTA 재협상(USMCA)이 취임 전 타결되었고, 이를 그대로 수용함으로써 기존의 틀을 인정하고 실행하는 모습이다. 또한 중미 이민자들의 카라반 행렬로 미국과 외교 갈등이 불거지자 적극적으로 미국의 주장을 수용하여 중미 이민자를 단속하는 모습을 보여준 점은 국제관계에서 멕시코 국익을 우선시하는 실용주의 노선을 보여준 것이다.

둘째는 사회정책의 강화 및 부패척결이다.

좌파 대통령으로서 오브라도르 대통령의 정체성은 사회정책의 강화에서 나타나고 있다. 선거 공약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부의 불평등 해소를 약속한 신정부는 12월 취임후 바로 2019년 1월부터 최저임금을 기존보다 16.28% 인상하여 102.68%로 올리려 있다. 또한 북쪽 국경 25km 이내 지역에는 임금경제구역을 신설하여 최저임금을 100% 인정한 176.72%로 인상하였다. 그리고 북쪽 산업지대에 소득세를 35%-20%로 낮추고, 부가가치세를 16%-8%로 인하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salariminimo.com.mx).

이 밖에 신정부 사회정책의 포커스는 청년, 노인, 미혼모,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확대이다. 이를 위해 노인 연금액을 두배로 증가시켰고, 첫 고용을 위한 청년 프로젝트를 신설하였다. 이전 정부와 차이점이 있다면, 지방 정부를 통한 지원이 아니라, 연방정부 차원의 직접 지원으로서 이는 정권 지지를 제고의 핵심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사회정책에 사용할 예산 확보를 위한 신정부 정책 2가지는 부패척결 및 연방예산 삭감이다. 현재 부패척결에서 가장 핵심적인 정책은 이른바 'huachicoleo'라 불리는 석유절도를 근절하는 것이다. 멕시코 국영부문 중 핵심인 에너지 분야에서 페멕스 송유관 석유 절도 문제는 오래된 사회문제였다. 오브라도르 정부는 작년 12월 21일 이후 페멕스 송유관 여러곳의 운영을 중단하고 유조차를 통해 석유를 일선 주유소에 공급하는 방안을 시행하였다 (univision.com).

석유 절도액은 연간 약 30억 US 달러에 달할 정도로 막대한 양으로 국가 경제에 큰 문제였으며, 때로는 절도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수백명 사망하는 사고도 빈번

하였다. 신정부는 이 범죄 해결을 위해 약 4000명의 군인과 연방경찰을 동원하여 송유관 및 정유소를 감시하였다. 그 결과 석유절도는 5% 미만으로 급감한 것으로 추산되지만 적어도 12개 이상의 주에서 석유 공급이 부족하여 민간의 불만이 속출한 부작용도 낳고 있다.

이 밖에 신정부의 반부패 조사에서 전임 정부의 의료부문 과다 지출 및 예산 남용 사례가 발견되어 기존 의약품 공급업자 3개사와의 계약을 취소하였다. 그 결과 공공 의료기관에서 의약품 부족으로 공공의료 부문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연방 예산 축소 차원의 이번 조치에 대해 멕시코 사회보험청(IMSS) 헤르만 마르티네스 청장이 사임한 바 있다.

오브라도르 신정부의 현재 가장 대표적인 반부패 행정정책 사례는 기존에 1/3이나 예산이 소요된 멕시코시티 신공항 건설 중단이다. 취임 후 신정부는 텍스코코 지역에 건설 중이던 130억 달러 예산의 신공항 건설을 중단시키고, 멕시코시티 북동부의 공공기지를 확장하여 50억 달러의 예산 절감을 추진하고 있다.

4. 멕시코 경제의 도전과 과제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7월 2019년 멕시코의 경제성장률을 0.9%로 전망하였다. 이는 4월의 1.6% 전망치를 대폭 낮춘 것으로 현재 멕시코 경제가 처한 난관을 보여 주는 것이다.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멕시코 폐쇄화 가치 하락, 대내적으로 신정부의 정책 불확실성과 이로 인한 시장의 신뢰도 하락 및 차입비용 증가로 민간의 투자와 소비가 크게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tradingeconomics.com).

멕시코 경제가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움직임과 NAFTA 개정은 향후 멕시코 경제의 가장 중요한 변수로 보인다. 2018년 기준 멕시코의 대외 수출액은 4,500억 달러이며 이중 4/5인 79.6%가 미국과 캐나다 NAFTA 시장으로의 수출이었다. 실제로 캐나다의 비중은 2.5% 정도에 불과해 멕시코의 대미 시장 의존도는 절대적인 수치를 보여준다.

이밖에 유럽 5.9%, 라틴아메리카 5.1%, 아시아 4.3%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수출 품목 중에서는 자동차 및 부품, 전자기기, 기계류가 50% 이상을 차지하는 등 수출품목도 일부에 편중된 현상을 보여준다. 따라서 대미 의존도 줄이기 및 수출상품

다변화가 멕시코의 수출증가와 지속적 성장을 위해 필요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 실제로 멕시코는 19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FTA 네트워크를 확장해 현재 46개국과 12개의 FTA를 체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미시장 의존도가 하락하지 않는 것은 대미수출용 마킬라도라 산업 위주의 멕시코 산업구조에 근본적 원인이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진행된 NAFTA 재협상과 이 결과 탄생한 미국, 멕시코, 캐나다 자유무역협정 (USMCA)은 신설조항으로 멕시코 산업 경쟁력에 일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USMCA의 핵심은 미국 통상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며, 구체적으로 비시장경제국(중국)과의 FTA 제한, 쿼터규제, 환율조항 등은 담고 있다. 즉, 글로벌 공급망(GVC)을 축소해 미국 제조업체들을 다시 미국으로 불러들이는 정책이며, 멕시코가 직접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 변화로는 NAFTA와 비교하여, 디지털무역, 노동, 환경, 반부패, 환율 등의 챕터가 신설되었고, 세부내용으로는 원산지 규정, 투자, 디지털무역, 지식재산권, 일몰조항등이 신설 또는 변경되었다. 멕시코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점은 이 조약이 16년간 존속되고 이후 6년 주기로 갱신조항을 검토하고 협의해야 한다는 점이다 (Burfisher, 2019).

멕시코의 대미 최대 수출상품인 자동차 임을 고려할 때 이번 USMCA에서 자동차 부문의 원산지 규정 강화는 의미하는 바가 크다. 우선 역내부가가치 함유 비율이 62.5%에서 75%로 강화되었다. 또한 자동차 구성품의 40-45%는 시간당 임금이 최소 16달러 이상인 근로자에 의해 생산되어야 한다는 최저임금요건 추가는 멕시코산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전망이다. 또한 미국은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자동차도 260만 대까지만 자유무역을 허용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25%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배찬권, 2018).

또 다른 주요 수출품인 섬유에 대해서도 미국산 섬유, 원사, 직물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역외산 원료 사용을 허용하는 규정을 제한하였다. 이런 새로운 규정들이 미국산 원부자재 사용을 증가하고 멕시코의 역외산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멕시코 제조업

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전망이다. 따라서 NAFTA와 다른 새로운 USMCA 환경에서 멕시코의 대미 수출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신정부의 중요한 경제적 과제 중 하나일 것이다.

신정부의 사회경제적 과제 중 가장 도전적인 것은 남부지역 개발을 통한 국토의 균형적 발전과 지역간 빈부격차 해소이다. 이를 위해 남부에 마야선(Mayan train) 설치를 발표했다. 동시에 마약카르텔과의 전쟁을 종식하고 사회 치안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 대두된다.

멕시코는 2006년부터 군대를 투입하여 마약과 관련된 모든 폭력을 종식시키려는 마약과의 전쟁을 시행하였으나, 그 결과는 멕시코 전역에 암살과 실종자의 증가로 나타났다. 2006-2012년 사이에 마약과의 전쟁이 최악의 상황이었으나, 이후에도 상황은 크게 진전되지 않고 현재까지 13년 동안 4만명 이상의 실종자, 5천구 이상의 암매장 시신이 발견되는 상황이다 (연합뉴스, 2019.09.10).

오브라도르 대통령 정부는 선거때부터 마약 카르텔과의 전쟁종식, 군대 철수, 집단 사면 등 회유책을 제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마약 카르텔의 범죄는 전보다 더 잔혹해지고, 마약과의 전쟁 악몽이 되살아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9.10). 오브라도르 대통령의 정책은 군대투입 대신, 청년들에게 일자리 제공등을 통해 범죄조직 가담을 막는 장기적 대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여론 조사에 의하면, 마약 문제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지지보다 반대 의견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5. 한국-멕시코 경제협력

한국과 멕시코는 국제무대에서 중견국 대표주자로서 외교관계를 강화하고, 경제부문 협력도 꾸준히 확대되어 왔다. 2018년 기준 한국의 멕시코 수출액 114억 달러, 수입액 50억 달러로 64억 달러에 달하는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멕시코는 한국의 9대 수출국에 올라있다. 한국의 대 멕시코 투자도 405건에 53억 달러에 이를 정도로 멕시코는 한국의 대 라틴아메리카 무역과 투자의 핵심국가로 자리매김하였다 (한국수출입은행, 2019).

1993년 NAFTA 체결 이후 양국 교역관계는 12배 이상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양국의 경제협력이 질적으로 도약할 여지는 충분하다. 실제 양국은 통상분야 핵심 정책으로 FTA를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대 라틴아메리카 FTA는 칠레, 페루, 콜롬비아, 중미지역에 한정되어 있고, 핵심 파트너인 멕시코와는 아직 FTA 협상을 진전시키지 못하고 있다. 한국과의 FTA에 대해 자동차와 철강 등 일부 산업부문에서 반대의 목소리도 있지만, 대 멕시코 FTA 진척은 핵심 협력 과제중 하나라고 간주된다.

한국의 이전 행정부에서는 멕시코와의 핵심 경제협력 과제로 양국간 경제협력 강화 방향으로 1)교역·투자 확대 및 다양화 2)전력·교통·수자원관리 등 인프라 분야 협력 강화 3)문화·보건·의료·에너지산업 등 협력 활성화를 추진한 바 있다 (오픈뉴스, 2016). 통상 부문 확대와 함께 멕시코의 '국가인프라계획'에 따른 에너지와 교통 등의 분야 인프라 확대에 한국 기업들의 적극적 참여를 확대한다는 점이다. 또한 K팝, K드라마 보급이 확산된 멕시코와의 문화 콘텐츠 협력도 확대추세에 있다.

정부는 현재 2018년 10월 제1차 '한-멕시코 경제협력위원회'를 개최하여 양국간 경제협력을 제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회담에서 양국은 통상 및 인프라 부문 협력과 함께, 미래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해 국제조세, 금융통합 분야 등 디지털 시대의 협력도 확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중남미, 2018).

미국 시장에서 경쟁국이기도 하며, 자동차와 전자 등 주요 산업부문의 수출국이기도 한 두 나라는 동시에 자원, 농업, 첨단산업 부문에서 협력할 많은 가능성을 갖고 있다. FTA 협상이 현재 진전되지 못하고 있지만, 여러 채널의 민관 협력을 통해 전방위적으로 경제 협력을 질적으로 한 단계 도약시킬 때 양국 모두 윈윈의 상생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 멕시코 추진하고 있는 현재의 경제개혁, 사회적 과제를 이해하고 USMCA가 의미하는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여 대 멕시코 통상 및 투자를 강화할 때이다.

Abstract

Economic Reforms of Mexico and Corporation with Korea

Mun, Nam Kwon

Mexico is a regional power of Latin America, and is undertaking economic reform since 2012. The main purpose of Mexican reform is to overcome the poor economic performance after the implementation of neoliberalism in the 1990s. The growing inequality and low growth rate characterized the neoliberal era of Mexico. Despite the ambitious reform under the Enrique Peña Nieto government failed, the actual leftist regime of Mexico with new president Andres Manuel Lopez Obrador is continuing to struggle with the socioeconomic reform. Mexico is an important commercial partner of Korea, and it's very urgent that the two countries strengthen its ties and cooperation.

[참고문헌]

- 문남권 외,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10년에 대한 영향평가와 우리나라 FTA 정책에의 시사점」, KIEP, 2005.
- 배찬권, “NAFTA 재협상, 미국 멕시코 합의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Vol 18, No. 33, 2018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국가신용도 평가 리포트, 멕시코”, 한국수출입은행, 2019.
- Alvarez, Clara Luiz, “Mexican Telecom Reform: Private Interest First”, Mexican Law Review, Vol. 8 No.1., 2015.
- Alvarez, Jorge, “Made in Mexico: Energy Reform and Manufacturing Growth”, Energy Economics 55, 2015.
- Burfisher, Mary E., “NAFTA to USMCA: What is gained?”, International Monetary Fund, 2019.
- Edwards, Sebastian, Left Behind: Latin America and the False Promise of Populism,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2.
- Moreno-Brid, Juan Carlos & Ros, Jaime, Development and growth in the Mexican economy : a historical perspective,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온라인자료]

- 연합뉴스, “멕시코서 되살아나는 마약전쟁의 악몽…더 광범위하고 잔혹해져”,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1051746>, 2019.09.10. 검색
- 연합뉴스, “멕시코서 13년간 암매장 시신 4천874구 발견…여전히 4만명 실종”,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1051735>, 2019.09.10. 검색
- 오픈뉴스, “朴대통령, 한-멕시코 경제협력 확대 3대 방향 제안”, <https://blog.naver.com/opennews24/220675853559>, 2019.09.03. 검색
- 중남미 B2B Program, '韓-멕시코 경제협력 위원회' 조속 개최키로…"중남미 협력 확대", <https://blog.naver.com/lacb2bprogram/221235064262>, 2019.09.03. 검색 Univision, <https://www.univision.com/noticias/precio-de-la-gasolina/que-es-el-huachicoleo-y-por-que-en-mexico-se-le-llama-asi-al-robo-de-gasolina>, 2019.09.03. 검색

[온라인사이트]

Trading Economics, <https://tradingeconomics.com>

Salario Minimo, <http://salariominimo.com.mx/>

World Bank data catalog, <https://datacatalog.worldbank.org/>

한-카리브 기후외교 협력 아젠다발굴과 미래이행 방안 연구: 쿠바 그리고 도미니카 공화국을 중심으로

하상섭*

1. 21세기 국제협력 트렌드: 자유무역(FT)과 기후변화 연계 및 다각화

2018년 2월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우리나라는 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미 5개국(과테말라 제외)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다. 이는 중국, 일본 등 경쟁국에 앞서 중미 및 카리브 지역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미 우리나라는 2005년 미주개발은행(IDB) 가입을 통해 남미 인프라 개발에 대한 진출은 물론,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1960년 설립된 중미 지역 다자개발은행으로 중미 8개국과 멕시코, 스페인,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등이 참여하는 6개의 역외국 포함 총 14개국) 가입, 온두라스 테구시갈파 소재, CABEI 가입으로 향후 우리나라는 한-중미 FTA와 더불어 다양한 경제영역에서 투자 활성화는 물론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해 중미지역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특히 CABEI는 중미지역 경제개발과 통합을 위해 설립된 다자개발은행으로 중미지역 개별국가들의 정부조달 프로젝트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획득하는 등 우리나라 정부 및 기업 입장에서 자금조달이 용이해 질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임) 가입으로 중미-카리브 지역 시장 진출의 지역적 확대를 이루어 오고 있다.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2004년 남미의 칠레와 FTA를 시작으로 페루, 콜롬비아 그리고 중미 지역을 거쳐 점차 2019년 현재 태평양(태평양동맹: Pacific Alliance)을 넘어 대서양(남미공동시장: MERCOSUR)은 물론 카리브 지역(카리브경제공동체: CARICOM) 지역으로 확대 순항 중이다.

* 現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남미연구소 HK연구교수
영국 University of Liverpool 중남미지역학 박사

하지만 최근의 이러한 자유무역은 기존의 단순한 상품에 대한 관세 인하나 철폐 혹은 인적자본이나 금융투자 자본의 자유로운 국경이동에 대해 논의만 있는 것이 아니다. 21세기 환경의 시대에 들어서 무역, 특히 국가 대 국가 혹은 지역 대 지역 간 자유무역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하는 이슈는 환경보호에 대한 제도적/실질적 이행 동의이다. 예를 들어, 최근 맺은 우리나라가 맺은 한-중미 FTA 협정문 17장 1조 2항에도 “당사국들은 경제발전, 사회발전 및 환경보호가 지속 가능한 발전의 상호 의존적이며 상호 강화적인 구성 요소라는 것을 인정한다. 당사국들은 무역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전 지구적인 접근방법의 일부로서 무역 관련 환경 문제에 관한 협력의 혜택을 강조한다.”라고 합의한 바 있다. 특히 제17장 제11조에 미래 ‘협력’이 가능한 분야를 ㉠ 환경관리; ㉡ 다자간 환경협정을 포함한 환경법 집행을 위한 제도적 역량; ㉢ 청정 생산기술; ㉣ 임업; ㉤ 수질; ㉥ 대기질; ㉦ 에너지효율 및 재생에너지, ㉧ 이산화탄소 포집기술을 포함하는 혁신적 환경기술; ㉨ 기후변화 취약성 및 적응평가 조치, 그리고 ㉩ 자국의 우선순위에 따라 당사국들이 합의할 수 있는 그 밖의 환경 사안으로 명시한 바 있다. 단순한 경제협력을 넘어 환경 특히 기후변화에 대한 국가 간 혹은 지역 간 협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증거이다.

비슷한 사례로 2019년 9월 현재, 지난 20년간 논의되어 온 유럽연합(EU)과 남미공동시장(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회원국) 간 자유무역 체결이 커다란 장애물을 만났다. 스페인, 포르투갈 등 유럽의 식민 경험이라는 역사적 맥락에서 그리고 경제와 문화적 관계(스페인어 및 포르투갈어 사용권)뿐만 아니라 다양한 측면에서 유럽과 남미의 역사적 관계를 고려한다면, 오늘날 양 지역 간 논의되고 있는 자유무역 체결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닐 것으로 생각될 수 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했듯이, 21세기 들어 자유무역과 환경보호 그리고 지속가능발전, 글로벌 아젠다인 기후변화 문제(특히 브라질을 중심으로 한 남미 지역 아마존 열대우림 보호 문제)는 국가 간 혹은 지역 간 이해가 너무 상반되거나 충돌하여 또 다른 갈등을 낳고 있다. 일종의 자유무역과 환경(기후변화) 이슈 간 연계성의 저하로 인해 상호협력보다는 새로운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EU와 메르코수르는 2019년 6월 브뤼셀에서 열린 각료회의를 통해 표면적으

로는 자유무역 체결에 합의를 했지만 진행 과정에서 무역과 환경(기후변화) 이슈에 대한 서로 상반된 입장을 보이면서 갈등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EU의 핵심 회원국인 프랑스는 자국의 농업 보호와 기후변화(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 등 두 가지 문제를 들어 EU-메르코수르 FTA 진전을 반대하고 있다. 파리에서 합의한 기후변화협정에 브라질이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유럽연합 전체회원국들이 남미시장으로 수출하는 유럽산 자동차의 증가는 남미지역 대기환경에 이산화탄소 배출을 증가시키고 동시에, 메르코수르 회원국들이 유럽연합 시장으로 수출하는 남미산 농축산물, 특히 육류의 수출 증가는 동시에 아마존 열대우림의 파괴를 가속화시킬 것이며, 따라서 경제적으로 보면 양 지역 간 경쟁 우위 상품의 자유무역 확대는 상호간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주겠지만, 동시에 환경(기후변화)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경제적 이익 확대가 초래할 ‘더 큰 마이너스 효과’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무역과 환경의 관계가 조화를 이루어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으로 나 갈 것을 주문하고 있는 것이다.

위처럼 본 페이지는 향후 증가 혹은 상호 발전할 것으로 전망되는 ‘한-중미’, ‘한-카리브’지역(쿠바와 도미니카공화국) 간 인적교류, 상품 무역과 금융 투자 확대 상황을 인식하면서, 이러한 교류와 협력의 범위와 영역을 환경과 기후변화 분야에서도 동시에 확대 고려해 가야 한다는 취지하에 기획되었다(한-카리브 경제협력 이슈는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가 연구소가 2016년 연구한 “카리브 지역 연구: 한-카리브 지역 간 협력 증진 방안” 특히 선진국들의 이 지역에 대한 무역과 투자 관련 비교연구 사례 참고), 특히 이들 분야에서 가장 협력 잠재성이 높은 이슈와 아젠다를 발굴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은 카리브 지역(쿠바 혹은 도미니카공화국)의 경제사회 발전(혹은 지속가능한 발전) 부문에서 최대 장애요소로 등장한 기후변화 영향 - 예를 들어, 1) 가뭄 및 홍수, 태풍으로 인한 농업경제 피해 증가, 에너지 부족과 에너지 비효율적 분배로 인한 경제 침체, 사회 및 공공 인프라 파괴로 인한 개발의 지연과 다양한 사회소의 계층 증가, 심지어 최근의 기후변화로 인한 카리브 지역 기후난민 발생 등의 상황을 분석해 이 지역이 경험하고 있는 다양한 경제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요구된다. 이와 더불어 협력에 대한 수요조사(needs) 차원에서 이미 이들 2) 카리브 개별 국가들이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을 준수하기 위해 UN에 제출한 INDC 보고서(UNFCCC 당사국들의 기후변화 취약성 분석과 이에 대한 대응으로 적응과 완화를 위한 국가 계획)를 활용해, 특히 이들 개별 국가들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부문들에 대한 밀도있는 조사 분석을 통해 향후 한-카리브 지역 간 상호발전 혹은 국제협력의 확대를 위한 우선순위는 무엇이며, 특히 기후외교 차원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협력해야 하는 이슈와 아젠다는 무엇인지를 전망 평가해 보고자 한다.

2. 쿠바의 기후변화 취약성과 정책 발전

1) 쿠바의 기후변화 영향과 취약성

현재 쿠바 기후변화 영향 관련 다수의 전문가들이 평가하고 있는 취약성은 역시 전 세계 도서해양국가들이 공통적으로 염려하고 있는 ‘해수면 상승’과 이로 인한 연안침식(연안 저지대 거주민들의 이주와 삶) 그리고 이와 연관된 되어 발생하는 토지 상실, 토지 생산성 저하, 수자원 부족(염분의 침투)과 위생의 문제 등이다. 물론 인간생활뿐만 아니라 연안 지역의 식생(맹그로브, 산호초 군락 등) 등 다수의 생물다양성의 존립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다시 이러한 현상은 ‘인간-자연 생태 간 악순환’으로 연결되어 미래 농업 생산량 저하, 연안 농촌 공동체 파괴 이로 인한 도시나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기후난민 발생으로 결국 지속 불가능한 발전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엔개발계획(UNDP)이 2016년 카리브 지역 기후변화 관련 국제개발 협력 보고서에서도 나타나듯이 오늘날 쿠바를 포함한 많은 카리브 지역 도서해양 국가들의 기후변화 영향과 특히 취약성 극복을 위한 대응에서 가장 필요한 국제협력은 적응 부문으로 이 지역에 취약한 수자원 관리와 보존, 카리브 해양 연안보호에 가장 큰 협력 선호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효율적인 적응 전략과 이를 위한 국제협력으로 농업, 어업, 관광업 및 산림에서 지속가능한 경제 생산성 유지를 위한 국제협력 사업 혹은 협력 프로젝트가 기획되어야 한다고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다. 물론 환경과 에너지 관련 그리고 자연재해로 인한 위험감소(risk-reduction) 국제협력 프로젝트 등도 이에 포함된다. 실제로 UNDP, 쿠바정부, 과학연구소, 산림기업들이 공동 파트너로 쿠바의 남쪽 해안 맹그로브 숲 보존을 통한 적응 전략을 통해 다양한 효과들, 예를 들어, 해수면

상승 및 염수 침입 방지, 이로 인한 자연재해 위험 감소, 카리브 허리케인으로부터 방어벽 구축을 기대하고 있다(하상섭 외, 2016. ‘쿠바의 기후변화 취약성 및 대응정책 현황과 한계 연구’, 국제지역연구, 20(2), p. 231 인용).

2) 쿠바 기후변화 국제협력 선호도 및 실천 잠재성

이미 쿠바 정부가 자체 조사를 통해 UN에 2015년 제출한 국가보고서, 다시 말해서 국가 차원의 자발적 적응 전략과 자발적 기여 방안(다음과 같은 최우선 감축 실천사항을 포함하여 추진한다고 가이드라인을 제시)을 보면, 쿠바는 최우선 전략으로 쿠바가 자발 기여를 해 실천할 수 있는 적응 전략을 순서적으로 보면 ㉔ 해수면 상승, 태풍, 파도에 따른 해안 정착지 피해 최소화; ㉕ 쿠바 연안 맹그로브 숲 피해 지역 재건 및 근해 산호초 지역의 피해 최소화; ㉖ 식량생산, 수자원 관리, 영토, 산림, 수산물, 관광, 보건 등에 대한 국가 대응 프로그램 조기 기획; ㉗ 기후변동 및 환경문제 조사 평가할 수 있는 과학(기술)적 모니터링 시스템 개선; ㉘ 자연재난 예방 및 조기경보 시스템 개선을 통해 질병 및 전염병 피해 최소화; ㉙ 환경보호를 위한 다양한 연구 실행 및 경제사회발전에 맞는 환경 정책 개선, 예를 들어, 토지, 수자원, 해변, 대기, 산림, 생물다양성과 같은 자원의 합리적 이용과 미래 세대를 위한 환경 교육 강화 등을 국가 차원에서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일로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최우선 목표들을 달성하기 한 재정 전략으로 쿠바는 국가 연간 경제계획에 적응 정책 이행을 위한 재정을 명시해 특히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이 악화됨에 따라 해당 수치는 상황 조정되어야 함을 언급하고 있지만, 실제 구체적으로 국가 예산 적용 범위(실천적 예산안)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정책 이행의 취약성 존재). 다만 쿠바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근거해 선진국으로부터의 기후변화기금(녹색기후기금: GCF)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능력 배양 부문에서 국제협력을 그 대안으로 명시하고 있다(쿠바 자발적 감축방안 국가보고서 p.14).

현재 진행 중인 기후변화 영향과 취약성 혹은 이로 인한 다양한 부문에서 잠재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쿠바 정부는 그동안 기후변화 영향에 한 취약성 인식, 당장 시급한 대응 과정에서 선호도 조사 그리고 적응과 완화 부문에서 구체적인 국가 대응 전략(2015년 기후변화 대응을 한 INDC 제출)을 제시해 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 쿠바의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특히 기후변화 취약성 극복과 대응 차원에서 작성된 국가보고서 내의 선호 정책들은 현실적으로 이행 가능성은 적으며, 특히 모든 적응과 완화에 대한 재정투자나 기술(예를 들어 모니터링 및 재생에너지 개발 등) 분야에서는 지나치게 국제협력에 의존적인 특징과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특징과 한계의 원인은 쿠바의 사회주의 경제 모델 혹은 유일한 정당인 쿠바공산당의 지배라는 정치체제의 특징으로, 시장 개입을 통한 해결 방안(예를 들어 해외투자)이 어려우며, 특히 이 분야에서 국제협력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미국의 대(對)쿠바 경제재제는 지속적이다. 둘째, 대부분의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처럼 환경보호나 오늘날 기후변화 이슈 같은 문제는 국가의 다른 정책들과 비교해 혹은 제도적 차원에서 변화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지연되었다. 셋째, 이미 언급했지만 1990년 들어 기후변화에 한 인식과 대응 차원에서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국제협력을 통해 대응 수준을 조절해 오고 있지만 지나치게 개별 국가 차원의 노력이 강하며(카리브 이웃 국가들과 공동대응이나 협력 부재), 독자적으로 기후투자나 기후기술에 대한 발전보다는 지나치게 국제사회에 의존도가 강하다는 특징을 보인다. 특히 쿠바공산당이 주장하고 있는 ‘그린혁명의 국제화’ 노력은 종종 국내적 한계를 국제협력을 통해 실현하려고 하는 수사학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비판은 여타 다른 라틴아메리카 및 이웃 카리브 국가들이 기후변화 이슈를 정책이나 제도 개선을 위한 독립변수로 인식해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기후변화 관련 일반법 제정과 예산 확보, 혹은 국제협력 메커니즘 강화(기후외교 강화), 실현할 수 있는 중장기적 국가계획과 단기적 정책 이행 정도 등을 비교하면 쿠바는 상당히 약한 대응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하상섭 외 2016, p. 251 부문 참고).

3. 도미니카공화국 기후변화취약성과 정책 발전

1) 도미니카공화국의 기후변화 영향과 취약성

도미니카 공화국의 기후변화 취약성 분석에서 두드러진 분야 역시 쿠바와 같이 도서해양국의 특징인 해수면 상승이지만 많은 기후변화 취약성 관련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러한 해수면 상승에 원인이 되는 도미니카공화국만의 특징은 1) 연평균 온도 상승, 2) 연평균 강우량 감소 3) 도미니카 및 카리브 지역 해수면 온도 상승 그리고 위와

같은 현상들이 증가하면서 도미니카공화국의 경제사회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열대 폭풍의 발생 증가’(폭풍의 강도 및 빈도)로 요약될 수 있다. 기후변동에서 온도, 강수량, 해수면 온도 그리고 열대 폭풍(허리케인 등) 등의 요인들이 도미니카공화국의 기후변화 취약성을 설명하는 변수들이다

예를 들어, 온도 같은 경우에서 혹은 기후변화 시나리오 분석 모델(Regional Climate Model: RCM)에 의하면 도미니카공화국은 2080년대 이르면, 1) 평균온도가 거의 3.1°C-3.4°C 정도로 상승해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2) 강수량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3) 해수면의 온도는 +0.7°C에서+2.7°C 사이에 다다를 것이며 따라서 지난 30년 이후 오늘까지 관측되고 있는 패턴처럼 북대서양 폭풍과 열대 폭풍이 그 강도에서나 빈도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서해양국가인 도미니카공화국의 경제는 사실 많은 부분 관광산업과 자연자산에 의존도가 높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급속한 경제발전, 도시화, 관광업 증가 특히 증가하는 기후변화 취약성으로 인해 육지 및 해양의 생태환경(예를 들어 특히 수자원)들은 점차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를 인식한 도미니카공화국 정부는 그동안 정책적으로 그리고 개도국의 입장에서 많은 국제협력을 통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 오고 있지만 카리브 해양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문제인 재정 취약성 문제해결을 위한 과학기술의 한계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2) 도미니카공화국의 기후변화 대응과 국제협력

쿠바와 마찬가지로 도미니카공화국도 개별국가 입장에서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과 지구 온도 상승 방지를 위한 가장 우선해야하는 국가 계획과 적응 및 완화 전략 혹은 장기적 관점에서 자발적 기여방안을 계획해 UN에 제출한 바 있다(2030년 목표). 특히 이러한 국가 차원의 기후변화 분야 기여 방안을 2030년 국가발전 전략을 위한 공공정책으로 접목해 실현 가능성을 배가 시키고 있다.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특히 기후변화 ‘적응’ 분야에 대한 정책 선호도를 나타내고 있다.

정책 및 전략적 선호도 차원에서 도미니카공화국의 기후변화 관련 자발적 기여방안을 살펴보면, 우선 현재 2010년도를 기준으로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3.6 tCO2e)

을 2030년까지 25% 줄인다는 목표를 설정했다(특히 이 분야에 대한 기후금융 확보 시 조건부). 이행을 위한 시기적 조건은 2010-30년 사이로 목표를 정했으며 정책이 적용되는 범위는 순차적으로 에너지 부문, 산업공정과 생산이용 부문, 농업 부문, (고체) 쓰레기 부문 그리고 마지막으로 토지이용 변경과 산림 부문을 중심으로 이산화탄소, 메탄 그리고 아산화질소를 전국을 대상으로 저감한다는 계획을 작성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도미니카공화국은 기후변화 국가정책을 국가발전전략과 병행해 추진한다는 구체적인 계획 과정을 명시한 바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기후 양립 발전계획(Climat Compatible Development Plan: CCDP) 그리고 '도미니카공화국의 기후행동을 위한 적응계획(National Adaptation Plan of Action: NAPA-DR)을 발표했다.

도미니카공화국은 특히 기후변화 문제를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해결한다는 방침을 세운바 있으며 특히 탄소시장메커니즘 참여에 많은 정책을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전략은 국제협력 차원에서 보면 이웃 사회주의 국가인 쿠바와는 상당히 대조적이다. 국제협력 방식에서 국제기구나 국제사회의 기후협력 방식이 쿠바의 경우 국가 간 혹은 무상지원의 성격이 강하다고 한다면, 도미니카공화국 같은 국가는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해 시적부문의 해외투자를 유인해 해결한다는 성격이 상당히 강해서 대조적이다. 물론 도미니카공화국의 자유시장 경제체제나 경제 규모가 이웃 카리브국가들 혹은 쿠바와는 달리 이 지역에서는 중소득국 국가이지만 여전히 이 지역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 특징들은 공유하고 있다. 예를 들어, 빈곤, 교육, 의료와 건강 그리고 치안과 안보 이슈들이 이 지역의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정책들의 실질 이행과 미래 실천을 막는 장애요소들이기도 하다. 사실 도미니카공화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글로벌 전체 배출량의 0.1%로 전체 라틴아메리카 지역 평균 1인당 배출량(4.9 tCO₂e)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상당분의 온실가스가 경제활동, 특히 교통, 에너지, 제조업 및 건설업과 쓰레기 및 농업 부문에 비중을 두고 배출된다는 문제가 있다.

기후변화 '적응(adaptation)' 부문은 도미니카공화국의 헌법적 선호도를 가지고 있을 만큼 중요한 부문이다. 특히 가장 효율적인 적용 부문에 대한 정책 이행을 위해 도미니카공화국 정부는 "식수, 에너지(전력생산부품), 보호지역에 대한 국가시스템, 거주지 및 관광 부문을 가장 취약한 부문으로 정의하고 이에 대한 적용 정책을 마련하

거나 혹은 국제협력을 유도해 오고 있다. 적용을 위한 국가 전략은 '생태계 기반/ 생태계 회복'을 위해 국가능력 배양, 부문별 취약성 극복, 수자원 통합 관리, 의료, 식량 안보, 인프라, 가뭄과 홍수, 연안과 해양 지역 관리, 위험관리 및 조기경고시스템 등에 집중해 전략을 제시해 오고 있다.

도미니카공화국의 2015년 UN에 제출한 INDC 보고서에 의하면, 기후변화 영향으로 인한 '손실과 피해'의 대부분은 대서양 및 카리브 지역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허리케인 활동들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수문기상(hydro-meteorological)에 의해서 발생하는 열대성 폭풍이나 가뭄, 그리고 허리케인이 인간 거주와 생산 활동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수년에 걸친 위와 같은 열대성 폭풍과 가뭄같은 수문기상 관련된 피해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도미니카공화국의 경제사회적 부문에 피해를 낳았다. 예를 들어 1998년 허리케인 조조지(Georges)는 도미니카공화국 GDP의 14%에 해당하는 손실과 피해를 입힌 바가 있으며, 2007년 열대성 폭풍 올가(Olga GDP 1.2% 피해)와 노엘(Noel, GDP 5.3% 피해)에 대한 경제사회적 피해는 도미니카공화국 정부의 거시경제 정책 선호도를 바꿀 정도로 큰 피해를 주었다(홍수, 산사태 및 가뭄을 포함한 많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는 계량화되지도 않았음, 2015년 INDC-DR 보고서, p. 3 참고 인용). 실제 경제적으로 추산을 해 보면 약 10억 달러(보고서엔 USD 9,470 million 달러) 가까운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으며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은 분야들은 농업, 교통(운송), 에너지, 주택, 교육, 산업 및 무역, 위생, 배수, 건강 및 환경 분야에서 발생했다고 보고되고 있다. 도미니카공화국의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일종의 기후금융 조달 방식을 보면, 수자원 부문의 경우, 2010-2030년 사이 기후변화 전망 기본 시나리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증가하는 적응 비용은 해당 기간에 예상되는 GDP의 평균 0.48%로 비용으로 환산하면 약 30억 달러(USD 2,792.5 million 달러, 2005년 기준)로 예상하고 있으며, 특히 경제발전에서 중요한 도미니카공화국 관광 부문은 향후 수문 기상 현상의 결과에 다양한 피해를 직면해야 할 것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2005-2030년 동안 약 3억 6,000만 달러 (2005 기준)의 재정 투입이 요구된다고 보고서는 발표하고 있다.

도미니카공화국이 계획하고 있는 기후변화 '완화(mitigation)' 측면 그리고 이와 연

계한 '기후조화발전계획Climate Compatible Development Plan: CDDP'의 시행을 위해 도미니카공화국 정부가 계산하고 있는 기후투자 혹은 금융은 2010-2030년 동안 에너지, 운송, 임업, 관광업, 고형 폐기물 및 시멘트 부문에서 대략 170억 달러(2010년 기준)의 비용이 예상되고 있다(예를 들어, 25 MtCO_{2e} 정도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이에 더하여 그린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인적자원 강화 국가 전략에 소요되는 비용은 연간 150만 달러로 이를 통해 고등교육, 기술교육 혹은 기후변화 관련 특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미래 인적 자원을 양성한다는 국가 계획도 마련한 바 있다. 이에 더하여 도미니카공화국은 국가차원에서 관리 운영해야 하는 전략들의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예를 들어, '도미니카공화국 기후행동을 위한 국가 적응계획(National Adaptation Plan of Action: NAPA-DR) 기술수요평가를 발전시켜오고 있기도 하다.

4. 한-카리브 국제협력 및 기후외교 강화 전략

미국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미-중 무역 갈등 그리고 한-일 간의 무역규제 등의 문제는 오늘날 기존의 글로벌 자유시장의 확대는 물론 국가 간 자유무역의 흐름을 방해하는 최대 변수들로 등장했다. 이에 더하여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오늘날 자유무역의 영역은 전통적인 경제 및 무역 관련 협상에서 벗어나 환경 이슈나 혹은 기후변화 같은 글로벌 이슈들과 연결선상에서 협상이 진전되거나 혹은 방해받기도 하는 새로운 협상 트렌드를 보이고 있다. 특히 국가 간 국제협력에서 무역+기후변화, 무역+안보, 등의 이슈들이 점차 혼합되거나 혹은 다면적 융합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오늘날 국제협력의 경향들을 토대로 우리나라에게 중미-카리브 지역의 협력도 따라서 많은 변화가 요구된다. 특히 이 지역의 갖고 있는 중요성은 단순하게는 UN에 등록된 많은 국가들과 선린외교 강화에 국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미 한-중미 FTA를 시작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영토가 중미-카리브 지역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한-카리브경제공동체와 자유무역협상 가능성). 비록 1960년대 이후 오랫동안 외교 관계가 단절되어 있지만, 카리브 지역 대국(약 1,100만 인구와 점차 자유시장체제로 경제개혁 중)인 쿠바와의 관계(한반도에서 남-북 간 관계 변화와도 민감하게 반응) 변화가 최근에는 경제 투자나 문화 협력(k-pop, 인적교류 및 쿠바에

서 한국관광객의 급속한 증가) 방면에서 나타나고 있다. 도미니카공화국과도 많은 부문(농업기술 부문, 의류 분야 등)에서 협력이 강화되어 오고 있다. 특히 중앙아메리카 국가들과 공동으로 참여 중인 CAFTA-DR(중미-도미니카공화국-미국을 연결하는 FTA)에서 도미니카공화국(약 1,000만 인구)의 역할은 중요해 보인다. 특히 우리나라 기업들의 미국시장이나 중미 혹은 이웃 카리브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 역할(거점) 국가로서 활용은 상당히 기대되고 있다.

카리브 지역의 쿠바와 도미니카공화국이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 중요성, 우리나라의 전략적 외교적 관계 복원, 카리브경제공동체 시장에 우리나라 기업들의 시장 진출 가능성 특히 이들 양국과의 무역확대 가능성(양국 모두 인구 1,000만 이상)은 오늘날 카리브지역의 많은 도서해양 국가들에서 양국이 가진 장점들이다. 이러한 장점을 가진 국가들과의 국제협력 강화는 위에서 분석 평가(특히 이들 개별 국가들의 국제협력 수요조사)에서 나타났듯이 국제사회에 가장 시급하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분야가 기후변화 관련 아젠다와 국가이행계획이다. '적응'과 '완화' 부문 모두 중요하게 국제 협력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당면 과제들로 이들 국가들의 INDCs는 분석과 선호도 평가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더욱 협력이 시급한 분야들은 '적응' 분야들로 평가된다. 중미-카리브 지역 및 기후변화 분야에 대한 국제협력 전문가들의 지혜가 빨리 모아져야 한다.

Abstract

Finding Cooperating Agenda for Climate Diplomacy and A study on the Future Implementation Plan

Ha, Sang Sub

This paper is asking about the geopolitical significance of the Caribbean. E.g. Cuba with the resilience of Korea's strategic diplomatic relations and Dominican Republic with the possibility of Korean companies entering the Caribbean market, and this small paper is also asking the strengths of both countries in many Caribbean islands, especially the possibility of expanding trade with these countries(both over 10 million in both countries) today based on the current Korea-Central American FTA(not about economic meanings or interests but more environment and climate change issues here). For strengthen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with these countries, this paper analyzes what are the main priority and advantages as the most urgent needs based on particularly the international co-operative demand surveys of these individual countries such as INDCs reports which they already submitted to UN. Both the 'adaptation' and 'mitigation' sectors are important challenges to be resolved through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the INDCs of these countries are analyzing and evaluating preferences, but the more urgent areas of cooperation are evaluated as 'adaptation' fields.

중미의 다양한 층위의 이야기 및 우리나라와의 관계

*이태혁

1. 들어가며

2019년은 우리나라와 중미의 관계에 역사적인 해이다. 작년에 체결했던 한-중미 5개국 간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이 올해 10월 1일부로 발효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본 협정의 의미는 아시아국가 중 처음으로 중미 5개국과 FTA를 체결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일본, 중국 등 경쟁국과 비교해 중미지역 시장을 선점한 효과가 있다. 더불어, 이 지역은 지리적으로 라틴아메리카의 중간, 즉 '허리'인 만큼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 북미와 콜롬비아, 페루, 칠레 등 남미지역을 연결하는 미주 FTA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이는 미-중 무역 전쟁 및 일본의 수출규제 등 국제무역 질서의 불안정이 확대되는 작금의 국제정세에서, 우리나라의 중남미 신규시장 개척 및 본격적인 수출시장 다변화에 초석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와 중미의 관계가 FTA라는 경제플랫폼을 활용해 새로운 모멘텀을 구축하는 오늘, 우리는 실상 중미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

커피메뉴 정도이지 않을까 한다. 즉 커피에 대한 대중적 인기에 따라 커피문화가 확산되어, 커피전문점에서 싱글 오리진 커피 메뉴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바로 과테말라를 비롯한,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그리고 코스타리카 등 중미 5개국 산 원두커피다. 때문에 요즘 부쩍 중미지역의 국가명이 예전에 비해 낯설지 않은 것 같다. 더불어, 과테말라를 위시로 하는 마야문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학교나 언론을 통해 접한 바가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중미의 스위스라고 불리는 코스타리카가 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에 종종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온두라스를

* 現 부산외국어대학폭 중남미지역원 HK 연구교수
영국 York University 국제정치학 박사

위시로 하는 중미의 다른 국가들에 대한 부정적인 면들을 또한 자주 대중매체 등을 통해 접하게 된다. 특히, 작년 하반기에는 미국 망명을 희망하는 중미 국가 이민자 행렬, '카라반'이 전 세계 이목을 집중하기도 했다. 온두라스에서 200여명으로 시작된 이민자 행렬은 마약과 결부된 치안의 부재 그리고 빈곤으로 인한 삶의 피폐 등으로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국가로 이동하며 이 국가의 국민들과 세를 불러 무리를 이루어 수천 명이 넘는 이주민들이 미국 국경으로 향한 일이 보도된 바 있다. 이처럼 중미의 같은 지역 내에서도 국가 간 차이가 존재한다. 더불어, 국가 간 오랜 국경전쟁으로 반감의 역사, 그리고 국별 내전과 인종적 차별로 인한 아픈 역사 또한 있다. 이와 결부해서 과테말라 내전 기간 동안 과테말라 토착민의 인권과 권리향상을 위해 싸운 과테말라 출신의 여성운동가인 리고베르타 멘추가 1992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와 같이 중미는 다양한 층위의 이야기를 품고 있다. 따라서, 본 원고는 역동적인 중미의 여러 단면들을 고찰하고자 함에, 현재의 모습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이 품고 있는 그 역사성을 통시적으로 먼저 들여다보고자 한다. 이 가운데서 중미 국가들 가운데 공통적인 부분과 그리고 구별되며 구분되는 내용 등을 돌아보며 그 이유를 확인한다. 끝으로 결론 부분에서는 지구촌, 글로벌 사회의 초국가적 사회 가운데 우리나라가 중미지역 단위의 경제적 협력과 더불어 개별 국가의 사회적 필요를 알고 이에 대한 협력 방법을 모색한다.

2. 중미지역(연방공화국)의 형성 및 분리 그리고 함의

중미(Central America)는 지리적으로 과테말라, 벨리즈,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그리고 파나마로 7개 국가를 일컫는다. 하지만 역사 그리고 문화적으로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그리고 코스타리카 5개국은 벨리즈와 파나마와 달리 공유하는 바가 크다.* 스페인 식민지 시절 누에바 에스파냐(Nueva

* 벨리즈는 16세기 스페인령으로 멕시코에 편입되었으나, 17세기 영국인들이 들어와 살면서 1862년 영국령이 됨. 영국령 온두라스로 불림. 1981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함. 벨리즈는 현재 영연방(Commonwealth of Nations) 회원국임. 따라서, 지리적으로 중미지역에 속해있지만 문화적으로는 영국의 영향이 강한 카리브권임. 또한, 파나마는 남미의 콜롬비아로부터 1903년 독립할 때까지 콜롬비아의 일부 지방에 불과했음. 때문에, 지리적으로 역시 중미권이지만 역사와 문화적으로는 남미권역의 유산이 산재함.

Espana) 부왕청하의 이상의 5개국은 과테말라제국으로 칭하며 행정상 하나의 통치지역 이었다. 그리고 이 과테말라제국의 영토 위에 스페인으로부터 독립 후 1823년부터 1838년, 15년간 자유주의 원칙에 입각한 중미연방국가가 설립되었다.



자료: Google Map

하지만, 중미연방국가는 자유주의와 보수주의자들 간의 지속된 대립 속에 중미지역 통합의 역사는 길지 않았다. 중앙연방정부의 아르세(Manuel Jose Arce) 초대 수반은 연방 군대를 강화시키고 조세정책을 확보함으로 새로운 국가체제를 정비하고자 했다. 하지만, 당대 자유주의 정부는 보수 대지주층을 대표하는 지방 정부와의 불협화음, 교회세력과의 갈등 그리고 농민들의 반기 등의 소용돌이 속에 1838년 중미의회는 중미연방국가 해체를 공표하며 역사 속 뒤안길로 사라졌다. 따라서, 중미연방국가는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그리고 코스타리카 독립국가로 재탄생하게 되었다.

이상과 같이 15년 간 통합된 중미연방국가는 5개 국가로 분리되며 비슷하지만, 서로 다른 국가의 모습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특히 코스타리카는 중미 4개국과는 구별되는 정치·경제 발전의 모습을 구가하게 되었는데 이는 민주주의 초기 정착이 가장 두드러지는 설명변수다. 따라서, 다음 섹션에서는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그리고 니카라과가 코스타리카에 비해 민주주의가 늦게 정착하게 된 이유 등을 돌아보며 이는 현재적 중미 국별 정치 및 경제 상황을 구분 짓게 하는 주요 요소임을 고찰

한다.

3. 중미국가, 미국 그리고 민주주의

경제발전과 민주주의의 상관관계 연구는 근대화이론(modernization theory)의 접근으로 연구되었다. 달(Robert Dhal)은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민주주의가 국가가 되기 쉽다고 주장한다. 이에 덧붙여 립셋(Semyour M. Lipset)은 “나라가 부강할수록 민주주의를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피력한다. 이상과 같이 경제성장 정도가 민주주의로 이행 및 공고화하는 데 중요한 매개체이자 변수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과테말라를 위시로 하는 중미 4개국은 근대화로 진행할수록 즉 경제성장할수록 민주주의로 이행보다는 오히려 독재, 권위주의의 양상을 띠게 되었다. 다시 말해, 경제발전이 진행될수록 권위주의 정부 성격을 취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후발전국에서 볼 수 있는 양태다. 하지만, 그 예외적 범주의 국가가 코스타리카이다. 코스타리카 역시 후발전국에 속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타리카는 중미 타 4개국과 다른 경로로 이동했다. 이를 바탕으로 코스타리카는 현재 라틴아메리카에서 모범적인 국가의 모습을 구현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 동력과 이러한 이유는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

선행 연구 등에 따르면 지리, 인구, 자원과 같은 환경적 조건과 이로 인해 형성된 식민지적 역사성에 기원을 둔 사회경제적 시스템에 그 기원을 찾아 볼 수 있다 (김달관 2004, 임상래 2016). 따라서 이러한 사회·경제적 자본이 ‘건전한’ 정치문화의 자양분이 되었다. 이러한 밑거름이 스페인 식민지의 역사성을 공유하고 있는 중미 5개국 가운데 코스타리카가 사뭇 다른 국가체제로 이행하게끔 한 주요 동력이다. 즉 ‘코스타리카식 발전’이다. 그리고, 이러한 코스타리카식 발전은 사회적 기업을 바탕으로 하는 사회적 경제방식으로 그 사회경제적 포용성이 확장됨에 따라 코스타리카는 영국 신경제재단이 선정하는 ‘행복지수 1위’ 국가라는 전지구적 타이틀도 갖게 되었다.

코스타리카가 이러한 ‘기이한’ 발전을 구가하게 된 바를 역사적 경로성을 따라가며 그 중요한 지점(critical juncture)마다 의미를 부여하고자 한다. 이러한 사뭇 다른 발전경로는, 역설에 그 해답이 있다. ‘풍요로운(rica) 해안(costa)’이라는 이름과는 어울리지 않게 코스타리카는 여러 면에서 풍요롭지 않았다. 오히려 미흡했다. 중미 4개

국에 비해 금·은 등 귀금속의 생산 매우 적었으며, 아울러, 인구 규모도 타 국가에 비해 터무니없이 부족했다. 즉 가용할 노동력이 부족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코스타리카는 지리적으로 중미 최남단에 위치해 있어 멕시코에 있던 누에바 에스파냐 부왕령이나 과테말라 총사령부로 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식민초기부터 코스타리카는 스페인 정복자들로부터 관심에서 멀었다.

중미 타 지역에 비해 금·은 등 자원매장이 협소했던 코스타리카에 스페인 정복자들은 본인들에게 부여된 토지 및 노동력 사용 권한인 엔코미엔다(encomienda)제도를 통한 농업과 목축업에 관심을 돌렸다. 이 또한 앞서 언급한 코스타리카는 중미 타 국가 지역에 비해 원주민의 수도 적었던 만큼 스페인으로부터의 이주자들* 본인이 직접 농업 등의 노동에 종사하며 생활을 이어나가야 했다. 1800년 초 코스타리카 지역에 거주했던 인구는 약 5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특히 이 가운데 태평양 연안 쪽에 일부 대농장을 소유한 농장주도 있었으나, 대부분은 소농으로 차카라스(cha caras)라는 가족농장을 소유했다 (여승철 2019). 이와 같이 코스타리카에 정착한 스페인들의 일손 부족으로 본인이 직접 소농이 되어 가족농을 경작을 했다. 따라서, 인종에 따른 계급 간 갈등이 비교적 적었던 사회·경제적 자본의 모습이 구현됨에 따라 평화와 평등 그리고 민주주의이라는 정체성이 탑재된 코스타카식 발전으로 견인되었다.

이에 반해, 무어(Barrington Moore)의 “독재와 민주주의 사회의 기원” (1966)에서 연구한 바에 비추어 본다면, 대규모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플랜테이션 농업체제에서는 민주주의 발전이 어렵다는 것이다. 즉 과테말라를 위시로 하는 중미 북쪽 지역은 토지가 비옥하고 원주민 등 노동력이 풍부함에 따라 대토지 소유계급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토양”인 것이다. 즉, 이러한 사회·경제적 상황이 추후 중미 4개국 지역에 억압적이고 권위주적인 국가가 등장하게 한 자양분이다. 그에 반해, 앞서 설명한 바대로 코스타리카는 가족농 형태의 소농이 발달한 만큼 사회적 위계 보다는 평등과 협동 등의 사회적 자본이 일찍부터 형성되었다. 중미 전체를 ‘커피 공화국’으로 칭하는 만큼 커피가 주요 생산품인데 아래 <표 5-1>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중미 국별 커피규모에 따른 커피 재배면적과 생산을 볼 수 있다.

* 스페인에서 태어나 중남미로 이주 및 거주자들을 페닌슐라레스(Peninsulares)라고 함. 그리고, 스페인 본토가 아닌 라틴아메리카에서 태어난 백인을 크리오요(Criollo)라고 칭함.

<표 5-1> 커피 규모에 따른 커피 재배면적과 생산*

범주	재배 면적	코스타리카(1955)		니카라과(1957)		엘살바도르(1940)		과테말라(1966)	
		농장수	비중	농장수	비중	농장수	비중	농장수	비중
재배면적(Manzana)									
소농	0-4.9	19,049	33.6	5,762	11.4	9,768	18.9	25-30,000	11.6
가족농	5-9.9	1,775	14.2	2,059	13.1				
소경영농	10-49.9	979	22.1	1,256	22.6	1,322	27.4	606	4.6
기업농	50-99.9	101	8.6	314	19.2	263	16.4	1,148	17.2
대기업농	100+	83	21.6	212	33.6	192	37.3	636	66.5
소계		21,987	100.1	9,603	99.9	11,545	100.0	330,900	99.9
총 면적		80,574		123,253		117,216		330,900	
커피생산(Quintales)									
소농	0-4.9	5.6	29.5	1.2	3.5	7.4	13.5		13.1
가족농	5-9.9	5.7	12.7	2.7	9.3				
소경영농	10-49.9	5.9	20.3	3.9	22.9	10.7	28.4	12.8	7.3
기업농	50-99.9	7.3	9.8	4.3	21.3	12.5	19.7	8.6	17.1
대기업농	100+	8.2	27.7	4.9	42.9	11.9	38.4	7.6	62.4
소계		6.5	100.0	3.9	99.9	10.6	100.0	6.6	99.9
총 면적		522,998		474,683		1,891,201		2,188,517	

자료: 김달관(2004:41-418 재인용), Paige(1997:60-61)

상기 <표 5-1>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앞서 설명한 바대로 코스타리카 지역, 식민지 시대의 유산인 소농 형태의 가족농이 1950-60년대에도 커피 농장에서도 지속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가족농, 소농형태의 산업사회 체제가 코스타리카 민주주의, 평등이라는 가치에 기저이자 동시에 동력이었다.

이와 덧붙여 코스타리카가 현재적 민주주의 체제 확립과 공고화 그리고 복지 부문에서 중미 타 국가와 비교해 탁월하게 된 역사적 동인이 하나 더 있다. 이 또한 역사적이다. 내전이 오히려 코스타리카를 한 단계 진일보 시킨 것이다. 1948년 발생한 내전으로 모두 2,000여 명이 사망 하는 등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러한 코스타리카 현대사의 가장 비극적인 이 사건의 결과로 군대 폐지 내용을 담고 있는 신헌법이 제정되었다. 그리고, 이 신헌법에 따라 추후 다시금 군대를 창설할 시 헌법을 개정하게끔 함으로써 다른 중미 국가들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며 민주 정치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었던 군부세력의 쿠데타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다 (여승철, 2019).

* 1 Manzana = 0.69 ha, 1 Quintal = 100lbs.

소농: 가족의 노동으로 커피재배
 가족농: 가족의 노동으로 충분하나 수확기에 최소의 노동고용이 필요한 농장
 소경영농: 필요시 추가적으로 일부 노동 고용함. 하지만 기본적으로 자체 경영과 노동으로 충분함
 기업농: 경영 측면에서 고용이 필요하고 노동 측면에서도 고용이 필요한 기업적 농업
 대기업농: 여러 기업농을 합친 규모의 농업

또한, 코스타리카가 중미 타 국가에 비해 민주주의가 먼저 성숙하게 된 것, 그리고 동시에 중미 4개국이 민주화가 늦게 진행된 것에는 외생적 변수가 있다. 즉 미국이다. 제 2차 세계 대전 이후 냉전체제의 이념적 갈등 가운데 미국은 1959년 쿠바발 사회주의 혁명 등과 맞물리며 라틴아메리카 전역의 공산주의에 대한 강력한 견제와 탄압을 가했다. 특히, 워싱턴은 중미 각국의 우익 군사 독재 정부에 대한 경제, 군사 지원을 통해 좌익 세력에 대해 공세를 펼치며 중미 지역의 인권탄압과 민주주의 정착의 소원함을 야기했다. 하지만, 코스타리카 경우 앞서 설명한 1948년 내전으로 반공산주의 정권인 피게레스(Jose Figueres Ferrer) 정부가 등장하며, 공산주의 활동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었다. 중미를 포함한 미주 지역의 미국발 이념이 정착된 헤게모니적 국제정치적 토양 가운데 불현 듯 1979년 니카라과에 사회주의 혁명이 성공을 거둔다. 니카라과에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다음 섹션은 중미 지역의 또 다른 국가로, 이 지역에서 유일하게 사회주의 혁명이 성공한 니카라과의 “또 다른 이야기”를 살펴보며, 중미지역의 다층적이며 역동적인 모습을 담아 본다.

4. ‘진행형’(?) 인 니카라과 혁명

니카라과는 1937년부터 장기 독재시대에 접어들었다. 미국의 군사적 지원을 받은 소모사(Anastasio Somoza Garcia)는 1934년 산디노(Augusto Cesar Sandino)를 암살하고 당시 정부 수반인 사카사(Juan Bautista Sacasa)를 퇴임시키며, 3대에 걸친 장기독재의 시대를 열었다. 그리고 이 소모사 가문은 허수아비 대통령들의 배후 인물을 내세우며 1979년까지 42년간 니카라과를 지배했다. 그리고, 니카라과의 ‘하늘’은 1979년 혁명으로 바뀌게 되었다.

새로운 시대를 펼치게 된 산디니스타 신정부는 사회주의적 요소와 다원주의적 요소 간의 접점을 정치적 지향점으로 두었다. 즉 경제에서는 혼합경제 모델, 그리고 외교는 비동맹노선을 취했다 (Krumwiede, 1983; 백종국, 1995; 박은홍, 1994; 신진욱, 1995; 이태혁, 2018). 다시 말해, 1980년대의 ‘니카라과식’ 사회주의적 정치토양은 타 사회주의 정권과의 차별성을 둔 것이다. 민주적 사회주의라는 원칙이 강조되었다. 이 정향은 의회민주주의/자유민주주의적 다원주의의 합리적 핵심을 수용하고, 동시에 자본주의의 착취 및 불평등에는 도전하며 그리고 레닌주의적인 프롤레타리아 독재론/일

당통치를 거부 하는 것이다. 자유의 방점이 있는 민주주의 그리고 평등을 강조하는 사회주의의 결합으로, 민중에게모니(민중민주주의)를 정향으로 내세운 것이다 (신진옥, 1995; 박은홍, 1994; 이태혁, 2019).

하지만, 결과적으로 사회주의 혁명으로 바뀐 ‘하늘’ 아래 외부적 간섭(개입)과 내부적 반목 그리고 이에 대한 정치적 결정으로 사회주의 실험이 10년 만에 일단락되었다. 친미 부르주아 분파가 주도하는 UNO(Union Nicaraguense Opositora)가 선거에서 승리했으며, 자유주의의 새로운 정치적 균형으로 진행하게 된 것이다. ‘민주적 사회주의’를 표방하며 새로운 사회주의 모델을 장착한 산디니스타 정부가 어떠한 외부적 개입과 내부적 불협화음으로 ‘실험’에만 머물게 되었는가? 산디니스타 혁명정부가 자유와 평등의 이념을 동시에 추구하는 민주적 사회주의를 표방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이 정부가 단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정치적 유산과 정권을 재창출하기 위한 산디니스타, 특히 오르테가의 대권도전 4수(四修)의 ‘학습’*이 오르테가가 정권을 탈환한 이후 개헌 등을 통해 장기집권으로 옮겨가게끔 한 단초라고 볼 수 있다 (이태혁, 2019).

그리고, 이러한 ‘불씨’로 인해 지난 2018년 4월부터 니카라과 국민들이 길거리에서 ‘타이어’를 태우며 오르테가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 ‘또 다른 혁명’이 진행되고 있다. 역설적으로 1979년 혁명의 ‘주체’가 현재적 혁명의 ‘대상’이 되어버린 작금의 니카라과 정치적 상황을 확인 할 수 있다. “권력은 썩는다. 절대 권력은 반드시 썩는다”는 영국의 액턴 경(Lord Acton)의 통찰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오르테가 현 대통령의 장기집권 야욕과 이와 결탁된 각종 부정부패가 작금의 니카라과의 모습을 설명한다.

하지만, 시민들이 거리로 나선 것, 특히 1979년 사회주의 혁명을 겪지 않은 대학생 등 젊은 세대들이 반정부 시위를 주도하는 것은 시사 하는 바가 크다. 더욱이 이 세대들은 facebook 등 사회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하며 기성세대의 정치적 행태에 대해 불편함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일방적 연금개혁안 인상에 대한 발표로 촉발된 반정부 시위가 아직도 니카라과의 정치경제 그리고 외교적 걸림돌로 작동하고 있다. 지속된 반정부시위 속에 출구가 없어 보이는 작금의 사회 상황 가운데 “니카라

* 오르테가는 1990년 정권을 “평화적”으로 자유주의 정부에 이양한 이후 지속적으로 대권에 도전함.

과는 평화의 나라입니다. 더 이상의 유형 피해가 없길 기도해요. 니카라과의 평화를 [...]” 외친 한 시위 참여자의 목소리가 있다 (이태혁, 2019). 이러한 바람이 오르테가 현 정부에 온전히 전달되길 기대해 본다.

5. 결론에 대신하여

역사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유산 그리고 중미통합(SICA)으로 지역통합을 진행하고 있기에 우리는 지역단위로 중미를 묶어 놓는다. 하지만, 앞서 일부만 살펴보았지만, 중미 지역을 구성하고 있는 국가별 그 다양성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미 지역이 품고 있는 공통적인 요소이자 가장 큰 문제점은 가난과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불평등이라고 볼 수 있다. 중미지역은 중남미카리브 전 지역의 평균 수준보다도 경제적으로 뒤쳐져 있다. 경제적 빈곤도 문제겠지만 오히려 더 큰 문제는 경제적 불균등한 분배라고 볼 수 있다. 불평등한 부의 분배 문제와 인권탄압은 중미 지역에서 내전과 사회 불안의 가장 큰 요인이 되어왔다. 중미 지역의 빈부 격차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높으며, 고질적이고 심각한 사회 문제로 끊이지 않고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모습을 쉬이 확인할 수 있다. 가령, 앞서 제시한 바 있는 자국의 대탈출(exodus)의 일환으로 중미 이민자 행렬 카라반이 전 세계적으로 큰 이슈가 되기도 했다. 하지만, 동시에 앞서 설명한 코스타리카와 같은 중미의 ‘독특한’ 국가는 다른 정치·경제·사회적 패턴을 보이며 국제사회에서도 모범국가로 간주된다. 이와 같이 한 지역에 두 가지 서로 다른 모습들이 존재하며, 또한 ‘동일한’ 모습 가운데 스펙트럼이 넓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중미지역의 이와 같은 다층적이며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동시에 중미의 긍정적 유산을 글로벌 차원에서 공유함으로써 포용적 발전의 동력으로 향유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와 중미 간의 경제·통상적 차원의 자유무역협정의 시너지를 활용하며 국제 개발협력으로 확대함으로써 그 방향을 찾아볼 수 있다. 즉, 우리나라는 아시아 국가들 가운데 최초로 중미 5개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작금의 글로벌 경제시장의 불확실성 가운데 중미를 레버리지로 활용해 경제적 이득을 확보할 수 있다. 아울러, 이번 협정으로 북미(미국·캐나다)와 남미(페루·칠레·콜롬비아)를 연결하는 미주 자유무

역협정 네트워크 구축 및 대미 수출의 동력으로 이어나갈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이와 같은 중미와의 확대된 경제·통상적 협력관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적극적인 국제 개발협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는 현재 남미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국제개발협력 중점협력 대상국(콜롬비아, 페루, 볼리비아, 파라과이)에서 중미지역의 국가로 확대 개편 및 조정이 제기된다.

아마르티아 센(Amartya Sen)은 개발은 “인간의 자유 증진에 장애가 되는 요소들 - 빈곤, 독재, 경제적, 사회적 기회의 박탈, 공공시설의 부족 등-을 제거해 나가는 과정” 이라고 주장했다 (1999). 이러한 통찰력을 바탕으로 UNPD HDI(인간개발지수)* 돌아보면 도미니카공화국만 100위권 안에 진입해 있으며, 중미 다른 국가(과테말라 127:온두라스 133:엘살바도르 121:니카라과 124)에 위치해 있다. 중미는 사하라이남 및 서남아시아 지역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총체적으로 열악한 상태에 있다. 따라서, 국제사회가 합의한 전지구적 목표인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s) 가운데 우리나라의 강점인 교육부문에 대한 다각적 협력을 중미 지역에 진행할 수 있다. 더욱이 SDGs 16번째 목표인 ‘거버넌스, 평화 및 안보’에 대한 개발협력을 중미지역에 적극적으로 추진할 여지가 있다. 중미지역의 만성적인 빈곤과 마약밀매 그리고 각종 범죄를 효과적으로 대처 및 응대하기 위해서는 행정역량강화가 필요하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강점인 행정분야를 한국형 공적개발원조(ODA)를 활용해서 이 지역에 협력할 수 있다.

인간은 태어나 행복을 추구할 자유가 있다. 이를 온전하게 추구할 수 없는 상태가 빈곤이다. 단순히 계량적 지표로써 접근할 것이 아니라 총체적 접근을 제시한 센(Sen)의 혜안이 제한적이지만 코스타리카에 확인할 수 있다. 본고에서 설명한 바 있는 코스타리카의 ‘두드러짐’의 역사·문화적 요인들이 있었다. 이와 같은 유산을 현재화 시킨 것이 사회적경제다. 즉 소규모 생산자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현재 코스타리카 전체 경제활동 인구 130만 명 가운데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종사하는 인구가 20만 여명으로 전체 고용의 16%를 차지한다 (김영식 2017). 이와 같이 발전된 코스타리카의 유산을 우리나라가 ‘삼각협력’**이라는 개발협

력 모델을 통해 중미 타 국가에 지원 및 협력할 수 있다. 즉 우리나라는 코스타리카에서 가령 ICT 또는 행정적 지원 등을 하며 이를 바탕으로 코스타리카는 중미의 다른 국가들에게 사회경제시스템 등을 공유하며 협력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협력메커니즘을 통해 우리나라가 중미에 그리고 중미 국가 가운데 긍정적인 유산 및 성과를 타 국가에 공유함으로써 우리나라와 중미간 FTA를 통한 경제적 파트너십인 ‘아미고(친구-스페인어)’를 넘어 진정한 ‘에르마노(형제-스페인어)’로 나아갈 마중물이 되길 기대해 본다.

* 유엔개발계획(UNDP)이 1990년부터 발표하는 인간개발지수(HDI)는 기대수명(Life Expectancy), 문자해독률과 진학률(Education Index), 1인당 국민총생산(GNI Index)

** 삼각협력(Tripartite Cooperation)은 제 3의 개도국에 대해서 두 개의 공여국이 공동으로 협력사업을 실시하는 것을 뜻함.

Abstract

The Story of Different Stories in Central America and its Relationship with Our Country

Lee, Tae Hyuk

2019 is a historic year for our relationship with Central America. This is because the Free Trade Agreement(FTA) that agreed upon between Korea-Five Central American countries entered into force on as of 1 October 2019. In particular, this agreement is the first among Asian countries to conclude an FTA with five Central American countries, which has the effect of preoccupying the Central American market, compared to competitors such as Japan and China. In addition, the region is geographically intermediate, or 'waist', in Latin America, which will provide an opportunity to build a US FTA network connecting North America, including the United States, Canada, and Mexico, and South America, such as Colombia, Peru, and Chile. This could be the cornerstone of Korea's pioneering new markets in Latin America and diversification of export markets in the midst of the current international situation in which the instability of international trade orders, such as the US-China trade war and Japan's export regulations, are expanding. How much and well do we really know about Central America at this moment when Korea and Central America build new momentum using the economic platform called FTA? This paper introduces Central America as whole and at the same time analyzes the outlier among Five Central American Nations. In the conclusion, it suggests how and in what ways South Korea collaborates Five Central American Countries beyond the economic ties, by way of Intra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참고문헌

- 김달관 “중앙아메리카의 엘리트: 변천과 특징” 『라틴아메리카 연구』 17권 4호 (2004)
- 김영식 “행복지수 1위 코스타리카 지역발전 전략은 사회적 경제” 한겨레 2017
- 박은홍. “민주적 사회주의의 실험 모델, 니카라과” 『동향과 전망』제5권 (1994).
- 백종국. “니카라과의 혁명과 민주화” 『라틴아메리카 연구』 제8권 (1995).
- 신진욱. “니카라과에서의 선거와 민주주의” 『동향과 전망』 (1995).
- 이태혁. “니카라과 반정부시위, 오르테가는 어떻게 응답하고 있는가?” Emerics.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2018).
- “니카라과의 또 다른 정치적 변곡점. ”4.19 학생운동“을 중심으로 『세계지역학회』 제 37권 1호 (2019).
- 임상래. “식민지의 조건과 국가발전: 코스타리카 성공의 역사적 성격을 중심으로” 『중남미연구』 35권 4호 (2016)
- 여승철. 마야에서 운하까지 지식과 감성 (2019)
- Amartya Sen. Development as Freedom. Oxford Press (1999)
- Barrington Moore, Social Origins of Dictatorship and Democracy. Beacon Press (1966)
- Robert Dahl. Democracy and its Critics. Yale Press (1989)
- Semyour M. Lipset. "Some Social Requisites of Democracy: Economic Development and Political Legitimacy"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53. No. 1. (1959)

<웹사이트>

- https://ko.wikipedia.org/wiki/%EC%A4%91%EB%AF%B8-%ED%86%B5%ED%95%A9_%EC%B2%B4%EC%A0%9C
- <https://ko.wikipedia.org/wiki/%EC%A4%91%EC%95%99%EC%95%84%EB%A9%94%EB%A6%AC%EC%B9%B4>
- <https://brunch.co.kr/@tonyo1978/12>
- <https://www.yna.co.kr/view/AKR20190813048700003>
- https://ko.wikipedia.org/wiki/%EC%A4%91%EB%AF%B8-%ED%86%B5%ED%95%A9_%EC%B2%B4%EC%A0%9C

베네수엘라 민주주의 위기 그리고 한국과의 관계

김기현*

1. 들어가며

베네수엘라는 남미의 부국이자 정치적으로도 가장 안정된 국가였다. 석유 매장량이 세계 1위로서 한때 남미에서 일인당 국민소득이 가장 높았던 부국이었다. 1960년대에서 1980년대까지 안정적인 양당 중심의 대의민주주의의 체제를 유지함으로써 정치적으로도 남미에서 가장 안정된 국가로 간주되었다.

하지만 베네수엘라는 현재 최악의 위기 상황에 빠져있다. 2014년 이래 매년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2018년까지 실질 GDP가 49% 축소되었다. 2009년 350억 달러에 달했던 외환보유고는 2018년에 88억 달러로 감소했으며, 1000억 달러가 넘는 외채는 현재 사실상 지불 불능 상태에 있다. 인플레이션은 2015년 180%로 세 자리수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해 2019년 1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33만%를 기록했다. 볼리바르화의 가치는 2018년 5000만% 평가절하되었다.(CEPAL, 2019a: 2019b)

정부가 경제사회지표를 더 이상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는 가운데 베네수엘라의 주요 대학들이 실시한 '베네수엘라 삶의 조건에 대한 조사'(Encuesta sobre Condiciones de Vida en Venezuela: ENCOVI)에 따르면 베네수엘라의 빈곤층은 2014년 48.4%에서 87%로 증가했으며, 그중 극빈층은 2014년 23.6%, 2017년 61.2%를 차지한다.(El País, 2018.02.22.)

사회적으로 폭력과 범죄도 증가해 차베스 등장 이전 10만 명 당 18.4 명 수준이던

* 現 선문대학교 스페인어중남미전공 교수. 한국라틴아메리카학회 회장
멕시코 Universidad Nacional Autónoma de México 중남미지역학 박사

살인율은 2016년 56.3명을 기록했다.(World Bank) 현재 베네수엘라의 살인율은 세계적으로 온두라스 다음으로 높은 수치이다.(World Population Review)

베네수엘라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는가? 위기에도 불구하고 차베스주의 체제는 어떻게 유지될 수 있는가? 이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 이 글은 이미 많은 언급이 있었던 경제적 요인에 대한 설명보다 정치적 측면에서 접근을 시도하고자 한다. 차베스 정권이 어떤 정치적 환경에서 탄생했으며, 차베스의 통치방식은 어떠한지, 위기에도 불구하고 차베스주의 체제가 유지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등을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베네수엘라 정치에 대한 전망을 시도하고, 나아가 우리나라와의 관계 발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고자 한다.

2. 차베스 등장 배경: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

베네수엘라는 식민지 시대에 남미에서 변방지역이었다. 식민지 시대 남미의 중심은 부왕령이 있었던 페루였으며 베네수엘라는 카카오나 생산하고 목축이나 하는 외곽 지역이었다. 18세기에 스페인에서 부르봉 왕가의 개혁으로 식민지 직접통치를 강화하면서 현재의 콜롬비아와 아르헨티나에 부왕령을 두 개 더 만들 때에도 베네수엘라는 여전히 소외된 지역이었다. 왕실보다 선교회 중심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일부 발전된 측면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베네수엘라에서는 스페인의 중앙집권적 통치가 강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도와 질서보다는 무력이 우선되었다. 남미를 독립시킨 시몬 볼리바르가 베네수엘라 출신이었던 것은 이런 점에서 이해가 된다. 독립 이후에도 베네수엘라에서는 남미의 그 어떤 지역보다 무력이 제도보다 앞섰다. 그 결과 20세기 중반까지 베네수엘라에는 사실 남미에서 가장 강력한 카우디요(caudillo: 무력집단의 우두머리)독재가 존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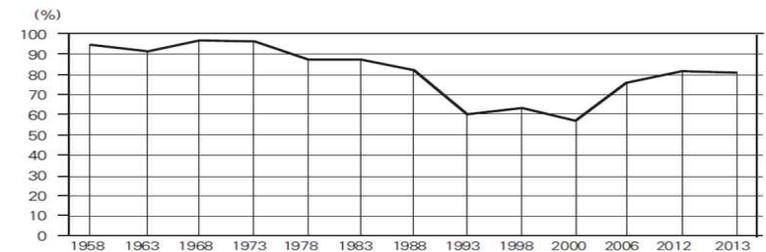
이 모든 것에 변화를 가져온 것이 석유이다. 1914년에 처음 상업적 생산을 시작한 이래 195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생산하기 시작한 베네수엘라의 석유는 1958년 푼토 피호 협약 체제 이후 그의 수익 배분에 기반을 둔 양당 중심의 대의민주주의 체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했다. 석유는 1959년 쿠바혁명 이후 전개된 라틴아메리카의 혁명과 반혁명의 소용돌이에서도 베네수엘라를 벗어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남미에서 가장 안정적 민주주의로 간주되었던 베네수엘라의 정치체제도 1980년대 초반

이후 유가가 하락하면서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유의 부에서 기인하는 베네수엘라 사람들의 '부자의식'은 베네수엘라가 워싱턴 컨센서스에 따라 신자유주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을 막았다. 1989년에 발생한 대중 반란인 '카라카소'(caracazo)는 바로 그 상징이었다. 저 유가의 상황에서 신자유주의를 거부한 베네수엘라는 1990년대 라틴아메리카에서 최악의 경제 사회 상황을 보여주었다. 베네수엘라의 1999년 빈곤층 비율은 49.4%로 칠레의 20.6%는 물론이고 브라질의 37.5%보다 훨씬 더 높았다.(CEPAL, 2001: 44) 1990-1999년 GDP 대비 공공지출의 비중은 8.48%로 라틴아메리카 국가 평균 11.9%에도 미치지 못했고, 교육의 질은 초등학교 학업성취도가 세계 최하위를 기록할 수준이었으며,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간에 높은 교육 수준 차가 드러났다. 그로 인해 교육이 계층 이동의 수단이 아니라 오히려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요인이 되었다.(브레우에르, 2016: 55-56)

이런 상황으로 인해 그동안 안정적이었던 양당 중심의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졌다. 이는 대통령 선거 투표율로도 반영되었는데 <그림 1>에서 보듯이 1983년까지 거의 90%에 달하던 투표율이 그 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1993년 대선에서는 60% 수준에 달했으며 그 후 차베스의 등장까지 계속 그 정도의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그림 6-1> 베네수엘라 대통령 투표율(%)



자료: 브레우에르 (2016)

차베스의 등장은 바로 이런 대중의 현 정치 체제에 대한 불만을 기반으로 탄생했다. 차베스의 등장으로 40년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던 베네수엘라의 대의민주주의

에도 위기가 발생했다.

3. 차베스의 통치 방식

1) 국민투표를 통한 직접민주주의의 강화

1992년 쿠데타를 시도했던 차베스는 1998년 선거를 통해 대통령이 되었다. 그러나 의회는 야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었고, 유가도 20달러 이하인 상태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아 보였다. 그에 대한 차베스의 돌파 전략은 국민투표를 통한 직접민주주의의 강화였다.

1999년 4월 의회에서 소수당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차베스는 제헌의회를 소집하고 그 헌법에 따라 대선과 총선을 다시 실시하는 제안을 국민투표에 붙인다. 그리고 1999년 12월에는 제헌의회에서 통과된 신헌법을 국민투표를 통해 통과시킨다. 신헌법의 핵심 원리는 정치적으로 참여 민주주의의 확대, 경제사회적으로 국가의 중심적 역할 강화였다.(김은중, 2014: 49)

그러나 신헌법에서 실제로 주목해야 할 점은 의회권력의 약화와 대통령 권한의 강화라고 할 수 있다. 신헌법은 대통령의 재선을 허용했고, 기존의 상하원으로 나누어져 있던 의회를 하나로 통합하고, 의원 수도 기존의 상원 54석, 하원 207석, 총 261석이었던 것을 단원제 165석으로 축소했다. 신헌법에 따라 다시 치러진 대선과 총선에서 차베스는 결정적 승리를 획득한다. 1998년 대선에서 56.2%를 획득했던 차베스는 2000년 대선에서도 59.8%를 획득해 자신에 대한 다수의 지지를 확실히 보여주었다. 보다 의미 있는 것은 1998년 총선에서 불과 상원에서 8석(전체 의석의 15%), 하원에서 35석(전체 의석의 17%)을 차지했던 차베스의 정당인 제5공화국운동(MVR)이 2000년 선거에서는 165석 중 92석을 차지해 전체 의석의 과반이 넘는 55%를 차지했다는 점이다. 이렇게 차베스는 자신에게 유리하게 기존의 선거와 헌법을 무시하고 국민투표를 통해 헌법을 개정하고 선거를 다시 실시함으로써 의회에서 다수를 차지했다.

심지어 2000년에는 선거 승리의 여세를 몰아 이제는 야당이 된 기존 정통정당들이 장악하고 있는 노조의 지도부 개편안을 역시 국민투표에 부쳐 통과시켰다. 이렇게 조직화된 노조에 기반을 두었던 기존 정통 정당들의 기반은 무너졌고, 빈민 대중과 연합하는 새로운 형태의 차베스주의가 탄생했다. 2004년에는 반대로 야당이 대통령을

<표 6-1> 차베스 정부 시기의 국민투표

년(월)	주요 안건	결과
1999(04)	제헌의회 소집	통과
1999(12)	신헌법 제정	통과
2000	노조지도부 개편	통과
2004	대통령 소환	부결
2007	대통령 임기제한 철폐	패배
2009	대통령 임기제한 철폐 재투표	통과

소환하는 국민투표를 시도했으나 부결되었다. 2007년에는 대통령 임기 제한을 철폐하는 안을 국민투표에 부쳤으나 통과되지 않았다. 차베스로서는 최초의 선거 패배였지만 포기하지 않고 2009년에 같은 안을 다시 국민투표에 부쳐 통과시킴으로써 장기집권의 목표를 이루었다.

2) 대중의 조직과 동원 정치

2002년 반차베스 쿠데타가 발생했을 때 마지막까지 차베스를 지킨 것은 군부도 정치인도 아닌 빈민층 대중들이었다. 차베스가 쿠데타로 인해 대통령직을 사임하고 축출되었을 때 그에 반기를 든 것은 빈민층들이었다. 빈민층들의 시위에 힘입어 군부 내 친 차베스 세력이 반격을 가했고, 그로 인해 차베스는 다시 복귀할 수 있었다. 2004년 대통령 소환 국민투표가 실시되었을 때 차베스 정부를 지켜낸 것도 역시 빈민층들이었다. 빈민층은 적극적으로 선거투쟁단을 조직하고 차베스 탄핵을 부결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했고, 결국 차베스를 지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빈민층 대중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증가했다. 이를 반영하여 2006년 대선을 앞두고서는 당내에 다양한 대중조직들이 형성되었다.

미션으로 통칭되는 각종 사회프로그램들도 빈민가 대중들의 권한 강화에 기여했다. 다양한 사회단체들은 자신이 처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에 직접참여하기 시작했고, 일부 성공적 단체들은 국가 기관과의 협상에서 자신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2007년 대통령 임기제한 철폐를 앞두고 기존의 제5공화국 운동(MVR)을 베네수엘라

통합사회주의당(PSUV)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당의 주도권이 기존의 정치인 중심에서 평당원 중심으로 이전되었다. PSUV는 대중이 정치의 주인이 되는 것을 설립목적으로 삼았다. 대중들의 정당 적극 참여를 통해 PSUV의 당원 수는 570만으로 확대되었고, 2011년에는 등록 당원의 수만 750만 명에 이르렀다.(로페스 마야 · 란데르, 2017: 82)

3) 인종코드에 따른 정치적 양극화

베네수엘라를 비롯해 라틴아메리카 국가에서는 국가의 의도적인 혼혈 정책과 인종 민주주의의 결과 다인종 다문화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인종문제가 정치적으로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 그러나 차베스 정부들어 '대중의 인종화'가 시작되면서 인종문제가 실제로 정치의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주로 백인들로 구성된 차베스의 반대파들은 유색 인종이 순종적일 때에는 '아름다운 혼혈인' 등으로 미화하지만 그들이 도전적일 때에는 '유머'라는 핑계로 다양한 형태의 인종 비판을 감추지 않는다. 베네수엘라 백인 지배층들은 유색인종을 폭력적으로 배척하지는 않지만 실제로는 '비위생적인', 혹은 '교양 없는 야만인'이라는 비하를 서슴지 않는다. 그에 대해 차베스 정부는 대부분 유색 인종(흑인, 원주민, 혼혈인)인 대중의 유색인종 정체성을 강화하는 한편 반차베스주의자들을 '백인-외국인'으로 규정함으로써 그들에 대한 인종적 혐오증을 확대시킨다. 즉 기존의 지배세력들을 인종차별주의적/계급주의적 권력집단으로 파악하는 적대전략을 취한다. 그러면서 차베스는 자신의 종족적 정체성을 '삼보'(흑인과 원주민의 혼혈인)라고 주장하면서 빈민층 대중과 인종적 동질화 과정을 이루어낸다. 이런 과정을 통해 유색인종이 대부분인 다수의 빈민층 대중들은 차베스를 자신과 같은 유색인종으로 받아들이고, 차베스 정부가 자신들의 정부라는 의식을 가지게 된다. 이런 인종적 차원에 서의 양극화 과정은 빈민층의 차베스 지지를 공고히 하는데 크게 기여했다.(두노-고트버그, 2017: 141-178)

4. 차베스 체제의 정치적 위기

1) 2014년 이후 지지를 급락과 민주주의 위기

2014년 유가의 급락으로 경제와 국민의 삶이 어려워지기 전까지 어쨌든 차베스와 그를 이은 마두로 정부는 정권의 정당성과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의심을 받지 않았

다. 비록 국회와 사법부의 장악으로 인해 권력의 견제와 균형 기능의 약화, 소수의 권리 강조보다 다수의 지배 등으로 인한 대의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한 비판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선거의 공정성과 정권의 정당성이 국내외적으로 크게 의심받지는 않았다. 앞의 <그림 6-1>에서 보듯이 대선 선거 참가율도 차베스 정부들어 다시 80% 이상이었고, <그림 6-2>에서 보듯이 민주주의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50% 수준으로 다른 중남미 국가들보다 훨씬 높았다. <그림 6-3>은 차베스주의 정부에 대한 지지도가 2013년까지는 50% 수준에 가까웠음을 보여준다.

<그림 6-2> 베네수엘라 민주주의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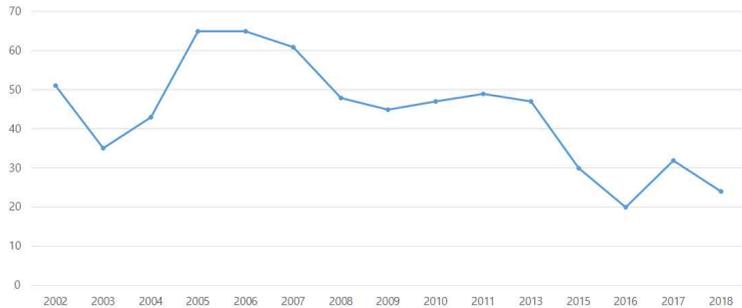


자료: Corporación Latinobarómetro (2018)

그러나 이런 상황은 2014년 유가하락과 지속적 외국자본 유출로 인해 볼리바르화가 급격히 평가절하되고, 인플레이션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치솟고, 외화 부족으로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던 생필품 부족현상 등이 발생하면서 급격히 변화하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그림 6-3>과 같이 차베스 정부에 대한 지지도가 20%대까지 하락했다.

이러한 지지도 하락이 선거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 2015년 총선이었다. 2015년 총선에서 야당인 민주연합회의(MUD)는 56.21%를 득표해 167석 중 109석을 차지함으로써 의석의 3분의 2 이상을 확보했다. 반면 베네수엘라통합사회주의당(PSUV)중심의 여당 연합은 40.92% 득표로 지난 총선에 비해 44석이나 감소한 55석을 차지하는데 그쳤다.(CNE)

<그림 6-3> 차베스주의 정부 지지도



자료: Corporación Latinobarómetro (2018)

이에 대해 마두로 정부는 2015년 총선에 선거부정이 있었다고 주장했고, 차베스주의자가 지배하는 최고사법재판소(TSJ)는 한 개 주에서 선거결과를 무효로 판결했다. 야당이 이러한 판결해 불복하자 최고사법재판소는 의회의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합법적 의회가 부재하다는 구실로 현 의회의 활동을 무효라고 판결했다. 그리고 마두로에게 의회기능을 대신할 권리를 부여했다. 그에 따라 마두로는 과거와 달리 국민투표에 묻지도 않고, 단순히 최고사법재판소의 권한 부여라는 명분에 따라 대통령 명령으로 기존 의회와는 별도로 제헌의회를 소집한다. 최고사법재판소는 마두로가 국민의 주권을 대신하고 있음으로 제헌의회 소집이 합법적이라고 판결했다.

기존 의회는 이를 '쿠데타'로 선언했으며, 검찰총장 루이사 오르테가 디아스(Luisa Ortega Díaz) 이를 '입헌질서의 파괴'로 규정했다. 검찰총장은 자신이 이 문제를 기소하면서 국민들도 고소에 동참할 것을 요구했다. 물론 최고사법재판소는 오르테가 디아스의 기소를 인정하지 않았다.(The Globe and Mail, 2017.03.31.) 심지어 마두로 정부는 그녀의 그러한 행위를 국가에 대한 반역으로 간주했다. 그에 따라 최고사법재판소는 그녀를 출국금지 시키고 그녀의 자산을 동결시켰다. 결국 검찰총장에서도 해임된 그녀는 남편과 함께 몰래 베네수엘라를 빠져나가 현재 콜롬비아에서 망명생활을 하고 있다.

기존 의회를 무력화하고 제헌의회를 통해 입법부를 다시 장악한 마두로 정부는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치러진 2018년 대선에서 다시 승리를 거둔다. 그러나 야당과 미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은 2018년 대선이 주요 야당 지도자들이 자격정지나 가택연

금으로 인해 선거에 참여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루어졌으며, 대선 일정도 여야 간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최고사법재판소가 결정한 점 등을 들어 이번 대선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현재 세계적으로 마두로 정부를 인정하지 않는 나라는 미국을 비롯해 미주지역의 리마그룹 11개국(캐나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파라과이, 콜롬비아, 페루, 과테말라, 온두라스, 파나마, 코스타리카), 주요 EU국가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한국이 있다.

마두로는 2018년 대선에서 비록 67.8%의 압도적 승리를 거두었다고 하지만 야당의 불참으로 투표율은 46.07%로 1958년 베네수엘라 민주화 이후 치러진 그 어떤 대선의 투표율보다 낮았다. 그에 따라 앞의 <그림 2>에서 보듯이 베네수엘라의 민주주의에 대한 만족도는 12%로 극히 낮은 수준에 이르렀다. 이는 베네수엘라 민주주의가 총체적 위기에 빠졌음을 말해준다.

2) 경제사회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마두로 정부가 지속되는 이유

위기에도 불구하고 마두로 정부가 지속되는 이유는 크게 다섯 가지 정도를 들 수 있다. 첫째, 군부가 사실상 베네수엘라의 실권을 장악하고 있다는 점이다. 차베스주의는 군부, 노조, 좌파정치인, 빈민층 지역협의회 이렇게 네 개의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중 군부가 권력의 핵심으로 군 출신인 디오스다도 카베요는 마두로와 차베스 계승권을 두고 경쟁했으며, 현재는 제헌의회 의장으로서 입법부를 장악하고 있다. 베네수엘라의 재정 수입의 거의 대부분이라 할 수 있는 국영석유회사(PDVSA)의 회장도 국가경비대장 출신의 육군소장 마누엘 케베도가 맡고 있다. 최근 들어 사회복지의 핵심인 식량분배 서비스에 대한 책임도 국방부 장관인 블라드미르 파드리노가 담당하고 있다. 이렇듯 군부가 국가의 핵심 권력임으로 군부가 스스로 차베스주의 체제를 무너트릴 일은 없을 것이다.

둘째, 경제적, 금융적, 행정적, 군사적 측면에서 러시아, 중국, 쿠바 등의 확고한 지지를 받고 있다. 쿠바는 베네수엘라 석유 지원의 대가로 의료서비스를 물론이고, 정보와 치안 등에 있어서 쿠바의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하고 있다. 중국은 차베스 정권 시기에 외국자본의 유출에 대응해 총 620억 달러를 지원했다. 최근 중국이 미국과의 관계로 인해 베네수엘라에 대한 금융지원을 중단한 상황에서 러시아가 170억 달러의

차관을 제공했다. 심지어 러시아는 베네수엘라에 무기를 판매하고, 최근 미국의 군사적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핵무기 탑재 전략 폭격기를 베네수엘라에 보내 합동 군사훈련을 하는 등 군사적 안보적 측면에서 차베스주의를 지지하는 큰 힘이 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지원은 마두로 정부가 버티는 중요한 요인임에 틀림없다.

셋째, 반차베스 세력의 분열은 야권이 선거에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민주연합회의(MUD)로 대표되는 베네수엘라의 야당 연합은 다양한 이데올로기 성향을 지닌 정치세력들의 통합체이다. 여기에는 과거 차베스주의였다가 현재 반대파가 된 세력도 있고, 과거 차베스 등장 이전 베네수엘라를 주도했던 중도파 성향의 정당들에 소속되었던 세력들도 있고, 친미우파 성향의 세력들도 있다. 그러다보니 하나의 정당으로서 정책도 부재하고, 결속력도 크지 않다. 확고한 리더가 없는 가운데 대선마다 매번 후보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내부 투쟁도 심각하다. 선거 참여를 놓고도 분열함으로써 선거를 통한 정권교체를 어렵게 하고 있다.

넷째, 차베스주의 정부는 그들이 장악한 사법부를 통해 입법부를 무력화 했고, 나아가 선거과정의 불공정성을 합법성으로 위장했다. 2015년 총선 패배 이후 정부는 2016년 12월로 예정된 지방선거를 연기했으며, 2017년에는 헌법이 요구하는 국민투표 없이 제헌의회 선거를 실시했고, 제헌의회 선거에서는 참여율 조작 시비가 있었다. 분위기를 장악한 후 제헌의회는 지방선거를 서둘러 실시하고,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후에는 대선까지 야당과의 합의 없이 4월로 앞당겼다. 이러한 선거과정의 불공정성과 선거일의 일방적 결정에도 불구하고 최고사법재판소는 그의 합법성을 인정했다.(Salmerón y Salmerón, 2019: 2) 그에 대해 야당 세력은 선거 참여를 놓고 분열했고, 그로 인해 낮은 지지도에도 불구하고 차베스주의의 선거 승리가 가능했다.

다섯째, 사회프로그램을 정치화함으로써 빈곤을 선거에 적절히 활용했다. 한 예로 최근 사회적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증가하기 위해 도입된 '애국카드'(Carnet de la Patria)는 투표 시 기존 ID카드를 대신할 수 있게 됨으로써, 유권자로 등록되지 않은 빈곤층 사회프로그램 수혜자들의 선거 참여를 높였다. 게다가 '애국 카드'에는 투표여부가 표시되고, 투표를 한 사람에게는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따라서 '애국 카드'는 주로 빈곤층이자 차베스주의 지지자들인 카드 소지자들의 투표를 장려하고 나아가 압

박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었다.(Peñalosa, 2018)

3) 베네수엘라 정치 전망

마두로 1기 정부의 임기가 끝나는 2019년 1월 10일을 기해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는 2018년 대선이 야당 주요 인사의 선거참여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치러졌고, 선거 일정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등 불법 부정 불공정 선거였기 때문에 2기 마두로 정부를 인정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그럼으로 국회는 1월 10일부터 합법적 대통령이 부재함으로 헌법에 따라 국회의장이 임시대통령을 수행하고 선거를 조기에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국회의장인 구아이도를 임시 대통령으로 선언했다.

그로 인해 베네수엘라는 대통령이 두 명, 의회도 둘, 사법부도 둘인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사실 그 전에 야당과 미국은 마두로와 물밑 협상을 통해 자진 퇴진을 유도했으나 실패로 돌아갔다. 그에 따라 다음 플랜으로 미국과 야당은 베네수엘라 채권 매입 금지, 미국에 있는 베네수엘라 국영석유회사(PDVSA) 자회사인 시트고(Citgo)의 자금 동결 등 경제제재 조치를 강화하면서 마두로 정부의 퇴진을 압박했으나 역시 실패로 돌아갔다. 그리고 플랜 C로 시도된 내부 군사 반란도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

그러면 이제 미국과 야당에 남은 카드는 두 개다. 하나는 군사적 개입이고 다른 하나는 대타협이다. 2차 세계 대전 이후 중남미에서 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한 사례가 없지 않으나(1983년 그라나다 침공, 1989년 파나마 노리예가 대통령 체포 작전) 베네수엘라는 이들 국가들과는 규모나 군사전력 면에서 큰 차이가 있으며, 러시아와 쿠바의 군사적 지원을 받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미국의 군사적 개입 카드는 사실상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

그러나 최근 콜롬비아 강경파 게릴라들을 베네수엘라가 지원하고 있고, 베네수엘라와 국경지역에 그들의 기지가 설립되어있다는 사실들이 언론에서 크게 부각되고 있다. 미국도 최근 콜롬비아에 업무 사무소를 두고 이러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콜롬비아를 통한 군사적 개입의 가능성을 엿보게 한다. 하지만 구아이도를 인정한 중남미 국가들과 유럽의 대부분 국가들조차 미국의 군사적 개입은 지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확실한 명분이 없는 한 군사적 개입은 쉬운 선택은 아닐 것이다.

그러면 결국 남은 것은 대타협뿐이다. 국제사회의 감시 하에 공정한 선거를 조기에

실시하는 것인데, 여기서 쟁점은 그 선거를 누가 주도하느냐는 것이다. 미국과 야당은 마두로가 주도하는 선거는 공정성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마두로가 물러나고 구아이도가 주도하는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현 정부는 현 체제 하에서 선거를 조기에 실시하는 것 이상을 받아들여기는 어려울 것이다.

현재 마두로에 대한 지지도가 20% 수준이기 때문에 야당이 단합한다면 공정한 선거가 실시될 경우 현 정부 아래에서라도 야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야당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앞서 살펴본 대로 야당이 너무나 다양한 세력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목소리를 내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차베스에는 반대하지만 구아이도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로페스 마야· 란데르, 2017: 106-107; Peñalosa, 2018; Salmerón y Salmerón, 2019: 4-5)

베네수엘라의 인도주의적 위기 상황이 오래 지속될 수는 없다. 베네수엘라가 이러한 위기에서 벗어나는 길은 결국 정권 교체 밖에 없는 것처럼 보인다. 따라서 군사적 개입과 같은 불행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야당은 지금부터라도 효과적인 선거 전략을 짜서 마두로 정부 아래에서 실시하는 선거에 참여하는 것이 현실적 방안이다. 마두로와 그를 둘러싸고 있는 군부 세력들도 패배를 인정할 준비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선거에서 패배한 이후에도 그들의 신분 보장이 이루어져야 하고, 야당으로서 정치 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 공간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쿠바, 니카라과, 베네수엘라처럼 진보 정부가 군사력을 장악하고 있고 이들 뒤에 러시아나 쿠바와 같은 외부 세력이 지지하고 있는 경우 힘으로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과거 니카라과 혁명정부에서 이루어졌던 평화협상이 보여주듯이 평화적 정권교체는 가능하다. 베네수엘라도 니카라과의 전례를 따라야 할 것이다. 현재로서는 그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으로 보인다.

5. 한국과 베네수엘라 관계

베네수엘라는 인구 3,200만(중남미 6위), GDP 4824억 달러(2014년 기준, 중남미 4위), 석유 매장량 세계 1위의 잠재력이 매우 큰, 따라서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시장이다. 2013년 석유플랜트 건설 수주액이 22억 달러로 중남미 제 1의 건설 수주 시장이기도 하다. 비록 현재 양국 간의 교역량은 경제적 정치적 사정으로 인해 매우 적지만

베네수엘라의 경제상황이 좋았던 2007년에는 우리나라의 베네수엘라 수출이 12억 달러 이상을 기록하기도 했다. 2012년 기준 베네수엘라 전체 소비에서 화장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중남미 1위로 화장품 수출 시장으로서의 전망도 밝고, 고가 휴대폰 판매 시장으로서의 가치도 높다.

세계 최고의 석유매장량을 자랑하는 오니노코 벨트에 현재 중국, 러시아는 물론이고 스페인, 이탈리아를 비롯해 아시아에서도 베트남, 인도, 일본, 말레이시아 등이 파트너로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 미국 또한 차베스의 석유산업 국가통제 강화 이후 엑손이나 코노코 필립스는 철수했지만 쉘브론은 오리노코 벨트 개발 사업에 여전히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 지역의 개발 사업에 아직 전혀 손을 쓰지 못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참여를 시도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정권의 변화를 살펴보면서 언제든지 참여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베네수엘라와 우리의 관계는 전통적 우호관계를 유지해왔다. 차베스도 1999년 우리나라를 국민 방문한 적이 있다. 하지만 2002년 쿠데타 이후 차베스가 반미노선을 강화하면서 우리나라가 베네수엘라의 우선협상국에서 제외되는 등 양국 관계가 악화되었다. 그러나 마두로 등장 이후 경제 실질 협력 차원에서 관계가 개선되면서 건설이나 전자 부문에서 현지 진출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최근 경제 위기로 인해 경제적 교류는 오히려 축소되었다.

우리 정부는 구아이도 임시 대통령 등장으로 베네수엘라의 정치적 위기가 심화된 지난 2월 25일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 물품 반입과정에서 정부군에 의한 민간인 희생자 발생과 2018년 5월 대선의 정당성 결여로 인한 혼란 발생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구아이도 임시대통령을 인정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와 함께 구아이도 임시 대통령의 주도로 베네수엘라가 조속한 시일 내에 민주적이고,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대통령 선거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그로 인해 양국관계는 다시 소원해졌다. 반면 북한과 베네수엘라의 관계는 보다 밀접해 지고 있다. 북한이 2015년 베네수엘라에 대사관을 설치한 이후 지난 8월 21일에는 베네수엘라도 평양에 대사관을 설치했다. 현재 우리로서는 베네수엘라의 정치적 변화를 조심스럽게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Democratic Crisis of Venezuela and Relationship with Korea

Kim, Ki Hyun

This paper tries to analyze the political aspects of the Chavista regime in Venezuela in the sense of the crisis of democracy. In this country, the Chavista government continues to have power despite serious socio-economic problems. To see this situation, first, we analyze the causes of the emergence of the Chavista regime. Then, we will see the political measures of the Chavez government. Also, we will consider the manipulations of the Maduro government through the judiciary to save power under the crisis. Ultimately, we will try to predict the perspectives of the politics of Venezuela and the relations between this country and Korea.

콜롬비아의 농촌개발과 한국의 농업협력강화에 대한 소고

차경미*

I. 콜롬비아의 평화협정

지난 2016년 6월23일 콜롬비아 정부는 라틴아메리카 최대 게릴라 조직인 FARC(콜롬비아 무장혁명군)와 역사적인 평화협상을 체결하였다. 그동안 콜롬비아 사회는 좌익게릴라와 정부군 그리고 게릴라 소탕을 목적으로 정부가 조직한 우익무장조직 AUC(콜롬비아연합자위군)의 상호대립 속에 경제적 위기가 심화되었다. 반세기 이상 지속되어온 무력갈등은 콜롬비아 경제발전의 근간인 국가하부구조를 파괴하였다.

특히 지방 중소도시 및 농촌지역의 통신, 에너지, 도로, 항만 및 공항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 또한 생산비와 운송비 상승으로 투자는 위축되었다. 그리고 국내시장은 마비되었다. 군사비 증가로 기회비용 역시 축소되었다. 생산 활동도 감소하였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10년 동안 콜롬비아의 국가 방위비와 안보비는 134%로 팽창하였다. 군사비용이 국민총생산의 2.8%를 차지한 것이다(콜롬비아 국립통계청 DANE, 2010).

그동안 콜롬비아의 역대 정권들은 정파에 관계없이 사회적 안정을 위해 노력하였다. 게릴라에 대한 사면조치와 비무장지대 및 마약 재배지를 완충지역으로 조성하여 게릴라와의 협상도 추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릴라 조직은 정부와의 협상을 중지한채 매년 무력분쟁으로 세력을 과시했다.

이러한 상황아래 2002년 무소속으로 출마한 보수성향의 우리베 대통령(Álvaro Uribe: 2002~2010)이 당선되었다. 그는 미국의 군사적 지원 아래 힘에 의한 국가안보정책을 추진하였다. 우리베 정부는 게릴라와의 전면전을 선포하였다. 그리고 역대

* 現 부산외국어대학교 중남미 지원원 HK교수
한국외대 국제관계학 박사

정권보다 더 강력한 게릴라 소탕작전을 전개하였다. 그 결과 주요 5대 도시를 중심으로 범죄와 무력폭력이 감소되었다. 이러한 가시적인 성과에 힘입어 그는 2006년 재집권에 성공하였다.

그러나 우리베 집권2기 무력분쟁 확산으로 인한 다양한 결과들이 표면화 되었다. 특히 마약생산 및 거래량은 오히려 증가하였다. 뿐만 아니라 농촌지역은 정부군과 게릴라간의 무력분쟁이 격화되었다. 농업기반은 붕괴되었다. 이와 함께 농촌주민의 지역 이탈은 급속도로 팽창하였다.

한편, 게릴라 조직은 정부의 공격을 피해 국경지역으로 이동하였다. 국경지역은 무력충돌이 지속되었다. 이러한 무력분쟁은 인근국가와의 외교적 마찰을 야기하였다. 결국 우리베 대통령은 양민학살 및 인권문제와 함께 국내외적인 비난여론에 휩싸였다. (차경미, 콜롬비아 우리베정권의 국가안보정책의 한계,국제지역연구, 2009, 한국외국어대학교).

이러한 혼돈의 정국 속에 2010년 장기 내전종식을 선언한 산토스(Juan Manuel Santos: 2010~2016)정권이 등장하였다. 산토스 대통령은 우리베 집권당시 국방부장관을 역임하였다. 그는 전면에서 게릴라와의 전쟁을 총 지휘해온 인물이었다. 정부의 힘에 의한 대 게릴라 강경책의 부정적인 결과로 우리베 대통령에 대한 비난은 확산되었다.

산토스는 집권과 동시에 우선적으로 국내 양대 좌익 게릴라 FARC 그리고 ELN(민족해방군)와 평화협상을 전개하였다. 그는 FARC와 적극적인 평화협상을 진행하는 동시에 ELN 수뇌부를 회유하여 평화에 대한 논의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정부와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ELN는 정부요인 및 외국인 납치와 살해를 자행하며 협상을 거부하였다. 산토스 정부는 FARC 지도부와 수차례 회동하여 이견을 좁혀 나아갔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평화협정은 체결되었다.

평화협상은 콜롬비아 정부가 이전부터 추진해온 농업개혁법과 무력분쟁 희생자법을 골자로 진행되었다. 정부와 게릴라 양측의 이해가 수차례 충돌하여 협상은 난항을 거듭하였다. 결국 양측은 4년에 걸친 논의 끝에 301페이지에 달하는 5개 항목에 대해 합의하였다. 예상보다 3개월 늦은 6월 정부와 FARC는 협정문에 서명하였다. 협정내

용은 농촌개발 및 토지개혁, 정치참여 보장, 무력분쟁종식, 마약생산 및 밀매퇴치 그리고 내전 희생자보상에 관한 것이다(Acuuerdo de Paz en Colombia, El Tiempo, junio de 23 de 2016).

평화협상은 콜롬비아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석유와 광업부문에 편중되어 있던 외국인 직접투자는 다양한 부문에서 증가하였다. 정부의 인프라 재건과 구축 및 국내 산업기반 강화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결과 외국인 투자와 연계된 설비투자도 증가하였다. 이와 함께 제조 및 생산업, 건설업, 정보통신 분야에 대한 투자 역시 확대되었다. 사회적 안정은 내수경기 신장에 기여하였다. 그리고 사회전반의 구매력 상승을 통한 사회조건 개선에도 영향을 미쳤다.

한편, 콜롬비아 정부는 내전 희생자권리 회복과 빈곤감소를 위해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정부는 희생자에 대한 통합적 보상 및 토지 반환법을 통해 평화로의 이행을 추진하였다. 또한 무력분쟁으로 거주지를 떠나 강제 실항상태에 놓인 주민의 안정적인 귀환과 정착을 지원하였다. 그리고 빈곤감소를 위해 농업과 농촌개발에 주력하며 농촌경제에 역점을 두었다. 농업개혁 및 농촌개발은 실항민의 안정적인 귀환과 마약생산퇴치를 위한 당면과제였다.

2. 콜롬비아의 평화로의 이행과 농촌개발

지난 반세기 이상 지속되어온 내전으로 붕괴된 콜롬비아의 농촌경제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다. 게릴라들은 마약범죄 집단과 공생관계를 유지하며 농민들에게 불법작물재배를 장려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이들은 막대한 경제적 이윤을 누려왔다. 남부지역 농민들은 게릴라의 보호아래 불법작물재배를 통해 어떤 작물보다도 더 많은 이윤을 창출하였다.

정부의 대대적인 게릴라 소탕으로 농촌지역의 무력분쟁은 증가하였다. 그 결과 농업기반이 파괴되었다. 게다가 불법작물재배 근절을 목적으로 정부가 살포한 제초제는 결과적으로 농촌지역 생산적인 토지의 황폐화를 초래하였다. 불법작물은 감소하지 않았고 오히려 거래량은 증가하였다. 또한 게릴라조직과 우익무장단체 간의 점령지 확장과정에서 발생한 무력충돌은 농촌지역의 기회박탈 및 가족의 해체를 동반하였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사회적 빈곤은 악화되었다. 그리고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콜롬비

아 사회의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었다.

농촌지역 교육기관의 붕괴 역시 청소년들의 교육기회마저 앗아갔다. 어려운 경제상황과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처지에 놓인 청소년들은 정부군보다 더 많은 월급이 제공되는 게릴라조직에 가담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국내외적으로 많은 우려를 낳았다. FARC는 정부의 게릴라에 대한 강경책으로 마약거래의 주요 루트였던 아마존 지역이 폐쇄되자 태평양 지역으로 이동하여 15~18세 아동 및 청소년을 조직원으로 징집하였다. 이러한 방식으로 FARC는 조직을 유지하였다(Los Niños y el Conflicto Armado en Colombia: el Retrato de la Infamia, Consejo de Seguridad de las Naciones Unidas, 6 de marzo de 2012).

태평양지역은 콜롬비아 사회에서 소외와 배제의 대상인 흑인과 원주민이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곳이다. 그리고 야자와 바나나 및 사탕수수 등 열대작물 재배를 기반으로 하는 전형적인 농촌지역이다. 게릴라의 이동으로 태평양지역은 새로운 무력분쟁의 중심지로 변모하였다. 그리고 이전과 다른 형태의 폭력이 일상화되었다.

콜롬비아 정부는 평화협정 이행을 위해 다양한 특별법을 마련하였다. 특히 무력분쟁의 중심지로 변한 태평양지역과 남부 마약재배지를 중심으로 농촌지역 경제회복에 역점을 두었다. 그리고 실항상태에 놓인 지역민의 안정적인 귀환과 무장조직의 사회복귀도 지원하였다.

또한 정부는 농촌지역의 전기, 도로, 수도에 대한 보수와 건설에 노력하였다. 이와 함께 농촌 공공인프라 건설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농촌경제회복에 주력하였다. 평화협정 체결이후 콜롬비아 정부는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평화협정의 주요 쟁점은 주로 농업개혁 및 농촌경제 개선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콜롬비아의 장기 내전은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전개되었기 때문이다. 농촌은 내전의 최대 희생물이었다. 평화협정 체결 이후에도 FARC의 거점지로 활용되었던 남부 지역은 여전히 수많은 농가가 불법작물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마약경제는 석유보다 더 많은 경제적 이윤을 안겨주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불법작물재배 근절을 위해 남부지역 농가에 대체작물 보급 및 재배에 대한

기술과 금전을 지원하였다. 그리고 인프라 복구를 통해 농산물 유통과 판매에 대한 정책적 고려도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농촌개발 투자자금 조성을 위한 콜롬비아 정부의 예산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콜롬비아 정부는 부족한 재원을 국제사회의 지원으로 충당하였다.

정부의 농촌개발 지원정책으로 불법작물재배 농가는 야자와 커피를 재배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대체작물 보급에 대한 기술과 지원부족으로 많은 농가들은 어려움을 겪었다. 그나마 정부의 적은 지원금조차도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은 불법작물을 재배하여 이윤을 남겼던 경험이 있는 농민들이언제라도 과거로 회귀할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불법작물재배지 농가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농민들은 그 어떠한 대안도 찾기 힘든 현실이다. 이러한 점에서 콜롬비아 정부는 농업과 농촌개혁을 통해 빈곤을 극복한 한국의 경험과 사례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콜롬비아의 농촌개발은 사회 안정을 위한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브라질 출신의 FAO(유엔식량농업기구) 전 사무총장 시우바(José Graziano da Silva)는 콜롬비아 정부의 내전 종식을 위한 농촌개발정책이 전 세계적으로 콜롬비아와 유사한 내전 상황에 놓여있는 국가들에게는 새로운 희망과 교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EI Desarrollo Rural como Instrumento Para la Paz en Colombia, IPS, 27 de febrero de 2019). 사회적 안정은 무엇보다도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지속가능한 발전이 요구된다. 따라서 농촌개발을 통한 빈곤감소와 식량확보는 평화협정 이행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과제인 것이다.

평화협정은 체결되었으나 콜롬비아 정부는 여전히 해결해야할 사회적 갈등요소와 마주하고 있다. 특히 농업개혁 및 농촌개발은 여전히 무력폭력의 불씨를 안고 있다. 농촌지역의 빈곤과 불평등은 더욱 심화된 상황이다. 자본과 기술이 부족한 상황에서 추진되는 콜롬비아 정부의 농촌개혁은 정부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콜롬비아 정부는 어느 때 보다도 농업개혁과 농촌개발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강화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3. 콜롬비아의 농촌개발과 한국농업

라틴아메리카 지역은 자원 및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협력대상이다. 특히 라틴아메리카 유일의 한국전 참전국인 콜롬비아는 한국의 ODA 정책의 중점협력 대상국이다. 그동안 다양한 분야에 걸쳐 양국은 광범위한 협력관계를 구축해왔다.

평화협정 체결이후 콜롬비아 정부는 한국농업에 특별한 관심을 표명했다. 농촌개혁을 통해 단기간 빈곤을 극복한 한국의 사례가 콜롬비아 농업개혁의 가능성을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계 최고의 영농기술과 체계적인 농업시스템을 보유한 한국형 농업은 콜롬비아 농촌개발의 방향이 되고 있다.

콜롬비아의 농촌지역은 도로 및 항만 시설이 열악하고 농업부문의 인프라가 전반적으로 취약한 상태이다. 더욱이 장기간에 걸친 무력분쟁으로 농촌지역 경제기반은 붕괴되었다. 게다가 국가차원에서 농업기술을 지원하는 한국의 농업진흥청이나 농업기술지원센터와 같은 기구는 운영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농민들에 대한 기술지원은 매우 힘든 형편이다.

콜롬비아정부는 불법사용작물 경작지에 대한 통합적 국가프로그램 PNIS를 마련하였다. 2017년부터 기능하기 시작한 PNIS는 불법작물재배지 13개주에 해당하는 53개 마을 농가에 대한 지원책이 핵심이다. 정부는 우선 2017년 10월3일까지 24,891 헥타르에 이르는 불법사용작물 관련 농가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불법작물재배 근절을 목표로 하였다. 이러한 국가프로그램에 97,084 농가가 등록하였다. 이들 중 6,623농가는 안정적인 식량 확보를 위해 정부의 영농기술 및 대체작물 보급을 기대했다. 이와 달리 29,552 농가는 농업을 포기하고 새로운 경제활동으로 전환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기술적 지원을 희망하였다(PNIS no hará más promesas que no esté en capacidad de cumplir, Colpremsa, 11 de noviembre de 2018).

콜롬비아의 평화협정이 체결된 지 3년이 지난 현재 협정이행은 매우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 평화협정의 주요 쟁점들은 역사적으로 장기 내전의 근본적인 원인이었다. 그리고 사회갈등 유발의 핵심요소였다. 정부의 협정이행은 쉽지 않을 것이다. 역사적으로 누적되어 온 갈등요인을 단기간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다. 현재까지 토지개혁과

불법작물재배와 관련된 통합적 농촌개혁은 새로운 사회적 갈등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2018년 산토스 대통령은 우리베 진영의 이반 두께(Iván Duque:2018-2022)대통령에게 정권을 이양하였다. 정권교체로 평화협정 이행을 위해 산토스 정부가 추진해온 PNIS는 다르게 해석되었다. 현 정권은 불법작물에 대해 이전 정권과는 다른 견해를 유지하고 있다. 그동안 콜롬비아 정부는 불법작물을 국가안보의 주요 이슈로 인식하였다. 그러나 이반 두께 대통령은 불법작물을 공공의 건강 문제로 평가하고 있다.(Desafíos de la Sustitución de Cultivos y Recomendaciones para el Nuevo Gobierno, La Fundación Ideas para la Paz, 3 de septiembre de 2019). 불법작물재배에 대한 정부의 변화된 입장을 반영하여 PNIS에 대한 정책은 담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또한 대체작물 보급을 위한 정부의 농가 지원금은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다. 농업을 포기하고 새로운 경제활동 참여를 원하는 농가에 대한 국가지원 사업도 중지되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불법작물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추진된 정부의 PNIS정책 관련 인사들에 대한 암살과 협박이 이어지고 있다(José Puentes Ramos, Dos años después: ¿cómo va el acuerdo de paz en la Colombia rural?, Semana Rural, 13 de julio de 2018).

한편, 전 지구적으로 전개되는 기후변화로 인해 콜롬비아 농촌지역의 자연재해 피해 발생 빈도는 증가하였다. 그 결과 안정적인 식량공급은 더욱 어려워진 상황이다. 콜롬비아 정부는 이러한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술력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콜롬비아의 안보는 농촌개발과 농업혁신을 통한 안정적인 식량확보 여하에 따라 상황이 바뀔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권교체에 따라 농촌개발에 대한 콜롬비아 정부의 입장은 바뀌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반 두께 현 정권 역시 폐허 속에 세계 경제대국으로 발전한 한국의 경제성장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현 시점에서 한국의 농촌혁신의 역사는 콜롬비아와 한국의 협력 관계제고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농업의 기술력과 혁신경험은 콜롬비아 농촌개발의 방향과 목표설정에 모델이 되고 있다.

4. 한국과 콜롬비아의 협력관계

현재 한국농업은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시점에 와있다. 지금까지 한국은 WTO 체제에서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면서 농업분야에서 혜택을 받아왔다. 그러나 선진국들은 한국이 개도국 우대정책에 대한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한국이 경제적 지위에 맞는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한국농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임정빈, 트럼프 탈 개도국 요구와 농업위기, 문화일보, 2019년 7월 30일)

한국은 더 이상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면서 국내 농업부문을 보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한국의 농업은 여러 국가들과의 FTA 체결과 농촌 인구의 고령화로 지난 20여년간 급격한 변화를 겪었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빈번해지고 값싼 농산물이 해외로부터 유입되어 농업은 더욱 어려운 현실을 맞이하고 있다.

최근 농업부문에서 한국과 콜롬비아의 협력이 활발해 지고 있다. 콜롬비아는 한국과 중남미 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KoLFACI)에 가입하면서 한국과 본격적인 기술협력을 시작하였다(한국 주도 한-중남미 농식품 기술협력 협의체(KoLFACI) 출범, 식음료신문, 2014년 9월 16일). 그동안 콜롬비아 정부의 요청에 따라 한국은 농업기술보급 담당공무원 및 전문가를 초청하여 농업관련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초청연수는 농기계 및 영농기술 전수와 교육훈련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한국은 콜롬비아 영농지도사 및 농가를 대상으로 맞춤형 영농교육 프로그램도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한국은 콜롬비아의 농촌개발 및 농업기술보급 역량을 배양하고 있다. 또한 콜롬비아 현지의 요구를 반영하여 한국이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농업생산 및 수확 후 관리에 대한 기술도 전해주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한국은 콜롬비아에 한국형 영농모델을 이식하고 있다.

한국은 선진국 수준의 농산물 유통시설을 자랑하고 있다. 그리고 농업인을 지원하는 농업협동조합과 같은 체계화된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열대작물 재배 기술과 경험도 지니고 있다. 또한 신품종 개발의 자원이 되는 종자·종묘 유전자원 확보 및 기술과 자원은 세계적 수준이다. 이러한 한국농업의 경쟁력은 미래 성장산업으로서 국가의 경제성장 추진의 동력이 되고 있다.

이제 한국은 국제사회일원으로서 경제적 위상에 맞는 역할을 담당하며 새로운 성장 가능성을 모색해야 할 시점에 와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ODA정책의 중점협력대상국인 콜롬비아와 농업무문에 대한 협력관계를 재고해야 할 것이다. 콜롬비아 정부는 농촌개발을 위한 기술과 자본 부족으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한국은 농업관련 초청연수 및 기술교육을 통해 콜롬비아 농업생산성 향상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농업은 농업협동조합 시스템을 공유하며 콜롬비아 농촌개발의 정책적 기반이 되고 있다.

콜롬비아는 한국농업이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견할 수 있는 국가이다. 한국은 콜롬비아의 농촌개발을 위한 농업부문의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시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것은 국가의 경쟁력 있는 수출산업으로서 농업을 성장시켜 나갈 수 있는 계기로 이용될 것이다.

Abstract

A Study on the Rural Development of Colombia and the Agricultural Cooperative Relationship of Korea

Cha, Kyung Mi

The Colombian government that declared the end of the long civil war on June 23rd 2016, concluded a peace treaty with the FARC that was the biggest Colombian guerrilla revolutionary armed forces in Latin America. After concluding the peace treaty, the Colombian government established the laws on the integrated compensation and land return to victims. And for the decrease of poverty, it concentrated on the agricultural reform and rural development. Under the severe poverty and inequality in rural area, the rural development of Colombia was such an important issue for the implementation of peace. Despite the conclusion of the peace treaty, in reality, there are still many unsolved elements of social conflict focusing on rural area.

Colombia is a country on the priority cooperation list under the ODA policy of Korea. Both countries have established the extensive cooperative relationship in various areas. The Colombian government has expressed the great interest in the Korean agriculture because the Korean agricultural experiences possessing the world-best systematic agricultural system after overcoming the poverty for a short time could be a model for the agricultural reform of Colombia.

Currently, the Korean agriculture should seek for a new breakthrough. The Korean agriculture is facing the tough reality such as the aged rural population, inflow of cheap agricultural products into Korea because of market-opening, and frequent damage to crops by climate change. However, Korea has the world-class agricultural technology and the systematic farming system.

Colombia is a country in which Korea could seek for the new growth possibility. As the Colombian government is essentially needed to solve the poverty and also to stably secure the food in rural area through the agricultural reform, it is paying attention to the reinforcement of agricultural cooperation with Korea. Korea should more increase the cooperative relationship with Colombia in the agricultural sector which becomes a power for carrying out the national growth as a future industry.

안데스 3국과 한국의 협력 방안

김철희

1. 들어가며

안데스 산악지대를 중심으로 하는 자원부국인 페루, 에콰도르, 볼리비아 (이하 '안데스 3국'이라 칭함)는 비슷한 자연조건과 인종구성,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아울러 베네수엘라의 차베스로부터 시작된 대중적 인기를 기반으로 하는 좌파 민족주의의 영향을 받았고 지난 500년간 지속된 식민성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1) 경제적 중요성

안데스 3국은 1인당 GDP 3000~6000불 수준의 빈국이지만 석유, 천연가스, 광물 등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첨단 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3국의 주요 천연자원의 매장량의 세계순위를 보면 다음과 같다.

- 페루 : 구리(3위), 은(1위), 아연(3위), 납(4위), 금(6위), 석유(43위), 천연가스(32위)
- 에콰도르 : 석유 (82.7억배럴, 19위 /OPEC 회원국)
- 볼리비아 : 리튬(900만톤, 1위), 천연가스(3000억m3,36위)

2) 정치적 성향

에콰도르는 전임 라파엘 코레아 대통령(2007.1~2017.5)에 이어 여당 국가연합당의 레닌 모레노 대통령이 집권함에 따라 12년 연속 좌파진영이 집권을 하고 있으며 볼리비아는 2006년부터 12년째 급진 좌파성향의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이 집권이 이어지고 있다. 페루는 2006년부터 좌파인 알란 가르시아(2기)가 집권하였으나 종전의 중도 좌파에서 중도우파 성향으로 변화를 보이면서 자유시장경제에 바탕한 정책을 추진하는

였으며 2011.7월에는 급진 좌파성향의 우말라가 집권하였으나 대외개방 및 시장친화적 정책기조를 대부분 계승하였다. 즉 이데올로기보다는 시장경제를 바탕으로한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추구하면서 부의 공정한 재분배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포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16.7월에는 우파인 쿠진스키 대통령이 집권하여 경제성장과 전국민의 삶의 질 개선 중심의 정책을 취하고 있다. 에콰도르와 볼리비아가 과거 차베스의 베네수엘라처럼 다소 급진적 좌파성향(21세기 사회주의)을 띄고 있는 반면 페루는 브라질의 과거 룰라 정부처럼 좌파성향이지만 시장경제에 바탕을 둔 경제정책을 추진하므로써 남미에서 가장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3) 유사한 인종구성 및 역사적배경

안데스3국이 갖고 있는 유사한 자연조건과 인종구성, 역사적 배경은 '잉카제국'이라는 공동의 뿌리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인종구성을 보면 볼리비아, 페루, 에콰도르가 남미에서는 가장 원주민(인디헤나)의 비중이 높으며(중미에서는 과테말라) 이들은 부지런하고 손재주가 좋아서 중남미의 섬유산업 등 노동집약적인 산업에 양질의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다.

<표 8-1> 중남미의 국가별 인종분포

지역	국기	나라명	인구	백인	메스티소	몰라토	인디헤나	흑인	아시아인	
북미		Mexico	121,724,226	15.00%	70.00%	0.50%	14.00%	0.00%	0.50%	
		Brazil	203,429,773	53.80%	0.00%	39.10%	0.40%	6.20%	0.50%	
		Colombia	44,725,543	20.00%	53.20%	21.00%	1.80%	4.00%	0.00%	
		Argentina	41,769,726	85.00%	11.10%	0.00%	1.00%	0.00%	2.90%	
		Peru	30,814,175	12.00%	32.00%	9.70%	45.50%	0.00%	0.80%	
		Venezuela	27,635,743	16.90%	37.70%	37.70%	2.70%	2.80%	2.20%	
		Chile	16,888,760	52.70%	39.30%	0.00%	8.00%	0.00%	0.00%	
		Ecuador	15,007,343	9.90%	42.00%	5.00%	39.00%	5.00%	0.10%	
		Bolivia	10,118,683	15.00%	28.00%	2.00%	55.00%	0.00%	0.00%	
		Paraguay	6,759,058	20.00%	74.50%	3.50%	1.50%	0.00%	0.50%	
남미		Uruguay	3,308,535	88.00%	8.00%	4.00%	0.00%	0.00%	0.00%	
		Guatemala	13,824,463	4.00%	42.00%	0.00%	53.00%	0.20%	0.80%	
		Honduras	8,143,564	1.00%	85.60%	1.70%	7.70%	3.30%	0.70%	
		El Salvador	6,071,774	1.00%	91.00%	0.00%	8.00%	0.00%	0.00%	
		Nicaragua	5,666,301	14.00%	78.30%	0.00%	6.90%	0.60%	0.20%	
		Costa Rica	4,576,562	82.00%	15.00%	0.00%	0.80%	2.00%	0.20%	
		Panama	3,460,462	10.00%	32.00%	27.00%	8.00%	19.00%	4.00%	
		Cuba	11,087,330	37.00%	0.00%	51.00%	0.00%	11.00%	1.00%	
	카리브		Dominican Republic	9,956,648	14.60%	0.00%	75.00%	0.00%	10.00%	0.40%
			Puerto Rico	3,989,133	74.80%	0.00%	10.00%	0.00%	15.00%	0.20%
Total			579,092,570	36.10%	30.30%	20.30%	9.20%	3.40%	0.70%	

자료: 위키피디아

* 15세기 중엽~16세기초까지 안데스 산맥을 중심으로 현재의 페루, 에콰도르, 볼리비아, 칠레북부까지 건설된 광대한 제국으로 수도는 현재 페루의 쿠스코로 인구 약 천만명, 면적 1,000,000 km2에 달하는 대국을 건설함 (wikipedia)

4) 공적개발원조(ODA) 대상국

안데스 3국은 우리의 ODA 대상국으로 1991-2016년까지 약 2억불정도 지원. 안데스 3국은 지난 10년간 국제원자재 가격 호조에 힘입은 견실한 경제성장 지속으로 중산층이 많이 확대되어서 ODA와 연계한 우리기업의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

- 지원규모*: 페루(96.2백만불), 에콰도르(60백만불), 볼리비아(46.8백만불)

2. 페루

1) 넓은 국토와 천연자원 보유

페루는 128.5만 Km2의 면적으로 한반도의 6배 수준이고 인구는 31.5백만명으로 중남미 5위 수준이다. 구리, 금, 아연 등 풍부한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국제원자재 가격의 등락에 따라 경제가 크게 좌우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특히 구리는 생산량이 세계 2위(1위는 칠레)인데 2021년까지 1위로 부상할 수 있도록 설비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표 8-2> 페루 주요자원 보유 현황**

자원(단위)	매장량	세계비중(%)	세계순위	생산량	세계비중(%)	세계순위
금 (매장량:톤/생산량:톤)	2,400	5.0	6	150	4	6
납 (매장량:만톤/생산량:만톤)	670	7.5	4	31	6.4	4
동 (매장량:만톤/생산량:만톤)	8,100	11	3	230	12	2
아연 (매장량:만톤/생산량:만톤)	2,500	11.4	3	130	10.9	3
은 (매장량:만톤/생산량:만톤)	12.0	21	1	4,100	15.2	3

자료: 중남미자원인프라협력센터(2017).

2) 지난 10년간 남미국 중 가장 안정적 경제성장

최근 10년간 남미국중 가장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며 2013년 세계경기 침체로 인한 국제원자재 가격하락으로 경제가 다소 위축되었으나 2015년 이후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2017년도에는 “엘니뇨”의 극심한 피해로 경제성장률이 2.8%로 당초 예상에 미치지 못하였으나 2018년에는 2017년 하반기 이후 구리 등 국

* 1991-2016 ODA 지원규모임.
** 생산량은 추정치임

제원자재 가격의 회복세와 “엘니뇨” 피해복구 및 인프라 투자사업 활기로 3.8%(IMF 예상)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표 8-3> 연도별 페루 주요 경제지표 동향**

연도	단위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GDP성장률	%	1.0	8.5	6.5	6.0	5.8	2.4	3.3	3.9	2.8	3.8
물가상승률	%	2.9	1.5	3.4	3.7	2.8	3.2	3.5	3.6	3.1	2.6
환율	Sol/US\$	3.01	2.83	2.75	2.64	2.70	2.84	3.20	3.38	3.27	3.33

자료: 페루 중앙은행

3) 중남미에서 가장 적극적인 대외개방정책 유지

칠레와 더불어 중남미에서 가장 개방적인 정책을 취하고 있으며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전체 수출의 96%이상을 미국, 중국, 일본, 한국 등 53개국 넘는 FTA체결 지역으로 수출하고 있으며 중남미에서 3번째로 비즈니스하기 쉬운 국가이다.

- 양자간 협정(FTA) : 미국, 중국, 일본, 한국 등 53개국이 넘는 FTA체결
 - 비준절차 중 : 과테말라, 온두라스, 브라질
- 다자간 협정 : WTO, MERCOSUR, ANDEAN(볼리비아,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Pacific Alliance(멕시코, 콜롬비아, 칠레, 페루)
 - 비준절차 중 : TPP(범태평양동반자협정)

<표 8-4> 중남미 내 기업환경평가(Ease of Doing Business Index) 국가순위

국가명	세계 순위	국가	세계 순위
멕시코	38	에콰도르	117
칠레	48	아르헨티나	121
페루	50	과야나	137
콜롬비아	54	수리남	156
우루과이	92	볼리비아	157
브라질	116	베네수엘라	186

자료: World Bank Doing Business

* 엘니뇨와 라니냐 현상 : 태평양의 적도 지역에서 무역풍이 불어 동태평양 적도부근(페루, 에콰도르 연안 등)에서 바닷물을 서쪽으로 이동시키고 식물과 플랑크톤이 많은 차가운 물이 올라옴(용승). 무역풍은 주기적(2-7년 주기)으로 태평양 서쪽지역의 따뜻한 표층수가 동쪽연안의 차가운 해수(홍몰트 해류)와 만나면서 약해지는데 무역풍이 약해지면 바닷물을 밀어내는 힘과 용승이 약해져서 해수면 온도가 평소보다 상승하는 현상을 ‘엘니뇨’라고 하며 역으로 무역풍이 강해져서 바닷물을 밀어내는 힘과 용승이 강해지면 해수면 온도가 평소보다 하락하는 현상을 ‘라니냐’라고 함
** 물가상승률과 환율은 연평균 기준이고, 2017년, 2018년 수치는 World Bank 전망치임.

4) 주요 현안사항

정치적 불안정

2016.7월 집권한 중도우파인 쿠진스키 정부 Partido Por Kambio(PPK)당의 의석수가 17석(전체 의석수 130석)에 불과하며 최대 야당인 우파 Fuerza Popular(FP)당(71석)과의 협력여부가 최대 관건이며 2016년말에 터진 브라질 오데브레시(ODEBRECHT) 뇌물 스캔들과 더불어 국가 주요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최근에는 쿠진스키대통령이 톨레도 전대통령시 재경부장관으로 재임하면서 자신의 컨설팅회사 이름으로 수십만불을 수수한 혐의와 2017.12.24일 후지모리 전대통령**사면과 관련 야당인 FP당과 정치적 야합을 하였다는 비난을 받고 있어 향후 경제성장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엘니뇨” 재해 복구 및 인프라 확충 사업

2016.12~2017.5월 까지 지속된 60년만이 최악의 ‘엘니뇨’로 백수십명의 사망과 가옥, 도로, 교량 파손 및 손실, 농작물 피해 등 피해규모가 40억불(GDP의 1.9%)에 달하였다. 이러한 극심한 피해의 원인은 리마시로의 인구 집중화(9백만 이상)현상으로 인해 북부 및 서부 정글, 산맥 지역의 인구 및 투자 감소로 기본적인 전력, 상하수도, 위생설비 등 인프라가 부족해서 피해규모가 커졌으며 2018년에는 ‘라니냐’의 가능성도 대두됨에 따라 재해복구와 피해 최소화를 위한 인프라 투자가 시급하다

5) 한국과 교역 현황 및 진출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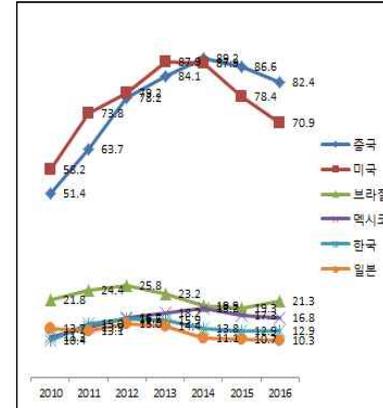
한국과 교역 현황

2011.8월 발효한 한-페루 FTA의 버팀목 효과로 2016년 우리나라의 대 페루 수출액은 12.9억불을 기록, 페루 전체 수입시장의 3.6%를 점하여 중국, 미국, 브라질, 멕시코에 이어 5위를 차지하였으며 대 페루 수입은 13.9억불로 페루 전체 수출시장에서 3.8%를 점하여 중국, 미국, 스위스, 캐나다에 이어 5위를 차지하여 한국은 페루의 5

* 브라질의 대표적 건설 및 석유화학 그룹으로 공공입찰 수주를 위해 중남미 12개국 관료에게 뇌물을 준 사건
 ** 알베르토 후지모리(78세, 1999-2000년 대통령 재임) : 현 FP당 대표 케이코 후지모리의 아버지로 재임 기간 중 독재와 인권탄압, 부정부패 혐의로 2010년 페루 대법원으로부터 25년 선고를 받고 복역하다 작년 12.24일 사면됨. 재임 기간 중 초인플레이션을 고도 경제성장을 이루는가 하면 폭력 및 마약조직을 와해시키는 등 치안강화에도 성과를 거두는 등 긍정적 평가도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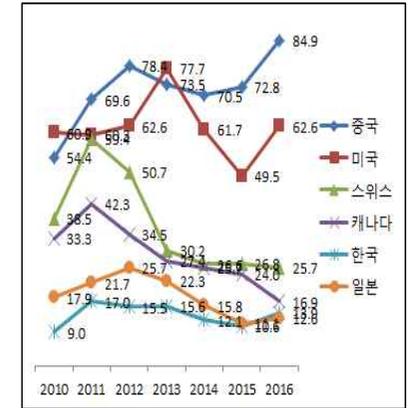
대 교역국으로 부상한 바 있다. 투자측면에서는 2016년말 기준 한국의 대 페루투자규모는 20.7억불(수출입은행 통계)이며 대부분 자원(90%이상)에 집중되어 있어 투자 분야를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

<그림 8-1> 페루 국별수입 현황(2010-2016)
(단위: 미억불)



자료 : 페루 관세청 (2016.12월) *일본은 10위

<그림 8-2> 페루의 국별 수출현황(2010-2016)
(단위:미억불)



자료 : 페루 관세청 (2016.12월) *일본은 6위

6) 우리의 진출전략

성숙기에 접어든 양국간 FTA의 최대 활용

2011.8월 양국간 FTA 발효후 6년이 지난 시점(2017.7)에서 관세가 철폐된 품목을 중심으로 진출노력 강화하여야 한다. (FTA 6년차 주요 수혜품목: 선박, 자동차, 자동차부품, 타이어, 무선전화기, TV, VCR, 세탁기, 의료위생용품, 농차, 배, 사과, 설탕, 필터담배, 맥주, 위스키, 인삼 등)

우호적인 관계(포괄적 전략동반자)를 활용한 정부조달 시장 적극 참여

기존 FTA와 2015.4월 우리 VIP 방문으로 격상된 친밀한 양국관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재해복구 및 인프라확충 산업 등에 적극적인 진출 노력 필요(정부조달 시장 유망분야: 의약품 및 의료기기, 통신장비, 교육장비, 위생 보안 장비, 보안장비, 도로 및 인프라건설 등)

양국간 산업협력차원에서의 투자진출 필요

아울러 페루의 50개국에 넘는 국가와의 양자협정, 태평양동맹,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추진중) 등으로 확보한 거대 자유무역지역 진출을 위해 페루를 거점으로 활용하여 위해 양국간 산업협력차원에서의 우리기업의 적극적 투자진출 필요하다.

- (예시) 페루는 최대 관심분야인 농수산물의 중국 등 해외시장진출 위해 한국의 식품가공기술, 양식기술 등 협력 필요하며 한국은 조선, 항공 등 주요 산업분야에 페루기업과 첨단 기술이전, 산업협력 등을 통해 인근 중남미 등 해외시장 진출도

3. 에콰도르

1) 풍부한 석유매장량 보유

에콰도르는 중남미 양대 OPEC 산유국으로 남미에서는 세 번째로 많은 80억배럴의 매장량(베네수엘라, 브라질 다음)을 보유하고 있으며 일일 54만배럴 생산으로 브라질,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아르헨티나에 이어 남미국중 5번째로 생산량을 기록하고 있다. 최근년도 지속적인 국제유가하락으로 경제성장률이 2014년 4.0%에서 2016년에는 -1.5%, 2017년에는 -1.6% 로 하락하였으며 최근 저유가와 공공부문 차입증가에 따른 정부재정상황 악화와 달러 공용화 지속 등으로 2018년도에도 마이너스성장(-0.3%)이 예상되고 있다(IMF 전망치)

2) 2000년 달러공용화(Dollarization) 이후 안정적 물가상승률 유지

거시경제와 물가안정을 위해 2000년 달러공용화 정책을 채택하였으며 그이후로 3-5%대의 안정적 물가상승률을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국제유가 하락으로 경기가 침체되었지만 그간 거시경제적 안정을 유지하여 왔다.

<표 8-5> 주요 경제지표 동향*

주요지표	단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경제성장률	%	5.2	4.5	5.0	0.2	-1.5	-0.6	-0.3
재정수지(GDP대비)	%	-0.9	-4.6	-5.2	-5.1	-7.5	-5.6	-4.9
소비자물가상승률	%	4.2	2.8	3.7	3.4	1.2	0.4	1.3

자료: IMF, 중앙은행(2017)

* 2017, 2018년은 전망치임

<표 8-6> 에콰도르 석유 매장량*

자원(단위)	매장량	세계비중(%)	생산량	세계비중(%)
석유 (매장량: 백만배럴, 생산량: 천배럴/일)	8,000	0.5	545	0.6

자료 : BP Statistical Review(2017)

3) 산업구조의 취약성

원유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50%를 차지하고 조세 수입원의 1/3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국제유가 변동에 취약하고 농수산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홍수, 가뭄등 자연재해에 취약한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다. 제조업이 GDP의 34%를 차지하나 대부분 가공식품 제조, 섬유직물 등에 치중되어 있고 자동차, 건설장비, 연료 등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 산업별 GDP비중(2016년) : 서비스업 60%, 제조업 34%, 농업 6%

4) 주요 현안사항

이전정부와의 차별화를 위한 정치개혁

2006년 당선된 급진좌파 라파엘 코레아(Rafael Corea) 대통령은 3선 연임을 통해 10년간 장기집권하였으며 이어서 2017.5월 출범한 여당 국가연합당 소속 레닌 모레노(Lenin Moreno)은 반부패, 적폐청산을 통해 새로운 체제구축을 시도

- 부패에 연루된 부통령 호르헤 글라스에 위임된 대통령 권한을 박탈하고 '17.11월 탄핵안 제출 심의중
- 2018.2.4.일 헌법개정 국민투표에서 대통령 연임제한과 부패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은 정치인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법이 통과되어 전 코레아대통령의 향후 대선 출마와 그측근들의 피선거권이 제한됨

민간주도 경제구조 구축 및 대외 개방 경제정책 추구

국제유가 하락으로 재정적자가 커지면서 건설 및 자원개발 분야 민간투자 유치정책을 강화하여 민간부문이 경제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

2017년부터 발효된 EU와 자유무역협정으로 수출이 증대되어 2020년에는 석유부문

* 2016년 기준이며 생산량은 추정치임

을 제외하고 무역흑자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또한 외국자본 유치, 대외무역 강화, 관광산업 촉진을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미국, 러시아, 터키, 한국 등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 미국은 에콰도르 제1의 교역국으로 2016년에 총수출의 32%, 수입의 25%를 의존하고 있으며 주요 수출품인 원유의 경우 56%를 미국에 수출하고 있음
- 경제협력 다변화를 위해 2016.11월 EU와 협정체결을 완료하였으며 한국과는 2015년부터 전략적 경제협력협정(SECA) 논의중

대 중국 경제의존도 증가

석유구매권 담보부 대출계약에 의해 에콰도르 원유의 70%이상이 중국과 태국으로 수출되고 있으며 석유 담보 차입을 중국으로부터의 차입금은 약 80억불로 2016년 GDP의 8%에 달함. 석유, 광산 및 건설업 등에 90여개의 중국기업이 진출하여 투자

5) 한국과 교역 현황 및 진출전략

교역현황

한국의 수출이 수입을 훨씬 초과하는 무역흑자 대상국이며 2014년부터는 흑자폭이 감소하고 있음. 2015년부터 수입쿼터제와 셰이프가드등 수입제한조치와 에콰도르 국내 경기침체로 한국의 수출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6년부터 에콰도르의 대한국 주요수출품이었던 원유 수출이 중단되면서 수입도 급격히 감소하고 있음

- 에콰도르 정부가 원유를 선매도하고 자금을 조달한 결과 대 한국 수출물량이 거의 없는 상황으로 당분간 원유의 한국수출은 어려울 전망임

한국의 주요수출품은 자동차, 자동차부품, 원동기 및 펌프 등이며 주요수입품등이며 주요수입품은 갑각류, 과실류, 동제품 등임

6) 진출전략

에콰도르 정부의 제조업 육성정책에 적극 동참

에콰도르 정부는 2015.4월 국내제품 생산성과 다양성 제고를 위해 향후 10년간(2025년까지) 9개 부문을 전략산업으로 지정하였으며 동 전략분야의 지속적인 발굴을 위해 에콰도르내에 총 8개 기술센터 설립하여 교육 등 지원 (9개 전략산업: 백색가전,

플라스틱, 제약, 농화학, 농기계, 밸브, 케이블, 변압기 및 파이프)

한국기업들은 동 전략분야에 관련된 생산기계, 중간재, 부품 등의 공급에 중점 마케팅과 함께 8개 기술센터에 대한 기술 및 교육 지원 노력을 병행하여야 함

<표 8-7> 한-에콰도르 교역규모

(단위: 미백만불,%)

구분	수출		수입		무역수지
	금액	증감율	금액	증감율	금액
2010	887.2	102.4	12.3	21.9	874.9
2011	856.6	-0.1	30.6	150	856.0
2012	856.8	-3.4	39.5	29	817.3
2013	919.9	7.4	48.4	22.5	871.5
2014	811.5	-11.8	342.5	607	469.0
2015	641.3	-21	245.7	-28.3	395.6
2016	434.2	-32.3	94.3	-61.6	299.3
2017	608.9	40.2	127.8	35.6	484.1

자료 : 무역협회 KOTIS통계

민간자본으로 추진되는 주요 프로젝트 참여

에콰도르 정부가 민관합작사업(PPP) 방식으로 프로젝트를 추진함에 따라 우리기업의 적극적인 참여 필요. 민관합작투자에 대한 인센티브와 생산·무역 및 투자기업법(COPCI)를 통한 세제혜택과 인센티브를 활용한 투자전략 수립

- 에콰도르는 해외공기업의 파이낸싱을 통한 진출시 수의계약 가능한 제도적 장치를 가지고 있어 우리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동반진출을 통해 동제도 활용

3. 볼리비아

1) 풍부한 천연자원 보유

볼리비아는 안데스의 소국이나 풍부한 광물, 천연가스 등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자원민족주의 성격으로 자원에 대해 국가가 강력히 통제하고 있다. 특히 전기차 수요가 늘면서 전기차용 리튬이온 배터리의 핵심 원료인 리튬의 확인 매장량이 900만톤으로 세계 1위이다<표8-8 참조>

2) 남미에서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 지속

볼리비아는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세와 탄탄한 재정기반을 바탕으로한 정부지출, 투자확대 등으로 2013년 6.8%의 최고치 성장률을 기록함. 2014년 이후

세계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경제성장률이 둔화하고 있으나 여전히 남미에서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음

<표 8-8> 볼리비아 천연자원보유 현황(2016)*

자원 (단위)	매장량	세계비중(%)	세계순위	생산량(e)	세계비중(%)	세계순위
천연가스 (매장량:조입방미터/ 생산량:억입방미터)	0.3	0.2	중남미2위	197	0.6	중남미5위
납 (매장량: 만톤/생산량: 만톤)	160	1.8	9	8	1.7	8
주석 (매장량: 만톤/생산량: 만톤)	40	8.3	4	2.0	7.4	6
창연 (매장량: 톤/생산량: 톤)	10,000	2.7	3	10	0.1	5
팅스텐 (매장량: 톤/생산량: 톤)	NA	-	-	1,200	1.4	5
카드뮴 (매장량: 만 톤/생산량: 톤)	1.3	2.3	7	-	-	-
안티몬 (매장량: 만톤/생산량: 만톤)	31	15.5	3	0.5	3.3	4
아연 (매장량: 만톤/생산량: 만톤)	460	2.3	7	43	3.3	7
은 (매장량: 만톤/생산량: 톤)	2.2	3.9	8	1,300	4.8	5

자료: USGS Mineral Commodity Summaries** (2017)

3) 남미에서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 지속

볼리비아는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세와 탄탄한 재정기반을 바탕으로한 정부지출, 투자 확대 등으로 2013년 6.8%의 최고치 성장률을 기록함. 2014년 이후 세계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경제성장률이 둔화하고 있으나 여전히 남미에서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음

<표 8-9> 주요 경제지표 동향***

주요지표	단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경제성장률	%	5.2	5.1	6.8	5.5	4.9	4.3	4.2	4.0
재정수지(GDP대비)	%	0.8	1.8	0.7	-3.4	-6.9	-6.6	-6.6	-6.3
소비자물가상승률	%	6.9	4.5	6.5	5.8	4.1	3.6	3.2	5.1

자료: IMF

* 볼리비아의 경우, 리튬의 확인자원량(Identified resources)이 900만 톤(세계1위, USGS)
 ** 카드뮴 매장량을 집계하고 있지 않으며 평균적으로 카드뮴 매장량은 아연 매장량의 0.03%를 차지하므로 동 자료에서는 상기 비율로 계산하여 표기함
 *** 2017년과 2018년의 수치는 전망치임

4) 안정적인 정치기반 유지

급진 좌파성향의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이 2014년 3선에 성공(임기 2015년~2019년) 하며 2006년부터 장기집권을 하고 있으며 의회에서 과반수 이상 의석을 확보하여 정치적인 안정을 이루고 있다.

5) 주요 현안사항

열악한 인프라 환경개선

파라과이와 더불어 내륙국으로 국제교역의 대부분이 철도와 육로를 통해 이루어짐으로 교통 인프라가 경제에 중요한 요소임. 잦은 천연재해로 인한 도로파손, 낮은 도로포장률로 도로 인프라가 취약하며 수송비가 매우 높다. 볼리비아정부는 5개년 국가개발계획(2011-2015년)에서 인프라 개선을 우선과제로 선정하여 투자를 확대하였다.

천연가스, 원유 등 천연자원에 의존적인 취약한 경제구조

볼리비아는 천연가스 등 광업 비중이 GDP의 16.8%(2015년 기준) 차지하는 등 특정 자원에 의존적인 경제구조로 국제 에너지 가격변동에 취약하다. 국제에너지 가격변동에 대비하여 주요 수입국인 브라질, 아르헨티나와 장기 구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자원개발사업을 위한 외국인투자 유치 노력 필요

6) 한국과 교역현황 및 진출전략

한국과 교역현황

한국이 수출하는 주요품목은 자동차, 광산기계, 기호식품(담배등) 등이며 수입품목은 아연과 기타 금속광물이다

<표 8-10> 한-볼리비아 교역현황

	2014	2015	2016	2017	주요품목
수출(미천불)	129,701	90,337	66,339	65,707	자동차, 기호식품(담배등), 농약· 의약품
수입(미천불)	299,418	244,670	393,905	432,195	아연광, 기타금속광물, 식물성물질

자료: 무역협회 KOTIS

7) 우리의 진출전략

중장기적 일관된 자원개발정책 추진

한국은 2009년 볼리비아 리튬개발 프로젝트에 착수하였다가 부실과 비리로 2015년

접었다. 반면 경쟁국인 중국과 일본은 일관된 해외자원개발 정책으로 적극적으로 리튬 광산 등 투자에 나서고 있다. 전기차의 붐으로 리튬이온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리튬 등 확보 경쟁이 치열하다. 리튬 등 주요 광물자원 부국인 볼리비아에서 우리도 중장기적인 일관된 자원개발정책하에 현지 자원개발에 적극참여 하여야 한다.

ODA와 연계한 사업 참여 확대

1991-2016 기간중 KOICA가 볼리비아에 약 4,680만불의 ODA 자금을 지원하였으며 분야별로는 보건의료분야 (47.1%)로 가장 높고 공공행정(13.1%), 교육(9.4%)순이다. 지원분야가 병원 및 일부 행정분야 개선 등 몇개분야에 한정되어 있으나 다양한 인프라 확충 사업 참여 등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사업계획 수립시 우리 기업의 참여가능성을 염두에 둬으로써 향후 사업 추진시 우리기업의 참여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맺는말

1) 안데스3국(페루, 에콰도르, 볼리비아)에 대한 거점화 전략 필요

안데스3국은 1인당 GDP가 3,000~6,000불 정도의 빈국이지만 풍부한 광물자원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어 주요한 경제협력 대상국이다. 볼리비아와 에콰도르는 급진 좌파 성향으로 국가로 정책적으로 접근이 어려운 면이 있어 보다 시장경제에 입각한 정책을 취하고 있는 페루를 허브화하여 진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언어, 문화적, 지리적, 제도적 유사성으로 인하여 한국가에서 성공한 모델은 쉽게 다른 국가로 전파될 수 있으며 그만큼 추진한 사업에 대한 평판도 중요하므로 사후관리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 예시: 페루에서 정부간사업으로 성공한 훈련기, 지능형순찰차, 다목적함(LPD)사업은 주변국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

2) 양국간 산업협력에 기반한 진출 강화

페루는 한국과 포괄적 전략동반자 수준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2011.8월 양국간 FTA발효로 정부조달시장 진출에서의 우리기업에 대한 장애요인은 별로 없다. 에콰도르와 볼리비아도 급진 좌파성향 국가이지만 한국의 경제발전 모델 (새마을운동

포함)에 놀라움과 부러움을 갖고 있어 우리로부터 산업협력, 기술 이전 등 희망하고 있다. 단순 완제품 수출보다는 양국간 산업협력 차원에서 융합된 형태 (상품+기술이전+교육훈련+사후관리)로 진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3) 중국, 스페인 등 현지에 강력한 기반을 가지고 있는 기업과 제휴

에콰도르, 볼리비아는 좌파 민족주의 성향이어서 우리기업 진출시 정치적 리스크가 크며 현재 안데스3국에서 발주하는 프로젝트들이 대부분 민관합작투자사업(PPP:Public-Private Partnership)으로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현지에 정치적 영향력이 있거나 오랜동안 강력한 기반을 두고 있는 중국기업, 스페인 등 유럽기업과 제휴하여 진출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중남미에 대해서 중국이 많은 투자를 하였지만 진출사업의 기술수준 및 사후관리, 노동문제 등으로 이미지가 좋지 않고 스페인계 기업들은 최근 브라질의 건설사 오데브레시(Odebrecht)의 중남미 대형프로젝트와 관련 뇌물수수 비리에 연루되어 있어 이미지가 많이 실추된 상황으로 우리기업이 이들과 협력하기에는 적기라고 할 수 있다.

4) 금융지원 강화

안데스3국 프로젝트들이 대부분 민관합작투자사업(PPP, 중장기 성격)이어서 우리기업의 접근이 용이치 않다. 우리기업의 효율적인 진출을 위해서는 중남미진출을 위한 공동펀드 조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기업이 수행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지원(공급자 파이낸싱)을 위해 한국 ECA(Export Credit Agency:한국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 자금 지원을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한다. 아울러 미주개발은행(IDB), 안데스개발공사(CAF) 등 지역개발은행의 자금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Abstract

Cooperation Study of Three Countries on Andes and Korea

Kim, Cheol Hee

Peruvian, Ecuador and Bolivi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ndean Three”), which are located in the Andes mountainous region, have similar natural conditions, ethnic composition, and historical background. It has also been influenced by left-wing nationalism, which is based on popular popularity that began with Chavez of Venezuela, and it is under the challenge of escaping the last 500 years of colonialism.

The “Andean Three” is a poor country with a per capita GDP ranging from \$ 3,000 to \$ 6,000, but it has a wealth of natural resources such as oil, natural gas, and minerals. If we look at the world rankings of the reserves of major natural resources of the three countries

Peru: Peru: copper (third), silver (first), zinc (third), lead (fourth), gold (sixth)

Ecuador: Oil (8.27 billion barrels, 19th place / OPEC member countries)

Bolivia: Lithium (9million tons, first place), natural gas (300 billion m3, 36th place)

Ecuador has been in power for 12 consecutive years following the presidency of Rafael Correa (2007.1~ 2017.5), the ruling National Alliance, and in Bolivia Evo Morales has been in power for 12 years since 2006, Peru has been dominated by left-hander Alan Garcia (2006.7~2011.7), and Ollanta Humala(2011.7~2016.7), but most succeeded in opening up the market to foreign and market-friendly policies. Since July 2016 President Kuczynski, a market

economist, has been in power.

It is presumed that the similar natural conditions, ethnic composition and historical background of the “Andean Three” are based on the common roots of the Inca Empire. In terms of ethnic composition, Bolivia, Peru and Ecuador are the most aboriginal (indigenous) in South America (Guatemala in Central America), and they are diligent and dexterous, providing quality labor to labor-intensive industries such as Latin America's textile industry.

[참고문헌]

페루 이해하기(외교부, 2016.11), 페루개황(외교부, 2016.11)

수출입은행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볼리비아-2015.11, 페루-2017.3, 에콰도르-2017.12)

안데스 자원부국과의 경제협력확대방안(KIEP, 2012.12)

KOICA 국별분야별총괄 지원통계(1991-2016) 홈페이지자료

(<http://stat.koica.go.kr/ipm/os/acms/realmEacoRealmSmrizeList.do?lang=ko>)

코트라 2018년 국별진출전략(페루, 에콰도르)

페루 중앙은행 통계자료(2018.2)

(<http://www.bcrp.gob.pe/estadisticas/cuadros-de-la-nota-semanal.html>)

한국과 브라질은 '전략적 동반자'가 되어야 한다

이영선

1. 왜 브라질인가?

브라질 사람들은 놀기 위해 모이지만 한국 사람들은 항의하기 위해서 모인다. 물론 브라질에서도 대통령 탄핵 요구와 공공요금 인상에 항의하는 집회가 열리지만 대모대는 개성 있는 치장이나 분장을 하고 행진하며 데모의 마지막을 날씨가 더운데 고생했다고 서로 위로하면서 거리의 맥주집에서 마무리한다. '결사반대'에 익숙한 우리한테는 브라질의 데모는 '정치적 삼바축제' 정도이다.

한국인이 상파울루의 최대 변화가인 파울리스타를 건다보면 불편한 점이 있다. 직선으로 가지 못하고 앞에서 오는 사람을 피하여 지그재그로 가야 하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한 방향으로 가는 우측통행의 서울의 거리와 다르다. 한국은 효율, 브라질은 비효율적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넓은 영토에 적은 인구가 사는 브라질에서는 한 거리를 위한 규정은 필요 없다. 브라질과 한국은 관리와 규율이 다르다.

한국과 브라질은 다르기 때문에 '전략적 동반자'가 될 수 있다. '전략'이라는 말은 단기가 아닌 중·장기적으로 꾸준히 나갈 방향과 목표를 의미한다. 또한 '동반자'는 서로가 부족한 것을 메꾸어 주는 관계를 의미한다. 따라서 '전략적 동반자'의 의미는 '두 나라가 중장기적으로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서로 부족한 점을 채워주는 관계'를 뜻한다. 국가 간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정치, 외교, 군사, 안보, 경제, 통상 등 여러 분야에서 맺을 수 있는



데 우리는 브라질과 경제, 통상 분야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을 수 있다. 경제, 통상의 예를 들면 무역, 투자, 산업협력, 식량, 자원, 에너지 등이다.

영토가 작은 우리나라는 브라질과 같이 큰 나라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 세계적으로 영토규모 400만 km² 이상이고 인구 1억 이상이며 GDP 1조 달러 이상인 국가는 미국, 중국, 브라질 등 3개 나라이다. 그런데 브라질은 미국, 중국, 러시아 등 다른 대국과 달리 순수하게 경제, 통상에서 서로 이익이 되는 관계를 만들 수 있다. 브라질은 선진국의 반열에 오를 수 있는 조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으며, 이미 중남미 최대의 경제대국이다.

우리는 브라질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면서 동반자 관계를 만들 수 있다. 브라질의 1인당 GDP는 중국보다 조금 높은 1만불 수준이다. 1인당 국민소득 기준으로 세계 69위의 국가이다. 소득수준을 높이기 위해 경제개발이 필요하다. 우리의 경제 개발 경험을 얼마든지 공유할 수 있다. 또한 브라질의 세계무역 비중은 1.1%에 불과하다. GDP 기준 세계 8위의 경제대국으로서는 낮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국내외의 전문가들은 브라질의 대외정책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최근 브라질도 자유무역협상에 적극적인 자세로 바뀌고 있다. 2016년 취임한 테메르 정부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가 회원국인 메르코수르(남미공동시장)와 유럽연합(EU), 멕시코, 칠레, 콜롬비아, 페루가 회원국인 태평양동맹(PA) 등과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표 9-1> 영토 대국 1인당 GDP

순위	국가명	면적(km ²)	1인당 GDP
1	러시아	17,098,242	10,248
2	캐나다	9,984,670	44,773
3	미국	9,826,676	59,495
4	중국	9,596,961	8,583
5	브라질	8,547,906	10,019
6	호주	7,692,024	56,135
7	인도	3,287,263	1,852
8	아르헨티나	2,780,400	14,061
9	카자흐스탄	2,724,900	8,585
10	알제리	2,381,741	4,225

자료: Country Comparison to the World, IMF(2017)

참고로, 메르코수르 회원국은 다른 나라와 개별적으로 FTA를 체결하는 것이 제한된다. 메르코수르는 한국과의 FTA에도 긍정적인 입장으로 변했다. 그동안 브라질이 소극적이어서 진전되지 않았었는데 브라질의 입장이 적극적으로 바뀐 것이다. 한국의 브라질 시장 점유율은 2016년 기준 4%에 불과하다. 두 나라의 경제협력 확대의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브라질 경제당국은 과점적 구조로서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브라질 제조업에 한국기업들이 진입해서 경쟁을 자극해 주길 내심 바란다.

브라질은 우리가 없는 것을 갖고 있다. 브라질은 세계 5위 대국이지만 현재 농지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 국토면적의 7%에 불과하며, 농지 전환이 가능한 면적이 무궁무진하다. 1인당 농지규모로 볼 때 한국은 321m²에 불과하지만 브라질은 4,000m²이다. 사막이나 얼음의 땅으로 뒤덮인 다른 대국들과 비교하면 브라질의 잠재력은 높은 것이다. 풍부한 천연자원도 많지만 기술이 없어서 주로 원료 상태로 수출된다.

브라질은 다양성을 갖고 있다. 북쪽에는 사막이 있고 남쪽은 남극이 있는 칠레 정도는 아니지만 브라질에 여러 기후와 지형이 있어서 다양성이 있다. 브라질 사람들이 다양한 사고를 하게 되는 배경이다. 우리는 좌우대칭의 사물이 안정적으로 느껴진다. 그러나 브라질은 비정형이다. 상파울루의 도시와 빌딩도 상식을 벗어난 좌우대칭이 아닌 것이 많다. 사각이나 직각이 아닌 곡선의 비정형적인 모습이어서 들어갈 때와 나올 때의 길이 달라서 헛갈리기조차 하다. 1956년에 건설된 수도 브라질리아는 도시 자체가 비행기 모양이고 상원과 하원을 상징하는 둥근 모양의 국회의사당이 있다. 고정관념을 벗어난 이러한 설계에 비평가들은 “미치지 않고서는 저런 설계를 할 수 없다.”고 말할 정도였다. 브라질의 상류층은 유럽계이고 하류층은 흑인. 혼혈인데 다양성과 이에 근거한 창의성은 과거 큰 농장을 운영하는 유럽계 농장주 가문출신의 풍요로운 계층에서 나온다. 우리가 짧은 기간에 경제개발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다양성보다도 관리와 규율 체계의 덕이지만 우리 경제가 대량생산에서 창의적인 고부가가치 산업구조로 전환되어야 하는 시점에서 브라질은 우리의 주목을 끈다.

브라질은 이웃 남미 국가로 진출할 수 있는 거점이다. 브라질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라는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볼리비아 등 9개국인데 인근국과의 경제교류가 늘고 있다. 2017년 브라질의 대 메르코수르 회원국에 대한 수출도 전년보다 증가했다.

다국적 기업들도 메르코수르 내에서 경영전략을 재편하고 있다. GM은 브라질에서는 승용차, 상용차를, 그리고 아르헨티나에서는 SUV를 특화해서 생산할 계획이다. GM은 아르헨티나에 자동차 공장을 새로 세울 계획인데 투자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브라질에 진출한 한국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의 아르헨티나 재투자를 희망한다. 브라질에 18만대의 생산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현대자동차도 2016년 최초로 브라질에서 생산한 승용차 300대를 우루과이로 수출했는데 물량이 매년 늘고 있다. 브라질에서 자동차용 케이블을 생산하던 한국의 THN도 노사문제로 브라질의 생산시설을 파라과이로 옮겼고 브라질은 물류창고의 역할을 수행한다. 브라질을 메르코수르 국가로 진출하기 위한 플랫폼으로 활용하는 전략은 실현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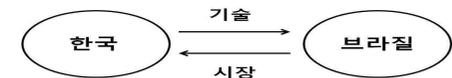
중국도 브라질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2014년 중국은 브라질과 페루를 연결하는 5,280km의 남미대륙횡단철도의 건설을 관련국과 합의했다. 대서양에 있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와 태평양의 페루 리마를 연결하는 노선이다. 중국은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서석탄, 철광, 대두 등을 대량 수입하고 있어서 이들 전략물자의 안정적인 운송로 확보가 필요하다. 횡단철도가 생기면 남미 대륙의 화물을 열차로 페루에 집합한 뒤 배로 태평양을 건너서 중국에 보낼 수 있다. 파나마 운하의 수송로를 대체하는 것이다.

2. 유망한 전략적 동반 분야

1) 제조업

기술을 갖고 있는 한국과 큰 내수시장의 브라질은 보완적이다. 한국은 미국이나 유럽 등 이미 시장이 포화된 선진국보다는 브라질과 같은 개도국에서 진출기회를 찾는 것이 유리하다. 브라질은 ‘시장 줄테니 기술 달라’는 산업정책을 펼치고 있다. 예를 들면 자동차 분야의 정책인 이노바르는 자동차분야 기술혁신과 부품의 현지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완성차 업체가 브라질 부품의 사용비중 65%가 넘으면 세금을 감면해주었다. 의료분야

<그림 9-1> 브라질-한국 산업협력



도 PDP (Productive Development Partnership) 가 있다. 외국계 제약사가 브라질 국영제약사에 기술을 제공해서 생산할 경우 브라질 정부가 생산제품을 최대 10년까지 구매해준다. 우리는 기술협력을 통해서 브라질이 육성하려는 자동차, 의료.제약, 정보통신, 석유화학, 신재생에너지, 정보통신 등에서 보완적 관계를 만들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정책들이 WTO에 의해 협정위반의 논란 소지를 주고 있지만 브라질 정부의 의지는 변함이 없다.

<표 9-2> 기술확보를 위한 브라질의 주요 산업정책

정책	대상분야	개요
Inovar-Auto (자동차생산강화 정책)	자동차	-자동차 제조업체 대상으로 자동차분야의 기술혁신과 부품 현지생산 강화를 위해 국산 부품 사용비중 65% 이상 준수시, R&D 투자시, 에너지 효율이 높은 자동차를 생산시에 감세 *WTO 규정 위반 판결로 2017년 12월 폐지
PADIS (IT,반도체 개발지원 프로그램)	반도체	-반도체, 디스플레이 제조업체 대상으로 매출액의 5%를 R&D에 투자시 사회기여세, 공업세, 수출소득세 등 감세 *2016년 WTO 규정 위반 판결로 지속 불확실
Lei da Informatica (정보통신기기 개발지원 프로그램)	컴퓨터 및 주변기기	-마나우스 자유경제특구에 소재한 컴퓨터, 정보통신기기 제조업체가 매출액의 5%를 R&D 투자시 공업세, 유통세 등을 감면해주고 정부 입찰의 참여시 우대
Lei do Bem (IT제품 인센티브)	IT 제품	-IT R&D 업체 대상으로 R&D 경비에 대한 사회기여세, R&D 장비 구입시 공업세, 기술이전시 소득세, 이익금 해외 송금에 대한 감세 등 제공

R&D와 기술협력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기관이나 기업이 보유한 유희.저활용 장비를 브라질에 이전하는 방안이 있다. 브라질은 한국의 R&D 장비를 활용하여 R&D 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 필자가 브라질에 근무하는 동안 연구소, 인큐베이터, 테크노파크 등을 방문해보면 브라질은 아날로그, 한국은 디지털이라는 느낌을 받는다. 심지어 어떤 연구소는 추가 달린 구식 중량계측기를 갖고 있었다. 한국의 장비를 브라질에 이전하면 우리의 기술표준이 전달되어 장비 관련된 부품소재, R&D 서비스의 진출 기회가 확보된다. 한국은 창고에서 놀리고 있는 유희연구자산의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다. 만약 한국의 유희 시험.인증 장비와 운영 경험을 제공한다면 브라질의 시험인증 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고, 선진국 기업들이 장악하고 있는 브라질 시험인증 산업에 한국이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가 확보된다. 전기전자, 조선, 자동차, 화학 등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한국은 시험인증 분야에서도 개도국에 기술과 경험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증이 있다.

한국은 브라질 제조업의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 남미에서 유일하게 제조업을 갖고 있는 브라질은 모든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내수시장의 경쟁이 치열하지 않아서 제품의 치밀성과 소비자 편리성이 떨어진다. 예를 들면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센서식 버튼이 작동되지 않거나 새 차의 와이퍼에서 소리가 난다던가 등 비일비재하다. 반면, 우리는 경쟁이 치열하여 제품이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소비자로부터 외면당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편의성이 우수한 품질 좋은 제품을 끝없이 개발된다. '2016년 제조업 경쟁력 순위'에서 한국은 전 세계 5위이고 브라질은 29위이다.

2) 농업·축산·수산업

농업은 브라질의 최대 산업이자 수출산업이다. 주요 생산품목은 대두, 옥수수, 사탕수수, 쇠고기, 돼지고기, 가금류 등이다. 브라질의 농산물은 생산성과 가격 면에서 경쟁력이 있다. 브라질은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데 근래에도 국영농업연구소인 Embrapa는 하나의 농지에서 대두와 옥수수를 번갈아 연간 2회 수확하고, 이랑 사이에 풀을 심어서 방목되는 소가 뜯어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경작법을 개발했다.

브라질에 온 일본인 이민자들이 브라질의 농업을 혁신했다. 과거 브라질의 농업은 사탕수수, 고무, 커피 등 단일작물의 대규모 재배가 전부였는데, 일본인들이 감, 밤, 딸기 등 농작물 50여 가지와 수경재배, 비닐 덮기 등과 같은 농사기술을 브라질에 소개했다. 일본국제협력기구를 통해 종자 개발에도 상당한 기여를 했다. 오늘날 일본은 브라질에서 생산한 대두를 대량 수입한다. 일본 본토를 제외하고는 가장 많은 160만 명의 일본인이 브라질에 산다. 동양에서 가장 먼저 근대화한 일본이 브라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만으로도 우리는 브라질의 중요성을 다시 인식해야 한다. 일본계 농가들은 농산물 유통시장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일본인은 근면함과 조직력으로 브라질에서 성공했는데 '일본인=신뢰'로 인식된다.

한국의 곡물자급률은 24% 인데 쌀과 서류 (감자, 고구마 등)를 제외하면 3% 밖에 되지 않는다. 보리쌀, 밀, 콩 등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는데 이미 한국은 브라질에서 옥수수과 밀 등을 많이 수입하고 있다. 한국은 브라질에 진출한 다국적 메이저 기업들로부터 농산물을 수입해오고 있는데 브라질에서의 직수입도 확대할만 하다. 한국과 브라질은 계절이 반대인 점을 이용하여 다양한 계절 곡물을 교류할 수 있다. 1960년 한국의 브라질 농업이민은 실패했는데 최근 들어 종교단체가 주도하여 다시 시도되고 있다. 한 종교단체는 상파울루와 북동부 등에 농장을 세워서 밀, 만지오까, 옥수수 등을 생산한다. 또 다른 종교단체는 브라질 중서부에 농장을 건설하여 오렌지, 사탕수수, 아보카도 등을 생산한다.

스마트 팜은 브라질에서 유망한 분야이다. 농토가 넓기 때문에 인공위성, 드론, RFDI 센서 등이 사용되면 생산성이 획기적으로 늘 것이다. 브라질의 스마트 팜은 아직은 초창기이다. 무선 인터넷 인프라가 부족한 것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브라질 농축산협회는 향후 5년 동안 스마트 팜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다. 2010년 한국의 하나마이크론은 브라질의 마토그로수 주에 소에 부착하는 RFDI 칩을 공급하기도 했다. 브라질은 현재까지 스마트 팜의 적절한 파트너를 찾지 못하고 있다.

육식을 주로 하는 브라질도 웰빙 열풍으로 수산물의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 2016년 브라질의 수산물 판매량은 197만 톤으로 2012년 보다 20% 증가했다. 브라질 해안선을 따라 형성된 도시에 수산물 가공공장을 설치하여 살코기는 브라질 내수시장에 공급하고, 나머지는 동물성 사료로 사용하기 위해 어분으로 만들어서 한국으로 반입하는 방안을 검토해볼만하다. 브라질의 낙후지역을 개발하여 소득의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

3) 의료.제약

브라질 저소득층의 열악한 보건환경은 큰 사회문제이다. 비위생적인 환경 때문에 작년에는 지카바이러스, 금년에는 황열병이 유행하고 있다. 정치인들은 인구의 절반에 달하는 9천5백만명의 저소득층 (월 가계소득 US\$420 미만)의 표를 얻기 위해 의료. 제약 분야에 관심이 많고 정책과 재정투입도 상당하다. 대표적인 정책은 PDP (Productive Development Partnership) 이다. 브라질 정부는 민간 제약사가 브라질

국영제약사에 기술을 제공하여 의약품이나 의료장비를 생산하면 최대 10년까지 구매해준다. 2009년 첫 프로젝트를 시작한 이후로 PDP 프로젝트는 2015년까지 총 114건의 프로젝트가 승인되었다. 한국의 젠바디는 2016년 브라질 국영제약사 바이아 파마 (BahiaFarma)에 지카 자가 진단키트 350만 개를 공급했다. 브라질 보건소 앞의 긴 줄은 유명한데 집에서 자가 진단하는 키트는 매우 유용하다. 아마존 등 오지의 섬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을 찾아가 진료하는 병원선은 유용한 수단이다. 한국은 브라질의 마나우스 정부와 협력하여 스마트 병원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2015년부터 시작되어 2019년까지 완료된다. 브라질 측이 배를 제공하고 한국은 배에 장착할 의료 시스템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병원선은 검진, 치료, 건강교육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브라질은 낙후지역에 대한 보건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고 한국은 의료 IT기술을 브라질에 전파하는 효과를 거둘 것이다.

4) 인프라와 신재생에너지

<표 9-3> 브라질과 주요국의 인프라비교*

구분	브라질	중국	인도	러시아	미국	한국
국가면적(km2)	8.5백만	9.6백만	3.3백만	17.1백만	9.1백만	10만
포장도로(천km)	219	1,576	1,569	776	4,375	101
철도(천km)	29	86	64	87	225	9.4
파이프라인(천km)	19	87	35	260	2,225	2.3
수로(천km)	14	110	15	102	41	-

자료: 세계은행(2014).

물류 철도, 항만, 공항, 물류센터 등 인프라 부족은 브라질의 고질적인 문제이다. 화물철도가 부족하여 대부분의 화물이 트럭으로 운반되고 있다. 브라질의 포장도로, 철도, 파이프라인, 수로 등을 주요 대국과 비교해보면 부족한 것이 확연하다. 이에 따라 브라질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인프라 확충을 주요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2016년 취임한 테메르 대통령도 인프라 개선을 위한 투자협력프로그램을 발표했는데 민간합작투자, 민영화, 외국인투자유치 등을 통해서 고속도로, 공항, 항만 터미널, 송전선 등을 개발하는 내용이다. 프로그램의 요지는 외국의 기업들이 기술과 자금을 갖고 투자한 후 운영 수입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것이다. 우리 기업들이 건설 프

* 파이프라인은 에너지, 연료 수송라인이고 수로는 내륙의 하천, 운하, 강 등 선박이 항행 할 수 있도록 정비된 바닷 길 의미

로젝트를 단순히 수주하거나 관련 장비나 원부자재를 공급하는 계약을 따는 것에서 투자의 개념으로 좀 더 전향적인 자세로 대응한다면 기회가 더욱 많아질 것이다.

브라질의 유력 정치인들은 한국의 청계천, 조각장, 대중교통 시스템 등에 큰 관심을 보인다. 작년 한국을 방문한 상파울루 시장도 이들 시설을 둘러보았다. 상파울루에는 Tiete 하천을 따라 강변도로가 있는데 특히 여름에 악취가 진동한다. 수도물에서는 화학품 냄새가 난다. 수처리하는 시급한 분야이다. 한국이 한강과 청계천을 정화시킨 기술과 경험을 브라질에 접목할 수 있다. 외국기업들이 주도하는 신재생에너지 분야도 한국과의 협력 가능분야이다. 작년에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의 신재생에너지에서 등 총 7회에 걸쳐 송·발전 입찰이 시행되었다. 풍력은 이미 오래전에 개발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초기단계인 태양광에 집중하는 것이 좋다. 한국의 한 회사가 태양광 시범단계에 태양광 발전 부품을 공급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5) 케이팝과 축구

브라질의 음악은 전통음악에 새로운 장르를 융합해서 탄생했다. 대표적으로 삼바, 보사노바, MPB 등이 있다. 삼바는 브라질 흑인계 주민의 4분의 2박자 리듬을 가진 춤을 뜻하며, 보사노바는 삼바에 모던재즈의 감각이 가미되어 발달한 음악이다. MPB는 1960년대 후반 군사정권에 저항하는 ‘트로피칼리아’ 문화 운동에서 시작되었으며 고전 형식에 재즈, 록 등의 해외장르를 혼합한 팝 음악이다. 브라질은 대국답게 자신의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한편, 브라질에는 20만명의 케이팝 팬이 있다. 다른 나라의 문화를 흡수해서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는 것이 브라질의 특징인데 케이팝은 브라질에서 점차 확산되고 있어서 새롭게 융합된 음악의 등장도 기대해본다. 스포츠 분야에서는 30명의 브라질 축구선수가 한국의 케이 리그에서 뛰는 등 한국의 유소년들이 브라질 삼바축구를 배우기 위해 브라질에 온다. 상파울루 주 한 외곽도시에 한인교포가 ‘아리랑’이라는 축구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형 삼바축구’의 탄생도 기대해본다.

3. 맺으며

두나라가 동반자가 되기 위해서는 상대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이 전제이다. 우리가 브라질을 노는 것만 좋아하는 삼바와 카니발의 나라로만 인식한다면 교정되어야 한다. 우리가 이러한 인식을 갖게 된 것은 선진국들이 대국 브라질을 견제하기 위해 부

정적으로 묘사한 정보를 그대로 접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과거 우리가 소련, 중국 등을 기아, 핍박, 고문 등과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만 인식했던 것도 서구에서 생산된 정보만을 받아드렸기 때문이다. 편향된 시각은 한국과 브라질의 교류에 방해가 된다. 우리가 덩치 큰 브라질에서 얻을 것이 많은 이상은 애정 어린 시각으로 브라질에 접근해야 한다.

분명 브라질은 기회의 나라이다. 브라질 기업인들을 만나면 그들조차도 브라질이 경쟁이 치열한 한국보다 더 기회가 많지 않느냐고 반문한다. 외국인의 브라질 투자이민의 조건도 다른 나라에 비해 까다롭지 않다. 개인투자의 경우 영주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창출의 의무는 있지만 50만 헤알 (156천불)을 투자하면 된다. 또한 R&D 관련이면 15만 헤알(46천불)로 낮아진다. 법인투자의 경우는 1인당 60만 헤알(187천불)을 투자하면 되고 고용창출 의무는 없다.

기회에도 불구하고 ‘브라질 코스트’ 때문에 브라질 투자를 주저하는 기업들은 발상의 전환을 제안한다. ‘브라질 코스트’는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브라질의 비능률을 말하는데 앞서 언급한 인프라 부족뿐만 아니라 복잡한 노무관리, 관료주의, 과도한 세금, 부패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요소들은 기업에게는 비용인데 사실 이 비용을 원가에 포함시키면 그만이다. 오히려 브라질 코스트를 극복하고 브라질에 기진출한 기업들은 이것이 보호장벽이 된다. 예를 들어 까다로운 브라질의 인증과 비관세장벽 때문에 질 낮고 값싼 중국산 자동차 부품이 브라질에 유입되지 못한다.

브라질에 사는 한인교포 5만명은 두 나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중요한 매개체이다. 교포들은 1960년초부터 브라질에 이민을 왔고 대부분 여성 의류업을 성공적으로 일구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중국, 볼리비아 사람들의 시장진입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교포들은 의류업이나 다른 분야에서 창업을 모색하고 있다. 한인 공동으로 구매·생산·유통을 위한 조합결성도 검토해볼만 하다. 다른 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 여건도 성숙되어있다. 이민역사가 길어지면서 브라질에서 고등교육을 받은 교포 2·3세대들이 배출되고 있는데 정보통신, 보건의료, 화장품, 한류상품 등에서 창업할 수 있다. 브라질에 성공적으로 정착한 이탈리아, 시리아, 레바논, 독일, 일본, 중국계 이민자의 주력산업을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교포들의 사업은 한국의 무역,

투자, 취업, 창업 등과 연계할 수 있다.

많은 외국인투자기업들은 브라질 내수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진출한다. 브라질이 매년 400억-700억불의 외국인투자유치를 받으면서도 브라질의 수출은 1,800억불-2,400억불에 머물러 있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우리는 기존 선진국과는 달리 기술협력 등 한국과 브라질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차별화된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이것이 브라질을 전략적 동반자로 활용하여 우리의 경제영토를 넓히는 길이다.

Abstract

Korea and Brazil as “Strategic Partners”

Lee, Young Sun

Korea and Brazil are fit to become "strategic partners" because they are different. The term "strategy" does not refer to the short term, but to a steady mid to long term process to reach common goals. The word "partner" is used to define a good relationship that involves meeting each other's needs. Therefore, when the two words come together as "strategic partner", it means that the two countries develop common objectives in the mid to long term and fulfill each other's needs. This "strategic partnership" between countries can be created in various areas such as politics, diplomacy, military affairs, security, and in the case of Korea and Brazil, achievements can be made namely in the areas of economy and trade.

It is important for nations of a small territory like Korea to create strategic partnerships with large countries. There are three countries in the world with a territory larger than 4 million km², a population of over 100 million and a GDP exceeding USD 1 trillion: the United States, China and Brazil. Different from other big countries, Korea and Brazil can establish a partnership in the areas of economy and trade without involving international politics and diplomacy. Furthermore, Brazil already stands as the largest economy in Latin America.

Brazil's GDP per capita is at a mark far less than its potential. Brazil is the 69th largest country in the world in terms of income per capita, and should therefore place priority in developing its economy. Korea can be a strong supporter to Brazil by sharing the knowledge and experience gained from its own economic development. Korean companies can contribute their expertise to

enhance competitiveness of Brazil's automobile manufacturing, healthcare, pharmaceuticals, telecommunications, petro-chemicals, renewable energy, and ICT sectors. This type of industrial collaboration should be further fueled by the FTA.

Brazil has what Korea does not. Cultivated land in Brazil makes up a mere 7% of the total land. Agriculture is Brazil's largest export industry, with its main products being soybean, corn, sugar cane, beef, pork, and poultry. Korea has been importing agricultural products from major multinational companies, but it needs to increase direct importation from Brazil. Korea and Brazil can exchange seasonal agricultural products because they have opposite climates. Recently, Korean farmers equipped with advanced technology are resuming the organization of agricultural farms in Brazil. Since Brazil's farmlands are vast, smart farms could dramatically enhance productivity with the help of strong ICT support from Korea.

칠레 신재생에너지 산업동향과 협력 방안

조윤후*

1. 들어가며

올해 3월 칠레에서는 중도 우파 성향의 세바스티안 피네라 (Sebastián Piñera)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경제 성장에 방점을 둔 다양한 정책들이 발표되었다. 법인세 인하, 광업 산업의 다각화, 각종 인프라 프로젝트 확대 등이 있었지만 그 중 신재생에너지 산업과 관련한 내용은 한, 칠레간 경험 구조 다각화를 위한 관점에 특히 주목할만하다.

칠레 에너지위원회에 따르면 칠레의 전력수요는 매년 평균 7% 상승한다고 한다. 이에 반해 칠레는 원유, 석유, 천연가스, 석탄과 같은 화석 연료의 수입의존도가 98%에 달하며 지진에 따른 안전 문제로 원자력 발전 시설 또한 전무하다. 이같은 과도한 에너지 수입 의존도는 칠레 수출의 45%를 차지하고 있는 구리 가격의 경쟁력을 하락시킬 뿐 아니라 각종 제조업** 생산비용과 서비스 단가를 높이고 물가를 높이는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에서 피네라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부터 신재생 에너지 활성화 관련 공약들은 내세웠다. 즉, 칠레내 풍부한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하여 전력단가를 낮춤으로써 각종 생산비용 절감하고 이를 통해 수출 품목들의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질 향상을 꾀하자는 전략인 것이다. 이러한 국정 기조는 국가 에너지 안보 강화 및 에너지 포트폴리오의 다양화 효과와 탄소 배출 절감과 관련한 환경보호 측면에서도 탄력을 받고 있다.

* 現 KOTRA 칠레 산티아고 무역관 근무

** 칠레의 제조업은 국가 전체 산업의 8% 수준으로 그 규모가 매우 작으며 구리, 과일 등 원료 조달이 용이하거나, 고도의 기술을 요하지 않는 단순 가공품 등의 제조가 주를 이루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 칠레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기술력 부족과 자금 조달 문제로 유럽 및 미국계 기업들의 대외 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황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칠레라는 나라의 전반적인 국가 개황을 통해 칠레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현주소와 그 시장의 유망성을 살펴보고 이 가운데 우리 기업들과 협력이 가능한 부분을 탐색하고 향후 진출 전략에 대해서도 논해보고자 한다.

2. 칠레 국가 개황

1) 자연환경

칠레는 서쪽으로는 태평양과 동쪽으로는 안데스산맥과 인접하고 있으며 국토 길이가 4,270Km로 남반구 길이의 42%를 차지할 만큼 세계에서 가장 긴모양의 지형을 가진 국가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칠레는 한 나라안에서 사막기후, 지중해성 기후, 한냉기후 등 지구상의 다양한 기후현상들이 관찰된다. 특히, 칠레 북부의 아타카마 사막은 세계에서 가장 일조량이 많은 곳으로 일 최대 일조량이 제곱미터 당 4,151 KWh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미국의 모하비 사막이나 아프리카 사하라 지역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자연환경은 오늘날 칠레가 데저텍(Desertec)*으로 부상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한편, 칠레는 세계에서 가장 긴 4,000Km가 넘는 해안선을 갖고 있는 나라로 조력과 풍력 발전의 잠재력 또한 매우 크다. 세계풍력협회(이하 GWEC)는 칠레 전국의 풍력자원 잠재력이 총 40GWh 규모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외에도 칠레는 500개가 넘는 화산으로 인한 지열, 풍부한 산림 자원에 기반한 바이오매스와 같은 신재생 에너지 발전에 유리한 천혜의 자연 조건을 가지고 있다.

2) 정치, 경제 동향

칠레는 4년 임기로 중임이 가능한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올해 3월에 취임한 피네라 대통령과 바로 직전 대통령이었던 미셸 바체렛 헤리아 (Michelle Bachelet Jeria) 대통령 모두 중임으로 당선된 대통령이다. 이처럼 칠레가 중임제를 선택한 것은 과거 피노체트(Pinochet) 대통령에 의한 17년 군부독재 체제의 반성과 반복에 대

* 데저텍(Desertec) 프로젝트는 원래 사하라 사막 등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사막에서 유럽 전력수요의 15%를 태양광과 풍력으로 생산하고, 이를 해저 케이블로 지중해를 넘어 유럽에 보낸다는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구상단계에 있는 대평 프로젝트이다. 2010년 이후 칠레 북부 지역에서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 계획이 연이어 발표되면서 칠레가 중남미의 데저텍(Desertec)으로 부상하고 있다.

한 두려움의 결과로 볼 수 있다. 한편, 중도 우파성향의 피네라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다양한 공약들을 내세웠는데 그 중 조세개혁, 교역활성화, 인프라구축 및 광업 다각화는 그의 성장중심 경제정책과 관련된 대표적인 공약들이다.

칠레의 1인당 GDP는 약 US\$1만5천으로 우리나라의 절반에 못미치지만 중남미 국가들 중에서는 가장 높은 소득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남미 유일의 OECD 국가이다. 또한, 올해 3월 미국을 제외한 태평양 연안국 11개국이 참여하는 포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도 서명한 칠레는 전세계 60개국과 22건의 FTA를 체결하여 경제 영토 규모로 세계 1위이다. 또한, 2004년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최초로 한국과 FTA를 발효한 이후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태국과도 FTA를 발효하여 현재 아시아 국가들과의 교역 비중을 전체 수출의 45%까지 확대해왔다. 이는 과거 스페인, 이탈리아, 독일로 대표되는 유럽과 미국 중심의 교역구조에서 탈피한 상당한 변화이다.

<표 10-1> 칠레 국별 수출, 수입 현황 (2017년 기준)

	수출			수입		
	국가	금액(억\$)	점유율(%)	국가	금액(억\$)	점유율(%)
1	중국	179.5	27.2	중국	133.3	22.4
2	미국	96.5	14.6	매국	108.1	18.1
3	일본	57.6	8.7	브라질	56.3	9.4
4	한국	40.7	6.1	아르헨티나	29.0	4.8
5	브라질	38.2	5.8	독일	25.4	4.2
6	인도	17.4	2.6	멕시코	20.2	3.4
7	스페인	16.5	2.5	한국	17.8	3.0
8	페루	16.2	2.4	일본	16.5	2.7
9	네덜란드	15.9	2.4	에콰도르	14.5	2.4
10	캐나다	13.1	2.0	스페인	13.6	2.2

자료: Global Trade Atlas

한편, 광업은 칠레 GDP에서 평균 10%를 차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금융, 수도, 유통, 제조업 등과도 밀접한 상관관계를 맺고 있어 광업 경기가 칠레 산업 전반을 좌우한다고 할 수 있다. 2016년 집계된 기준으로 구리, 요오드, 레늄은 자원 매장량이 세계 1위를 기록하였고 이 중 구리는 전 세계 매장량과 생산량의 약 3분의 1을 칠레 전체수출의 45%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광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것은 중국을 비롯한 개발도상국들의 수요감소로 인한 가격하락과 같은 대외 환경 변화에 따른 경제 리스크가 크다는 점에서 칠레 경제의 약점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밖에 칠레는 남반구 최대 과일 수출국이자 세계 4위 펄프 수출국가로 농업과 임업도 구리산업에

이러 주요 산업으로 꼽힌다.

3) 한, 칠레 교역 현황

칠레는 우리나라와의 교역규모 순위에 있어 멕시코, 브라질에 이어서 중남미 국가 중 3위를 차지한다. 2004년 양국간에 FTA가 발효된 이후 교역양이 평균 4배로 대폭 증가하였으나 교역구조는 상당히 편중된 편이다. 한국의 10대 주요 수출품목의 대부분은 하기 표에서처럼 자동차 관련 상품들이며 수입품목의 대부분은 구리, 펄프 및 과일류와 같은 1차 상품들이다. 이러한 점에서 향후 양국간의 경험 품목 다변화는 중요한 과제로 여겨진다.

<표 10-2> 한국 對 칠레 10대 교역품목 (2016년 기준)

	수출		수입	
	품목(HS코드)	금액(백만\$)	품목(HS코드)	금액(백만\$)
1	승용차(8703)	576	구리와 구리합금(7403)	996
2	화물자동차(8704)	170	동광(2603)	560
3	석유와 역청유(2710)	118	기타 동(7402)	371
4	자동차부품(8708)	68	귀금속(7112)	346
5	승합자동차(8702)	41	펄프(4703)	240
6	축전지(8507)	38	기타 정밀화학원료(2836)	148
7	에틸렌의 중합체(3901)	24	몰리브덴광(2613)	136
8	시멘트(2523)	22	돼지고기(0203)	116
9	타이어(4011)	22	포도(0806)	101
10	기타 구리제품(7419)	20	제재목(4407)	101

자료: KITA 무역통계

한편, 최근 3년동안 우리나라와 칠레간의 무역수지는 지속적으로 적자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와 제조업이 발달되지 않은 칠레의 산업 및 자원구조에 기인한 결과이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양국간의 FTA 재협상을 통해 우리 나라의 백색가전 품목들이 관세 면제 품목으로 지정이 되면 이러한 불균형은 다소 해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농산물 개방과 같은 민감한 문제들이 얽혀 있어 단기간내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진다.

3. 칠레 신재생 에너지 산업 현황

1) 칠레 신재생에너지 산업 개황

칠레에서 ERNC*로 표기되는 신재생에너지는 법률 20,257호 제 225조에 따라 바

* 재생 가능한 비재래형 에너지라는 뜻의 스페인어 Energias Renovables No Convencionales의 약자

이오매스, 소수력(20MWh 이하의 수력발전), 지열, 태양에너지, 풍력, 해양에너지(조력, 파력, 온도차)를 의미한다. 칠레에서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던 시기는 2008년 부터이다. 피네라 대통령 집권 1기 시절에 칠레 정부는 아르헨티나의 천연가스 공급제한 사태와 극심한 가뭄에 따른 수력발전량 감소 사태와 같은 에너지 위기를 겪으며 신재생에너지 촉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 : Renewable Portfolio Standards) 법안을 제정했다.

이 법안의 주요 골자는 2010년부터 200 MWh 이상의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모든 전력기업은 2024년까지 연간 전력생산량의 10%를 자신이 직접 생산 또는 계약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시스템으로 생산된 전력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무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기업은 부족 MWh당 0.4 UTM**의 벌금이 부과되며 3년 이내로 동일 건이 발생할 경우 벌금은 MWh당 0.6 UTM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후 피네라 대통령은 이 법안을 더욱 강화하여 2013년 일명 '20/25 법'을 제정하는데 이 법에 따르면 정부는 2013년 7월 1일 이후 성사된 모든 발전 계약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발전 의무공급비율을 2025년까지 최종 목표치인 20%에 이르도록 강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대한 칠레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와 천혜의 자연환경 덕분에 칠레 신재생에너지 시장은 2009년부터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오고 있다. 2017년 기준 태양광 발전은 2015년까지 칠레의 핵심 발전원이었던 풍력을 제치고 전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의 43.8%를 차지하여 점유율 1위를 차지하였다. 최근 칠레의 신재생에너지 점유율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태양광(43.8%), 풍력(32.3%), 소수력

<표 10-3> 칠레 신재생에너지 운용 동향

(단위: MWh)

	2012	2013	2014	2015	2016
태양열	0	0	0	0	0
태양광	4	7	402	848	1,041
소수력	278	444	350	417	446
지열	0	0	0	0	0
풍력	205	335	836	904	1,029
바이오매스	394	311	466	417	459

자료: 칠레 국가에너지위원회(CNE)

* 이때 대상이 되는 에너지는 2007년 8월 31일 이후로 상용화된 것에 한함.

** UTM은 조세관련 칠레 가상화폐로 1UTM = 47,000 칠레페소로 약 US\$ 75.3 (2018년 5월 기준)

(11.8%), 바이오매스(11.5%), 지열(0.6%) 순이다.

또한, 칠레는 지역별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양상이 매우 다른데 이는 국토 길이가 4,300Km에 이르러 세계에서 가장 길고 폭은 평균 180Km에 불과한 독특한 지형에 따른 다양한 자연환경 때문이다. 북부 사막지대인 안토파가스타, 아타카마, 타라파카 지역에서는 태양광 위주로 개발되고 있고 중북부 코킴보 지역에는 칠레내 대부분의 풍력발전소가 위치하고 있다. 남부 지역에서는 세계 4위의 펄프 생산지와 걸맞게 바이오매스 발전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2) 신재생 에너지 분야별 동향과 유망성

풍력

IPCC*에 따르면 중남미 지역의 풍력자원은 칠레, 페루, 콜롬비아, 아르헨티나에서 가장 풍부한 것으로 평가되는데 이 가운데 칠레는 특히 4,000Km에 이르는 긴 해안선으로 인해 국가 전 지역이 풍력발전엔 매우 적합한 것으로 평가된다. GWEC는 칠레 전국의 풍력자원 잠재력이 총 40GWh 규모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칠레 전체 국토 중 가장 안정적인 풍력자원을 보유한 지역은 중북부에 위치한 코킴보(Coquimbo) 지역이다. 풍력 발전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주요 기업 중에서는 스페인계 발전사인 Endesa와 프랑스, 벨기에계 발전사인 Suez가 대표적이다.

태양에너지

칠레 최남단을 제외한 모든 지역의 일당 일조량은 2,000 KWh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 전 국토에서 태양광 및 태양열 발전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최북단의 안토파가스타 지역의 일조량이 가장 많으며 현재 추진 중인 대부분의 태양광 프로젝트 역시 이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칠레 북부지역 태양광 발전의 장점은 세계 최대 일조량으로 인해서 1일 최대의 전력생산이 가능하다는 점과 칠레 최대 전력수요처인 광업이 밀집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최근 광산기업들의 환경보호 의식 강화와 신정부의 본격적인 화력발전 의존도 축소 의지가 있다는 점이다. 다만 이러한 우수 조건에도 불구하고 칠레에서 태양광은 다른 신재생에너지원보다 초기 투자비용이 비교적 높다는 점이 발전상에 제약으로 작

*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UN)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용하고 있다.

<표 10-4> 칠레 전력생산원별 평균 단위

(단위: US\$/MWh)

바이오매스	지열	수력	소수력	해풍력	육풍력	태양광	조력
30	30.6	32.6	52.3	37.6	62.6	102.6	102

자료: 국제에너지위원회 (IEA)

현재 칠레에서 활동하고 있는 태양광 분야 주요 업체는 스페인계 Solar Pack, Element Power, 미국계 AES 그리고 칠레 업체인 Atacama Solar가 있다.

바이오매스, 지열, 소수력

바이오매스 부문은 칠레의 임업 밀집 지역인 남부의 마울레(Maule) 지역, 바이오비오(Bio-Bio) 지역 그리고 아라우카니아(Araucania)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칠레신재생에너지협회(Acera)에 따르면 칠레 바이오매스 잠재력은 14 GWh로 평가되고 있으며 2020년까지 600 MWh로 발전용량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칠레내 바이오매스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주요기업으로는 세계적인 펄프 및 목재회사인 Arauco, CMPC, Masisa 그리고 미국계 발전 회사인 AES가 있다.

한편, 칠레에는 국가 전력엔 걸쳐 500여개의 활화산 지대가 분포하고 있는 이는 인도네시아에 이어 세계 2위 규모로 집계된다. Acera는 따르면 이들 지역의 지열 에너지를 개발하면 향후 50년간 16,000MWh 규모의 전력발전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칠레 정부 역시 2020년까지 지열 발전 설비용량을 150MWh로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다. 다만, 시추 기술력, 개발 비용, 투자비 회수 기간 등의 문제들이 사업 추진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끝으로 현재 290개의 수로와 댐이 있는 칠레 소수력 발전의 잠재력은 20,000 MWh 수준으로 추정되며 칠레 정부는 2020년까지 800MWh 수준까지 발전량을 확대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 주요 활동 기업으로는 호주계 Pacific Hydro, 칠레계 Colbun, 스페인계 Endesa 등이 있다.

4. 한, 칠레간 신재생에너지 산업 협력 방안

이미 칠레에는 이탈리아의 Enel Green Power, 중국의 Sky Solar, 칠레와 아일랜드

드가 합작으로 만든 Mainstream, 덴마크의 Vestas, 스페인의 Acciona, Iberolica, Solar Pack 같은 세계 주요 전력회사들이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진출하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한화큐셀, 에스에너지, 남부발전 등 우리 나라 기업들도 칠레 신재생에너지 분야 사업에 뛰어들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주요 사업들이 화력발전 분야에 집중되어있기도 하고 시장 점유율 역시 유럽이나 미국계 회사들 보다 현저히 낮다. 그렇다면 아래에서는 우리 기업들의 진출 확대를 위한 전략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겠다.

칠레 전력시장은 1943년부터 민영화 작업이 시작되어 현재는 100% 민간자본으로 운영되고 있다. 민영화 과정에서 유럽과 미국계 회사가 전력시장의 주도권을 잡아오면서 최근 신재생에너지 사업분야 까지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후발 주자인 우리 기업 입장에서 이렇게 이미 고착화 되어있는 시장구조는 큰 진입장벽으로 작용한다. 심지어 주요 프로젝트 발주처들은 기존에 거래해온 업체들만을 대상으로 비공개 초청 입찰을 실시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진입장벽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기업들은 먼저 기존 발주처들과의 네트워크 확대를 통해 신뢰도와 인지도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 다만, 칠레의 로비 법*은 매우 강력하여 공직자들은 자신들의 필요에 의한 만남이 아니라면 공공성이 확보되지 않은 만남 혹은 접대나 선물을 받는 행위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 기업들은 발주처 혹은 관계 부처들과의 면담에서부터 많은 애로를 겪게된다. 따라서 공공성과 우리 기업의 인지도를 보장함으로써 국내 기업과 칠레 관계자들 사이에서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 정부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신재생에너지 분야 시장 개척단이나 관련 박람회의 한국관 구성을 통한 민관 협력 해외 진출 방안은 효과적인 모델이 될 수 있다. 또한, 2015년도에 양국 정상간에 체결된¹⁾한, 칠레 신재생에너지 협력 MOU**와 같은 경제외교를 통한 진출 확대 모델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 2016년도에 발표된 국제투명기구(TI)의 국가 부패인식지수(CPI) 자료에 따르면 칠레는 24위로 중남미에서 1위를 차지했을 뿐 아니라 52위를 차지한 한국보다도 높다.

** 박근혜 대통령은 2015년 4월 22일 미첼 마첼레트 칠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5.6조 원 규모(2018년 기준)로 예상되는 칠레의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시장에 우리기업이 대거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또한, 성공적인 칠레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국내는 물론 국외 파트너사와의 전략적 제휴 및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칠레 공공조달부(Ministerio de Obras Públicas)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칠레 프로젝트 입찰 과정에서 사전적격성심사(PQ-Pre-Qualification)에서 서류 요건 미비로 접수 당일에 탈락하는 컨소시엄들이 상당하다고 한다. 이렇게 불합격한 사례들을 분석해보면 해당 컨소시엄의 리딩 컴퍼니(Leading Company)가 칠레 진출 경험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한다. 이 사례는 우리 기업이 칠레 진출시 언어나 상관습 면에서오는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현지 사업 경험이 풍부한 유럽, 미국계 회사들과의 컨소시엄 구성의 중요성을 역설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와 유사하게 진출 경험이 풍부한 국내 대기업 혹은 에너지 공기업과 우리 중소기업간의 대중소동반성장 모델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끝으로 경쟁력 있는 프로젝트 금융 조달(Project Finance)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기업들은 기존 진출한 기업들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인지도와 진출 경험을 극복하기 위해서 가격 경쟁력, 기술이전, 납기 조기 준수와 같은 자구책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려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전략은 이미 규모의 경제를 달성한 기존 진출 기업과 막대한 자금력으로 저가공세를 펼치는 중국기업과의 경쟁에서 한계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국책은행들의 경쟁력 있는 금융 지원은 우리 기업들이 발주처들을 유인할 수 있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이러한 취지로 2015년 산업은행과 칠레은행(Banco de Chile)간에 '투자 프로젝트 협력 관련 MOU'가 체결되기도 했다. 또한, 2014년 수출입은행은 남부발전과 삼성물산이 합작하여 추진한 '칠레 켈라 가스 복합화력 발전소 건설 및 운영 사업'에 3억 8000천만 달러의 PF금융을 제공하기도 했다.

5. 맺으며

최근 OECD가 발표한 회원국들의 2018년도 1분기 성장률에서 칠레는 4위를 기록하였다. 지난해 역대 최악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한 것과는 매우 대조적인 결과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겠지만 현지 전문가들은 칠레 경제를 좌우하는 구리가격의 반등을 주요 원인으로 분석한다. 이같은 경기 반등은 신정부의 본격적인 성장 중심 정책들로 인해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칠레내 에너지 수

요도 더욱 늘어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재생에너지 의무 할당제를 처음 시행했던 피네라 대통령의 재집권으로 칠레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처럼 유망한 시장 상황에도 불구하고 칠레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력은 부족하고 시장은 일부 중소기업들만이 지배하고 있다. 칠레 내부적으로도 보다 질 좋은 서비스와 품질을 제공할 수 있는 신규 사업자 발굴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칠레 정부는 한국 기업의 우수한 기술력과 신용도를 높이 평가하며 우리 기업들의 투자와 진출을 기다리고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가장 요구되는 것은 지구 반대편에서 한국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시장을 향한 우리 기업들의 적극적이고 도전적인 의지일 것이다.

Abstract

Industry Trend of Chile New Renewal Energy and Cooperation Strategy

Cho, Yoon Hoo

Center-right president Piñera Sebastián elected in March this year announced various policies that emphasized economic growth such as reductions in corporate tax, diversification of mining industries, and expansion of infrastructure projects. Among them, the contents of the new renewable energy industry are particularly noteworthy in terms of diversifying the trade structure of Korea and Chile.

According to the Chilean Energy Commission, electricity demand in Chile is on average 7% per year. Chile, on the other hand, is dependent on imports of fossil fuels such as crude oil, oil, natural gas and coal, and there are no nuclear power plants because of the safety problems caused by the earthquake. This excessive dependence on energy imports is a major reason for not only lowering the competitiveness of copper, which accounts for 45% of Chile's exports, but also raising prices of various manufacturing manufacturing and service prices and raising prices.

For the purpose of improving this situation, President Piñera has made promises to revitalize new renewable energy as pledges since his candidacy. In other words, it is a strategy to reduce the production cost by lowering the electricity cost by utilizing the abundant new and renewable energy source in Chile, thereby securing the price competitiveness of export items and improving the quality of the national economy. Such a national keynote is resilient in terms of strengthening national energy security, diversification of energy portfolio,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effect related to carbon emission reduction.

However, the renewable energy industry in Chile is very dependent on foreign countries because of lack of technology and financing problems. In this article, we will look at the present state of the renewable energy industry in Chile and the prospects of that market through the general overview of the country of Chile, explore the areas where we can cooperate with korean companies, and discuss strategies for future expansion.

Vol. 2 No. 4

발행인 겸 편집인 | 김경원

편집위원(가나다순)

김경원

김대중

배기형

이덕로

이희찬

발행처 | 세종연구원

주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천호대로

132길 15 세종연구원

전화 | 02-499-5765

인쇄일 | 2019년 09월

발행일 | 2019년 09월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 윤리강령 및 잡지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주]케이티에스씨



[주]코빅푸드



KTS KTSC

(주)KTSC(구.한국관광용품센터)는 1972년 관광산업을 활성화 시키고, 무분별한 식자재의 개별 수입으로 인한 외화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주관으로 모든 관광호텔의 공동출자로 설립된 수입 식자재 유통 전문회사입니다.

KTSC가 직수입한 다양한 카테고리의 최고의 프리미엄 식자재를 온라인 쇼핑몰 ekts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전국의 호텔 및 외식업체 공급
육류, 수산물, 가공식품 및 신선 채소를 비롯한 3,000여 종의 다양한 식자재



전국 유통망 구축, 신속한 배송
4,000여명 규모의 KTSC 물류센터와 본사, 전국 지사, 종합물류센터 연결



Total Food System
한 곳에서 구매하여 일괄 배송을 실시하는 One Stop Shopping



“철저한 위생관리, 안전한 제품생산, 체계적인 품질관리와 더불어 국제적인 식품안전 기준인 HACCP을 통해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제품의 공급을 최우선 가치로 추구하고 있습니다.”

국내 육가공 선도적 기업

(주)코빅푸드는 최첨단 생산설비, 선진의 육가공 기술, 체계적인 품질관리, 효율적인 경영시스템 등을 통하여 한국의 축산물 수입, 생산, 유통시장에 있어서 선도적인 위치를 점유해 왔습니다.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에 기여하는 기업

식생활 문화의 발달로 인하여 안전한 식품 및 고품질 위주로 재편되고 있는 한국시장에서 코빅푸드는 한국의 축산물 공급에 있어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고객사는 대형 유통업체, 패밀리 레스토랑, 호텔, 식자재 기업, 홈쇼핑, 온라인 쇼핑몰 등에 양질의 축산물을 공급 하고 있습니다.

Sejong Hotel Seoul...

세종대왕의 높은 성덕과 정신을 실현한다는 창업의지에 따라 명명된 세종호텔은 한국 최초의 순수 민자 호텔로서 1966년 개관 이후 53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적인 감각의 인테리어 객실

세계질 아름다운 남산과 명동의 다운타운을 전경으로 고품스런 비와 모던함이 공존하는 333개의 객실은 아늑한 공간과 최신식 시설로 안락하고 편안한 휴식을 제공합니다.

■ 객실 문의 : 02. 3705. 9115

다양한 메뉴와 최고수준 요리의 레스토랑

계절별 식재료를 사용한 테마별 뷔페와 라이브 키친을 통해 신선한 맛을 즐길 수 있는 한식 뷔페 레스토랑(은하수), 마늘과 조화롭게 어우러진 건강식 이태리인 요리와 커피, 와인을 즐길 수 있는 라운지&다이닝 (베르디)에서 맛의 진미를 느껴실 수 있습니다.

■ 레스토랑 문의 : 02. 3705. 9141 (은하수) / 02. 3705. 9146 (베르디)

53년간의 호텔 운영 노하우를 기반으로 한 컨세션

반세기 동안 호텔 및 식음료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백범기념관, 세종문화회관, 세종대학교 컨벤션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은행, 한전아트센터, 금강원 등 웨딩 케이터링을 통하여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컨벤션 사업, 웨딩 케이터링, 단체 급식 등 식음료 운영 파트너가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주시면 상담을 통하여 최고의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 컨세션 문의 : 02. 3705. 9062



서울특별시 중구 회계로 145 Tel: 02. 773. 6000 www.sejong.co.kr

UNINOMIC REVIEW

VOL.2 No. 4

LATIN MAERICA AND KOREA'S SURVIVAL STRATEGY

Digital Economy in Latin America

Si Eun Yi

21st Century Sustainable vision of Korea and Latin America

Jae Sung KWAK

Economic Reforms of Mexico and Cooperation with Korea

Nam Kwon MUN

Various layers in Central America and Relationship with Korea

Tae Hyuk LEE

Democratic Crisis of Venezuela and Relationship with Korea

Ki Hyun KIM.

Study on Agricultural develop of Columbia & Strengthening agricultural Cooperation in Korea

Kyung Mi CHA

Cooperation study of three countries in Andes and Korea

Cheol Hee KIM

Korea and Brazil as "Strategic Partnership"

Young Sun LEE

Industry Trend of Chile Renewal Energy and Cooperation Strategy

Yoon Hoo CHO



세종연구원